

<http://www.korva.or.kr>

ISSN 2672-040X

안보전략연구

2020.10. (제4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

제4호

본지는 연 2회 발간되는 심사제 학술지입니다.

발행	2020년 10월 8일
발행인	김진호(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편집인	박세현(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장)
편집위원장	문성목(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나태중(충남대학교)
	성형권(영남대학교)
	이성춘(송원대학교)
	장광열(국방대학교)
	최규상(안보경영연구원)
	최윤철(상명대학교)
편집간사	문근형(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발행처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전화 02-499-0201
	팩스 02-417-5527
	이메일 korvass0201@naver.com

ISSN 2672-040X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이며 재향군인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본지에 실린 논문내용은 재향군인회 홈페이지(<http://www.korva.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주한미군 재배치의 전략적 가치 고찰 문근형	1
❖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 김승택	33
❖ 북한 핵 억제전략분석과 대응방안 모색 방호엽	63
❖ 국가안보에 대한 군과 언론의 갈등 형성 배경과 발전 방안 윤원식	89
❖ 한국의 해상교통로(SLOC)의 안전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박상중	115

주한미군 재배치의 전략적 가치 고찰

문근형 *

- I. 서 언
- II. 미군의 군사 변혁과 주요 동북아 국가 동향
- III. 해외주둔 미군 현황과 인도-태평양 전략
- IV. 과거 미군기지와 평택 통합기지 비교
- V. 평택기지의 전략적 가치
- VI. 결 언

*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mhj6442@naver.com

논문요약

한미동맹에 대한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의 많은 희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였고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배경에는 미국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방위비 증액문제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미국의 2001년 9.11테러 이후 진행되어온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에 따라 재개편되면서, 평택기지 시대가 도래하였다. 전세계적으로 미국은 33개국에 해외파병을 하고 있다. 그중 일본, 독일, 한국, 이탈리아, 쿠웨이트는 만명 이상 미군을 유지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최근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급부상과 러시아의 과거 군사대국으로의 회귀 노력, 일본의 군사 대국화 추진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은 힘의 균형에 중심에 있다.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 힘의 균형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은 한미양국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있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이 평가 하고, 한국은 힘의 균형 유지에 미국의 군사력을 활용하면서 양국간 잇점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 통폐합 되는 기지 중 캠프명 유래를 정리하여 붙임자료로 제시하였다. 향후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발전되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한미동맹, 주한미군, 재배치, 안보가치

I. 서 언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는 2017년 12월에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하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겠다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고 있다. 세계 1위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비전일 것이다.

1950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은 유엔군의 선두에 서서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공산화로부터 지켜주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안보상의 관심으로 탄생했다. 전쟁 억지는 동맹의 최우선 목적이다. 미국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압도적인 세계적 선도국가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미동맹으로 인하여 미국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많은 몫을 기여해 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발전에 따라 국가방위에 더 많은 몫을 부담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적·국제적으로 국제사회 요구에 맞게 세계 평화 유지 대열 동참과 국격에 맞는 역할을 요구 받게 되었다.

1991년 이전까지 미국은 「SOFA 제5조」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대부분의 군사시설 건설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였으나, '91년, 미국의 재정 악화와 한국의 경제신장 등을 고려하여,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SMA : 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체결하여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시작하게 되었다. 년도별 방위비 분담금 현황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양국 간 협정과정을 거쳐 책정되었다.

<표 1> 방위비 분담금

연도	'91	'93	'95	'97	'99	'01	'03	'04
분담금 규모(\$)	1.5억	2.2억	3.0억	3.63억	3.39억	4.44억	5.57억	6.16억
연도	'05	'07	'09	'11	'13	'15	'17	'19
분담금 규모(₩)	6,804억	7,255억	7,600억	8,125억	8,695억	9,320억	9,507억	1조 389억

* 출처 : 김승택, “방위비 분담 갈등을 통해 본 한미동맹 발전 방안”, 『안보전략연구 3호』 (서울: 재향군인회, 2020), p. 41.

시대변화와 함께 1990년대 냉전체제가 종식된 후에도 한국과 미국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맹관계를 지속해 오면서, 1991년 제1차 SMA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통해 1조 389억 원을 한국에서 부담하였고 2020년에 제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추진 중이다. 2020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문제는 미국이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의 5배 증액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2019년 9월 1차 방위비 협상을 시작으로, 양국을 번갈아 가면서 2020년 3월 미국 LA에서 개최된 7차 방위비 협상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을 걸어왔으나, 7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국 주한미군 부대근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Notice of Final Decision to Furlough)’가 전달되어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지원 한국인 직원들의 상당수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이후 한국정부에서 우선 방위비 협상 타결까지 한시적 인건비를 지급키로 하고 미국에서도 이에 합의하여 급한사태는 막았으나, 협상 진전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주한미군 주둔경비 협상으로 인해 굳건한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방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동북아 지역 힘의 세력균형 유지에 가장 핵심적인 지역임을 고려한다면 전략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으로 금액으로 산출할 수 없는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가치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에 대해 살펴보면서 주한 미군배치의 역할과 가치를 비교해 보았다. 본연구는 각종 국내·외 단행본, 논문과 도서, 인터넷과 보도자료 등 문헌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하면서 많은 곳에 분산되어 있던 미군기지가 평택기지로 통합되는 과정과 과거 미군기지들의 역사적 자료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기지의 명칭 유래도 살펴보았다. 이 논문을 통하여 주한미군의 가치를 다시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더욱 지속되어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더욱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II. 미군의 군사 변혁과 주요 동북아 국가 동향

1. 미국의 군사 변혁과 트럼프 행정부 국방정책

미국은 과거 냉전시기 군에서 21세기를 선도하는 최첨단 군으로 변모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군사전략의 산역사인 앤드루 마셜¹⁾의 군사혁신 방향은 첨단과학무기 개발과, 최첨단 과학기술에 새로운 작전개념, 군사조직이 결합하는 방향으로, 첨단무기·신작전·신조직으로 미군의 전투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2001년 9.11테러를 경험한 미국은 본토방위와 해외주둔 미군의 융통성 있는 활용에 중점을 두고 미군의 변혁을 가속화 하였다.²⁾ 미국은 21세기에도 대규모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비대칭 전략 및 소규모 테러 등 모든 전쟁·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변혁 방향에 국민적 공감을 가져왔다.

미군은 새로운 무기체계와 전술 및 통신 기술의 발달 영향으로 함대와 전투기, 병력의 수를 중심으로 한 개념에서 벗어나 '첨단 기동군'으로 변모하여, '더 가볍고 빠르며 전투력이 향상된 군대'로 변모방향을 정하였다. 미국의 군사변혁의 목표는 네트워크 중심전, 효과중심작전을 발전시키는 것이다.³⁾ 첨단무기 개발과 함께 적의 핵심부와 후방, 측면 등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작전개념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미군 군사구조도 신속전개군 형태로 변화하여 스트라이커여단이 등장하였다. 스트라이커여단은 세계 어느 곳이든지 96시간 안에 투입이 가능할 정도로 경량화와 신속투사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모든 작전에서 압도적인 우위와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육·해·공·해병의 합동화를 추진하고, 정규군과 특수군 및 CIA와의 결합을 도모하면서 핵전력과 통상전력의 통합적 운용을 위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였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초기에 보여준 군사변환의 모습을 통해 변혁방향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였다.

1) 8명의 대통령과 13명의 국방장관에게 안보전략을 조언한 미국 국방부의 싱크탱크인 총괄평가국의 국장으로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의 군사전략을 막후에서 설계했다고 평가받는 전설적인 전략가. 2015년 93세의 나이로 현직에서 물러남.

2) 김영승, “한미관계와 주한미군: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그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권 2호, 2015. pp.9-13

3) 서금석, “미국의 신 군사전략과 한미동맹”,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2007, p.29.

이와 같은 변혁방향은 미국 정책추진과 연결되어 있다. 많은 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그 정권에서 추구하는 기본문서가 발간되고 이를 근거로 각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이 발전되듯이, 미국에서도 정책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국가안보전략(NSS : Notional Security Strategy f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 발간되고 이를 근거로 각종 전략문서가 발전되어 간다.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와 함께 미국의 안보정책의 기초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로, 4년마다 발간되는 국방정책에 대한 보고서인 국방태세 검토 보고서(QDR : Quadrennial Defense Review)와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 : Nuclear Posture Review)가 있다.⁴⁾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2018년 2월 국방전략(NDS : National Defense Strategy)을 발표했다. 의회에 의해 위임된 국방전략(NDS)은 4년마다 실시되는 국방태세 검토보고서를 대체한 것이다.⁵⁾ NDS는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매티스 장관이 공개한 문건은 미 국방부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광범위한 전략지침문서를 분류하지 않은 요약본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표 2>는 미국 정책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주요 문서목록이다. 국방부에서 작성하는 문서는 미 의회의 질의에 답변을 하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친다. 미국의 국방정책은 미본토의 안전을 확보한 후, 경쟁국의 세력확장을 저지하고 불량국가들을 굴복시켜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세계질서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⁶⁾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주요전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선택하였고, 주요 상대국으로 중국을, 북핵 문제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은 미 태평양사령부 작전영역과 인도의 역할이 중시됨에 따라 2018년 5월 20일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하였다.

4) 김태우,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18.1.31”, <https://www.rfa.org/korean/commentary> (검색일 : 2020.4.24)

5) Karlin, Mara, "How to read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www.brookings.edu/blog/order(검색일 : 2020.4/24)

6) 안기현,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 「국가안보전략」으로부터 「인도-태평양 전략」 까지, 『THE ASAN INSTITUTE for POLYCY STUDES』 2019. 10. 21, p. 2.

<표 2>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 관련 문서 목록

발간 순서	제 목	발간시기	발행처/ 보고대상
1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17년 12월	백악관/의회
2	4개년 주기 국방검토 보고서	미발간	국방부/의회
3	국가방위전략 보고서	18년 1월	국방부/의회
4	핵태세 검토 보고서	18년 2월	국방부/의회
5	국방우주구성전력 조직 및 관리 최종보고서	18년 8월	국방부/의회
6	중국 군사 및 안보관련 연간보고서	18년 8월	국방부/의회
7	미사일 방어보고서	19년 1월	국방부/·
8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19년 6월	국방부/·

* 안기현,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 『국가안보전략』 으로부터 『인도-태평양 전략』 까지,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9. 10, p. 2.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는 미 행정부의 국제정세 인식과 미국이 추구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기존질서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규정하고, 국방정책의 ‘논리의 원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⁷⁾ 이를 근거로 한 국가방위전략 보고서는 구체화된 군사력 운용을 위한 국방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보고서를 통해서도 군비경쟁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우주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문서들은 정책방향과 전략, 국방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2019년 6월에는 미국의 패권 유지를 통해 국가이익을 보호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미국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에 대하여 제시하면서 이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동맹국 및 국가들과 군사활동을 같이 하겠다는 군사력 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일본, 한국, 호주, 인도 등의 국가에게

7) 안기현(2019), p. 1.

더 많은 군사력을 제공하고 더 많은 국방예산을 지출하게 하며, 미국 무기를 구매하게 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국가 관계 개관은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3> 미국의 동북아 국가 관계 개관⁸⁾

대상국	관계
중국	- 패권 경쟁국, 갈등과 협력의 대상 - 무역갈등 심화 - 양안관계 미해결, 수시 대립 격화 - 안보문제 이견 심화
러시아	- 미소 냉전의 유산 작용 - 중러 브로밴스 상황 견제
일본	- 미일동맹 기초 하 안보협력 강화 - 일본의 보통국가와 전략적 지원 - 북핵제재 및 대중러 견제 공조
한반도 (남북한)	- 진영 대립의 완충지대 활용 - 북핵제재 및 군사적 억제 - 한미동맹 하 지역 및 한반도 군사력 유지 - 對중러 견제 공조

2. 동북아 주요국가 동향

통상적으로 현대에 와서는 강대국의 기준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강대국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아직 군사력의 비중이 좀 더 큰 것으로 보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강들은 군사력 증강에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한 군사력 수준을 보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기준은 50개 이상 개별요인을 활용하여 군사력, 재정력, 병참 능력, 지리 등 다양한 범주를 가진 특정 국가의 파워인덱스(PwrIndex) 점수를

8) 이현수, “한반도 안보의 체제 및 지역 차원의 영향 요인 연구”, 대전대 박사학위 논문, 2019. p. 53.

결정하여 군사력을 결정하고 있으며, 핵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표 4> 세계국가 군사력 순위

순위. 국가	6. 대한민국	12. 이태리	18. 이스라엘	24. 캐나다
1. 미국	7. 프랑스	13. 독일	19. 호주	25. 북한
2. 러시아	8. 영국	14. 이란	20. 스페인	26. 대만
3. 중국	9. 이집트	15. 파키스탄	21. 폴란드	27. 우크라이
4. 인도	10. 브라질	16. 인도네시아	22. 베트남	28. 알제리아
5. 일본	11. 터키	17. 사우디	23. 태국	29. 남아공

* 출처 : <https://www.globalfirepower.com/>(2020. 5. 15검색)

먼저 러시아는 1987년 당시에 소련군으로 총 병력 500만 명과, 재래식 무기를 포함하여 군사력이 소련 붕괴 전까지 군사력 1위 국가였다. 그 후 2010년 중국이 세계 군사력 2위로 상승하였으나 러시아가 2011년 이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아직 안정적이지 않아 동북아 세력균형을 결정할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군사력은 동북아 안보유지에 여전히 위협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을 표명하면서 ‘강한 러시아의 재건’을 꿈꾸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외교 전략의 중심을 유럽으로부터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유럽지역에서 전략이 한계에 이르러 새로운 돌파구로 동북아를 선택하여 북방대륙과 남방해양을 연결하는 협력체제를 형성하려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경제적 성공과 함께 세력구도가 변화하면서 협력과 충돌을 반복하는 관계가 되었다.⁹⁾ 중국의 1970년대 이전 마오쩌둥 대외정책은 소련과의 전쟁을 막기위한 동맹정책이었다. 소련 붕괴 이후에는 기존의 군사적 위협보다 정치, 경제, 사회적 위협에 중점을 둔 안보정책 기조를 가지게 되었다. 헌법상 중국의 군대는 국가의

9) 이현수(2019), p. 65.

군대가 아닌 당의 군대로 ‘중국군’이 아닌 ‘중국 인민해방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징병제였으나, 현재는 모병제로 운용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군사력 순위 2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국제정세에 따라 변화하나, 중국의 국가전략과 목표 및 대외정책 기조는 세월이 흘러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중국의 지속적인 국력 신장은 1978년 덩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과 함께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대외정책은 독립자주외교노선 강화, 반패권주의 원칙 유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외부세력과 충돌을 피하고, 종합국력에 매진하면서,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도광양회(韜光養晦)’가 외교책략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국력신장은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은 국제체계가 다극화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자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에 참여하였다. ‘6.4 천안문사건’ 이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였다.

시진핑 집권 시기 중국은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며, ‘소강사회(小康社會)’¹⁰⁾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중국 소강사회를 완성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경제발전은 중국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출범하자마자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왔고, 중국인들이 애국 열정과 민족 자부심으로 세계 문명 건설에 크게 공헌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을 향한 시진핑의 기본 국가발전전략은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한다는 것에서 절정에 이른다. 시진핑은 ‘중국의 꿈’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대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중산계층의 평균 소득을 국제적 표준에 이르게 하는 전면적 소강사회를 완성하고, 신중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국가’를 건설하는 ‘두 개의 백년’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지역 패권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며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0) 보통사람도 부유하게 사는 사회, 79년 덩소평이 용어 사용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당시 항복의 조건으로 제국군을 해체시켰다.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가지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으나 최근 일본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차기 항공모함 2척을 건조 하는 등, 적극적인 군사적 참여로 동북아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집단자위권 확보 전략을 이용하여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면서 경제 중심 해양정책에서 안전보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견제라는 취지에서 정비되기 시작한 일본의 자위대가 지속적인 권한확대 및 강화에 따라 '신군국주의'의 우려가 없지 않다..

3. 미국의 군사 전략 분석

미국은 위협요소의 다변화로 과거 군사력 문제보다는 인종, 종교, 사회, 경제적 상황, 환경문제 등 새로운 적의 개념과 위협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정밀유도탄, C4ISR¹¹⁾의 개발 등 과거 상상속에서 그려왔던 미래전장의 모습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군사변환은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응하면서 세계질서를 주도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군사혁신 개념을 바탕으로 군사변환 중이다.

군사변환의 범주에는 크게 세가지로 싸우는 방법에 대한 변환, 업무방법에 대한 변환, 부처 간 및 동맹국 간 협력방법의 변환이 있다.¹²⁾ 미국은 군사변환 전략을 통하여 신속작전능력을 수행하도록 변화하고 있어 적절한 위치에 미군을 신속하게 파견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기동성 있는 경량화된 군사력의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있다. 미래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및 효과기반작전을 수행하는 전략에 집중하면서, 신속결정적작전을 위해 해·공군 우위, 정밀유도탄, C4ISR 등의 첨단기술 접목을 통한 적의 의지와 능력을 조기에 식별하고 작전목표를 신속하게 달성을 추진 중이다.¹³⁾ 현재 미국은 중국의 급부상

11)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및 정찰)

12) U.S. Department of Defense, Transforming Planning Guidance, 2003, pp.6-8.

13) 이지은, “미국 군사변환의 변화”, 숙명대 석사학위논문, 2009, p. 20.

에 대비하여 새로운 제3차 상쇄전략, JAM-GC¹⁴⁾(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Global Commons), MDO¹⁵⁾(Multi-Domain Operations) 등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Ⅲ. 해외주둔 미군 현황과 인도-태평양 전략

1.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역사와 해외 주둔 미군 현황

주한 미군의 역사는 1882년 5월 ‘조·미 평화수호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을 체결로 시작되었다. 1888년 4명의 통역장교 군사고문단 파견을 시작으로 하여 1945년 9월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한 미군의 주둔이 본격화 되었다가 미군 철수 후 맞게된¹⁶⁾ 1950년 6.25전쟁은 양국의 안보와 외교정책의 동맹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적인 참전을 결의후 7월 1일, 미 제24사단 소속 1개 대대를 시작으로 참전하여 1953년 최대 32만 5천여 명의 병력이 참전하였다. 6.25전쟁 종전과 함께 미군철수를 걱정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수호방위조약 체결로 미국의 확고한 보장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해외주둔은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세계의 군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가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은 부시 행정부 집권 이후 이루어졌으며, 이는 유사시 언제 어디서든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유사시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투입 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¹⁷⁾ 이로서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를 적용한 합동기동군 개념의 여단 중심형 군 구조로 재편하였다. 즉, 국지적으로는 냉전시기의 영토, 자

14) 2012년에 나온 합동작전접근개념인 JOAC(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의 핵심개념인 교차영역 시너지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운영개념.

15) 다영역작전(MDO)은 합동작전접근개념(JOAC)의 기본 개념을 근간으로 미래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진화된 작전 개념들을 제시한 것.

16) 이영빈, “주한미군 재배치와 역할변화”,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5, p. 20.

17) 송윤목,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 논문, 2008, p.1.

원, 종교, 환경, 민족문제 등으로 분쟁이 일어나던 것이 이후에는 국제 안보질서 유지를 위해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안보인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에너지·환경·보건 등의 안보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주요 국가 간의 공조를 통한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정책협조와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은 중요하다. 한국뿐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주한미군으로 인한 힘의 균형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 세력균형이 파괴된다면 지역내의 군비경쟁은 더욱 가속화되어 갈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미군 주둔은 미국 도전세력 억제와 아시아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¹⁸⁾ 동북아에서는 해상교통로 확보, 러시아의 위협부상 방지, 중국의 군사위협 억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진 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전진배치 되어 있는 미군은 본토로부터 원거리 투입되는 어려움과 비용을 줄여준다. 전진배치는 다자간 안보에 신뢰를 제공해 주고, 동맹국 이익수호, 적대국 견제, 유사시 신속대응을 가능하게 해주는 등 지역안보에 안정을 기여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과 일본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동아시아 국가이익 수호에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미국은 일본, 그레나다, 괌, 푸에르토리코,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미국령 사모아, 웨이크 섬, 노바사 섬 등 군인이 없는 나라들에 대하여 방위 의무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 독일 등에 해당국가의 군대가 있지만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러 나라에 파견되어 해당국가의 방위를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

미군은 그린란드에서 독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한민국, 일본, 사우디까지 많은 나라와 영토에 군기지와 군기지권을 갖고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전세계를 무대로 매년 미군이 참여하는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리아에 특수부대를 파병 및 니제르와 카메룬에 군대를 파병하고 있으며, 노르웨이가 러시아의 견제를 위해서 미군 300명이 넘는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은 미 본토에 약 115만 명의 병력을

18) 김승연, “주한미군 재배치와 새로운 한·미 동맹관계의 모색”,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2005, p. 29.

유지하면서, 해외에 주둔시키고 있는 미군의 수는 약 17만 명에 이른다.

전세계적으로 미국은 33개국에 적게는 100여 명 이상 해외파병을 하고 있으며, 1만 명 이상인 국가로는 일본, 독일, 한국, 이탈리아, 쿠웨이트 순이다. 이들 5개국은 미국 입장에서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유사시 군사력을 신속히 전개할 필요가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표 5> 미군의 해외 주둔 현황¹⁹⁾

구분	주둔국	병력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중부/ 아프리카 사령부	아프가니스탄	5,500				
	쿠웨이트	11,313	9,522	28	172	1,591
	바레인	3,369	21	3,148	177	23
	니제르	800				
	카타르	607	357	6	-	243
	이집트	264	223	22	-	82
	사우디	319	215	22	-	82
	아랍에미리트	349	23	16	218	92
	남아공	207	3	1	200	3
	디에고 가르시아	488	-	448	-	40
인도·태평양 사령부	대한민국	28,487	20,000	331	136	8,020
	일본	52,060	2,445	22,108	15,688	11,819
	호주	187	36	78	12	61
	싱가포르	186	10	158	2	16
	태국	282	38	10	207	27
유럽 사령부	독일	38,015	23,269	508	955	13,283
	이탈리아	11,799	4,315	3,638	19	3,827
	영국	8,920	191	266	19	8,444
	스페인	2,503	26	2,046	26	405
	터키	1,529	120	5	2	1,402
	벨기에	1,210	677	111	8	414
	포르투갈	457	1	52	7	397
	네덜란드	362	130	30	5	197
	그리스	373	8	343	-	22
남부/북부 사령부	관타나모	693	146	525	22	0
	온두라스	381	223	3	-	155
	그린란드	144	-	-	-	144
	캐나다	131	8	38	1	84

19) 나무위키(<https://namu.wiki>), ‘검색어 : 해외주둔미군’,(검색일 2020. 6. 18)

2.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현 미국정부의 대외전략은 ‘인도-태평양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문서에서 중국에 대한 평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된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은 현대화된 군사력과 강력한 경제력을 활용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지역패권을 차지하려 한다고 보았다.²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군사력 운용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갖춘 전승을 보장하는 군사력(Prepared and Combat Credible Military Forces)’을 전진배치하고 동맹국들의 군사력과 함께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위해 훈련과 장비의 수준유지, 지속적인 군수 및 조달 개념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군사동맹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반으로 보고, ‘상호운용성의 확대’와 ‘안보부담의 공유’를 제시하였다.²¹⁾ 공동의 위협에 대한 공평한 책임을 통해 안보비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서를 통하여 일본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모퉁이돌(Conner stone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로 보고 있으며, 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비너장(Linchpin of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으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²²⁾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해외 배치된 미국 군사력으로 군사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을 가장 중요한 안보 관련 파트너 국가로 인식하고,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활용하여 동북아, 인도양, 태평양 등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을 말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여러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동맹국과 협력국들간의 방위비와 각 국 군사력 규모를 증가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 안보목표는 미국 본토의 안전이다. 그 다음으로 미국이 중요시 하는 것은, 중국의 세력확장 견제로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중심의 세력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20) 안기현(2019), p. 7.

21) US Department of Defense, 2019, "4.2. Line of Effort 2 : Partnerships", in4. Sustaining U.S. Influence to Achieve Regional Objectives, p. 21.

22)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s.co.kr>), "싱크탱크로부터 듣는다. '한미동맹의 미래, 미 인도-태평양 전략에 달렸다.' 2019. 11. 21자"(검색일 : 2020. 5. 14)

IV. 과거 미군기지과 평택 통합기지 비교

1. 기지 통합 이전 주한미군기지 역사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찾아온 한국의 광복과 함께 알타회담의 결정에 따라 미국 군대가 한국에 주둔하게 되었다. 9월 4일에 하지(John Reed Hodge) 중장의 제 24군단 소속 미군 제7사단 선발대가 1진으로 김포공항에 도착 후 9월 12일에는 하지 중장이 아놀드 소장을 군정 장관에 임명하였다. 9월 25일 미 제 40사단 주력부대가 부산에 도착하면서 11월 말까지 계속 남한에 상륙하였다. 45년 11월 말에는 미군 약 7만 명이 주둔하였고, 1946년에는 85,000명이 주둔하는 미군임시기지들이 지어지면서 미군주둔이 시작되었다.²³⁾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미 군정체제가 끝남에 따라 미군병력은 점차 철수하고 1949년에는 군사고문단 500명만 남긴 채 미군이 철수하였다.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거치면서 미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에 군대를 파견하여, 비행장과 임시 주둔지를 건설하면서 6.25전쟁 중 3개 군단, 8개 사단을 투입하며 전쟁에 참가하였다. 미군 전사자는 약 3만 6천명에 달하는 피로 맺은 혈맹이 시작된 것이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2년간 미군 병력들은 텐트로 된 임시캠프에서 지내다가, 1965년 임시막사가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영구시설인 캠프 건설이 가장 활발한 시기는 1980년대 중반이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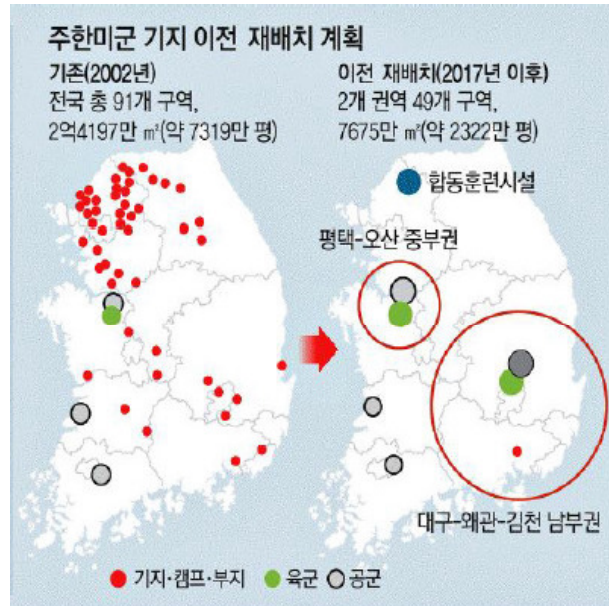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기지는 23개 기지와 주둔지역을 포함하여 산재되어 있었으며, 여기에는 훈련장을 포함한 육군 기지가 80여개, 미공군기지 19개, 미해군기지 2개로 이는 2003년 미 국방부가 발표하는 군사기지 체계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²⁵⁾ <그림 1>은 평택기지로 산재되어 있는 기지를 통폐합하기 전과 후의 계획을 나타낸 것이다.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배치되었던 미군기지가 그림처럼 단순화 되었다.

23) 김유근, 「주한미군기지 이전 백서」, 2018. 12, pp. 102-103

24) 김유근(2018), p. 50.

25) 송윤목,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08. p. 40,

<그림 1> 주한미군기지 이전/이후 재배치 계획



출처 : 김용찬,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의 기록관리기준표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19.2, p. 100.

기지현황을 살펴보면 미군은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명칭을 전투공적이 뛰어났던 장병의 이름을 이용하여 캠프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붙임 자료에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주한미군기지 현황을 정리하였다.²⁶⁾

2. 평택 기지 가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2003년 4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 간 합의 이후 그동안 91개 구역 약 2억 4,197만m²에 산재되어 있던 낡은 시설이 평택·오산의 중부권과 대구·왜관·김천의 남부권 등 2개 권역으로 재배치하게 되었다. 기지는 80개소를 반환하며, 그중 15개소는

26) 자료를 확인하면서 정부의 미군기지 관련 각종 문서에 기지 개수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료가 비공개 혹은 비밀로 분류되어 있기에 정확한 자료 획득에 제한되었다.

군에서 활용²⁷⁾하고 나머지를 처분하고 있어 반환이 완료되었거나 반환 진행과정 중에 있다. 이후에는 2개 권역 47개 구역에서 최종적으로는 17개만 운영될 예정이다.²⁸⁾

평택기지는 2만 8천 여명의 주한미군 장병들의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총 비용 16조원을 들여 기지를 조성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90% 이상을 부담하였다. 평택기지는 미 육군 해외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 기지로, 여의도의 5배인 14,677 km²의 면적에 미군, 군무원 등 종사자 등을 평시 4만 3천 명, 최대 8만 5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기지에는 학교, 상점, 은행, 운동장 등 미군과 가족의 생활을 위한 시설도 포함되어 있다.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 체계를 포함한 첨단 군사 인프라를 갖춰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주한미군 지휘관들이 '크라운 주얼'(crown jewel)로 부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지이전은 2006년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이 창설되면서 추진되어, 2017년 7월에 미육군 제8군사령부가 이전하였으며, 2018년 6월 29일에 용산에 위치한 주한미군사령부가 73년 만에 이전하였다. 대부분의 부대가 이전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2022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2017년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시 '캠프 험프리스'를 미국 대통령으로 첫 공식방문하면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확인하였고, 기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용산 미군기지과 미 제2사단의 평택 이전이 완료되면 주한미군기지는 주한 미군부대 운용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국토의 균형된 발전과 국민들의 불편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국내 미군 기지는 평택·오산의 중부권 '작전 허브'와 대구·왜관·김천의 남부권 '군수 허브'로 재편된다. 또한 평택기지와 공군이 있는 오산기지는 일본의 오키나와 및 괌 기지와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 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미군의 허브(hub)기지가 될 것이다.

27) 김유근(2018), p. 97.

28) 김승연(2005), p. 54.

주한 미군은 미국 육군의 비중이 훨씬 크고, 유사시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투입되는 증원전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약 69만 명, 함정 약 160 척, 항공기 약 2,000 대의 규모이다. 전시에 미국 육군은 8군 이하의 현 제2 보병사단 외에도 4개 사단이 추가로 증원되며, 미 제7 함대와 미 제7 공군이 지원된다. 미 제8 군 제2 보병사단은 여단전투단 5개가 사단 1개로 편성되며, 사단 5개가 미 제8 군을 구성하는 5각 편제를 따르고 있다. 현재 한반도 내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육군은 제2 보병사단 뿐이지만, 평택 육·해·공 통합기지가 완공되면서 유사시에 증원되는 4개 사단이 이곳으로 전개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평택기지는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지었다는 차원을 떠나 주한미군의 효율성 향상과 전투력 강화라는 결과를 동반하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안전보장에 긍정적 영향뿐 아니라 한국의 민족적 자긍심 회복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의 균형적 발전 등 그 가치가 돋보이고 있다.

V. 평택기지의 전략적 가치

1. 미국의 해외 주둔 전략

냉전해체 이후 비대칭 위협의 증대에 따라 새로운 위협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위협 중에 동북아에서의 북핵 문제는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도전요소이다. 북한의 불변 전략은 주한미군철수 등을 실현하고 남한의 적화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군대로 자리매김하면서 공산주의 침략을 봉쇄하기 위해 한국의 안보를 책임져 왔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관계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GPR)은 부시 행정부 집권 이후 이루어졌으며, 이는 테러집단이나 불량국가 등으로부터 동맹국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허브기지에서 병력을 신속히 기동하는 신속기동군으로 유사시 언제 어디서든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군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미국은 현대전에 첨단전자장비, 공군력, 정보자산, 심리전 등이 전쟁승패의 요인으로 보고 미군을 가볍고, 빠르게 만들면서 ‘합동성’과 ‘속도’에 주력하

는 전 세계 미군 재배치를 추진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변화의 배경에는 첨단정밀무기의 영향이 크다. 1991년 걸프 전에는 7.7%를 차지하던 정밀무기가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는 70%에 달하면서 전쟁양상은 최첨단 ‘네트워크 전쟁’이 된 것이다.²⁹⁾ 군사변환 방향은 미군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획기적인 군사력의 변환을 구체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무기체계의 변화가 미국의 해외 주둔기지 재배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표 6> 기능별 미군 기지 분류

구 분	운영 개념	비 고
전략기지 (Strategic Bases)	미군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유지하면서 상주하는 기지	미 본토, 괌, 영국, 일본, 한국, 독일
전진작전기지 (FOB)	작전수행에 필요한 탄약과 장비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미군이 상주하는 기지	필리핀,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프가니스탄, 터기,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호주
전진작전지역 (FOL)	미군이 상주하는 대신 1-2년에 한번씩 군사훈련을 실시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지부티, 케냐, 말리

출처 : 김승연, “주한미군 재배치와 새로운 한·미 동맹관계의 모색”,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2005, p. 35. 요약.

신속기동군과 최첨단 무기를 중심으로 미국방부는 해외 주둔기지를 전략기지(Strategic Bases, 혹은 중추기지 Hubs), 전진작전기지(FOB, Forward Operating Bases), 전진작전지역(FOL, Forward Operating Locations)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이다.³⁰⁾ <표 6>에서처럼 한국은 전략기

29) 김승연(2005), p. 34.

30) 김승연(2005), p. 35.

지로 동북아지역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주한 미군의 가치 평가

주한미군의 영향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다. 6.25전쟁의 영향으로 수많은 전사상자들과 함께 약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과 10여만 명이 넘는 전쟁고아를 만들었으며 1천여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을 만들었다. 그리고, 45%에 이르는 공업 시설이 파괴되어 경제적, 사회적 암흑기와 80%의 산업시설과 공공시설과 교통시설이 파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어 도저히 회생의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 무상원조 약 44억 달러, 유상원조 약 4억 달러는 한국 경제의 투자재원 마련, 국제수지 적자보전 및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의 원조는 그 당시 가난했던 한국 정부예산에 큰 도움이 되어 한국 경제부흥에 가장 큰 기여를 해주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방력은 세계 6위에 이르러 있어,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배경에는 주한미군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군사력과 함께 경제력 등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주한미군이 존재하여 안보분야를 미국에 의지하면서 경제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선진국 대열에 빨리 들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급부상과 러시아의 과거 군사대국으로의 회귀 노력, 일본의 군사 대국화 추진 등으로 한반도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잃게 된다면 힘의 균형은 유지되기 어렵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 대한 견제를 위해 한반도의 안정은 양국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지역안보동맹’으로 전환하여 지역내의 패권경쟁을 억제하고 군비경쟁을 저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현대전 양상의 변화와 함께 전술개념은 전장 거리는 제약요소가 아니다. 미군은 기동력을 갖춘 부대로 변화를 추진하였고, 해·공군 등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유사시 전투력을 투사하고 위협요소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의 첨단화로 단기적 화력 집중으로 장기적 소모적인 전쟁이 아닌 단기전으로 과거의 형태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첨단장비로 무장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화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 미국과 중국의 양강구도의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줄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평택기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평택기지는 한국과 미국 어느 한편의 이익에 치중함 없이 한미 양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데 주춧돌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아닌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미국은 현재 전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물론 중국의 추격으로 군사력과 경제력 등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미국은 부동의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이 있었기에 현재의 국방력을 유지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실 속에서 한국이 믿고 의지할 곳은 미국이다.

3. 평택기지 가치 평가

오늘날의 세계는 복잡, 다양한 국가질서가 존재하고 있다. 민족중심으로 생활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다국적인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속에 스며들고 있으면서 세계인이 서로 어울리면서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글로벌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의 한 가운데 주한미군기지가 있으면서 지역안정화를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 뿐 아니라 세계가 서로 상생하는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는 평화로운 시대를 준비하여야 한다.

안보문제는 각 국가간에 복잡하게 얽힌 관계속에서 국가간의 갈등과 분쟁, 국제제재, 지역체제의 불안정으로부터 오는데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이상 고도의 긴장속 안보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군사력 증강과 군사전략에서 벗어난 경제이익에 관심이 더욱 커져 국경을 초월하는 국경없는 지역주의 협력이 확산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패권경쟁 차단을 위해 주한미군은 필요하다고 많은 지식인들이 주장하고 있다. 군비경쟁은 발전보다는 퇴보를 가져올

수 있기에 지역내에서의 패권경쟁을 억제하고 공동 대응하는 동맹체제를 유지하여 양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는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평택기지는 대한민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가까운 곳에 항만이 인접해 있어 대륙과 해양을 이을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과거 전쟁사를 통해 검증되었듯이 대륙과 해양의 길목에서 힘을 통제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가치로 보았을 때 평택기지가 가지는 지리적 중요성은 공감이 간다. 평택은 중국 연안과 가장 가까운 미군기지이며 유사시 중국의 지대함 미사일을 방어하면서 항모전단을 해군기지에 정박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평택기지는 중국과 대륙으로 연결된 북한과 가까운 지근거리이기에 일정인원 이상의 고정병력을 주둔시키면서 상호 대립관계를 유지되어야 한다.

평택기지는 해외 미군기지 중 가장 최신의 설비를 갖춘 곳이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곳으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의 적이었던 베트남과 협력하고 있고, 베트남은 미국 군함이 참란 해군기지에 기항(寄港)하는 것을 기꺼이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견제를 위해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평택의 주한 미군은 동북아 지역분쟁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는 ‘신속기동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는 동북아의 지역안정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미국의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경찰국가로서의 역할 수행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평택에 주한미군이 통합됨으로써 얻게 되는 커다란 장점은 한미동맹 관계를 좀 더 발전시키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주둔 시설이 가지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은 분명하다. 보다 탄탄한 동맹관계로 가기위한 중요한 과정이면서 한반도 방위에 적합한 체제를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증원전력 전개가 쉽고 전개된 병력을 기지의 장점을 활용하여 훈련시킬 수 있는 점과 북한에 의한 우발상황이 발생된다면 기지에 전개되어 있고 집결된 병력과 장비를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시교육도 빠른 시간에 실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어망을 증강시켜 나가고 있는 것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들이 보완된다면 세계 최고의 미군기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안정으로 인한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투자가 증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시작된 평택기지 시대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국익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VI. 결 언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67년 간 지속되면서 많은 굴곡을 겪어오면서 발전된 굳건한 관계다. 위협의 인식, 정치적 변화, 동맹국 간의 서로 다른 권력 지형을 비롯해 동맹의 여러 측면이 진화해왔다. 한미동맹은 이 모든 것을 이겨왔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 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을 동시에 맺은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미래지향적 한미동맹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수평적 관계로 전환이 필요하고, 지역 안보에 대한 동반자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국은 전략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미군을 운영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한국은 중국과는 경제를 미국과는 안보라는 선택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한미동맹은 국가안보에 결정적이기에 북한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21세기형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여 함대와 전투기, 병력의 수를 중심으로 하던 미군 체계를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기동군 개념에 맞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에 따라 개편되면서 미국은 한반도를 ‘주요 작전기지(MOB)’로 운용개념을 정립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내 기지 통폐합 과정을 거쳐 평택기지 시대에 도래하면서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전략적 벨트를 구축하며 동북아의 허브기지로 사용하고 있다. 주한미군 배치의 가치는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안보환경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지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 수준의 주한미군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술개념으로 전장 거리는 제약요소가 아니다. 미군은 기동력을 갖춘 부대로 변화를 추진하였고, 해공군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유사시 전투력을 투사하고 위협요소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역내안정,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동맹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하며, 진화되어야 한다. 동북아 지역에서 패권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노력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은 필수이며,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동맹관계는 굳건하여야 한다. 한반도는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정치·군사적 각축장이 되었던 지역으로 힘의 균형유지가 어느 지역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정의 실질적 보장 장치로 통일이 된다하여도 안보위협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는 지역임을 고려한다면 주한미군의 가치를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향후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유지되고,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깨닫고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 최근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 문제로 인하여 양국에 득보다 실이 많은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에게는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 지역안보를 지키기 위한 주요 작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절감하여 국가 경제에 매진하는 상호간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일 : 2020.07.28]

[논문심사일 : 2020.08.17]

[논문수정일 : 2020.08.26]

[게재확정일 : 2020.09.14]

참고 문헌

1. 국내문헌

- 김승연, “주한미군 재배치와 새로운 한-미 동맹관계의 모색”,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영승, “한미관계와 주한미군: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그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권 2호, 2015
- 김용찬,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의 기록관리기준표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19. 2.
- 김유근, 「주한미군기지 이전 백서」, 2018. 12.
- 서금석, “미국의 신 군사전략과 한미동맹”,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안기현,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 「국가안보전략」 으로부터 「인도-태평양 전략」 까지”,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9. 10. 21.
- 이도제, “군사시설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2018
- 이영빈, “주한미군 재배치와 역할변화”,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지은, “미국 군사변환의 변화”, 숙명대 석사학위논문, 2009
- 이현수, “한반도 안보의 체제 및 지역 차원의 영향 요인 연구”, 대전대 박사학위 논문, 2019
- 송윤목,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 논문, 2008

2. 국외문헌

- U.S. Department of Defense, *Transforming Planning Guidance*, 2003
- U.S., Department of Defense, 2019, "4.2. Line of Effort 2 : Partnerships", in4. *Sustaining U.S. Influence to Achieve Regional Objectives*

3. 기타

- 국방일보, "주한미군기지 출입구에 첫 한국 군인 명칭", 2020. 6. 22일자
<https://www.rfa.org/korean/commentary>(검색일 : 2020.4.24.)
www.brookings.edu/blog/order(검색일 : 2020.4/24)
<https://www.globalfirepower.com/>(검색일 : 2020. 5. 15)
나무위키(<https://namu.wiki>)(검색일 2020. 6. 18)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s.co.kr>), 2019. 11. 21자(검색일 : 2020. 5. 14)

Abstract

A Study of the Strategic Value of the Relocation of U.S. Forces in Korea

Moon Geunhyeong

It is necessary to judge the value of the U.S. forces relocation in South Korea by considering the current the South Korea-U.S. alliance situatio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ast, such as some assertions that the U.S. needs to redesign its relationship with the South Korea-U.S. alliance and request defense costs.

No one would deny that there was U.S. help behind Korea's many sacrifices during the Korean War and its rise to become the world's 10th largest economy. The issue of increasing SMA should not adversely affect the solid Korea-U.S. alliance. The era of the camp Humphreys came as the U.S. military base was reorganized following the U.S.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GPR),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s.

Around the world, the U.S. is keeping it's troops overseas in 33 countries. Among them, Japan, Germany, Korea, Italy and Kuwait are strategic choke points that maintain more than 10,000 U.S. troops. The U.S. is at the center of the balance of power, coupled with China's recent rapid rise in Northeast Asia and Russia's return to its former military power, and Japan's push to become a military power.

The U.S. military forces presence in Korea to check on alliance countries as well as threats from N.K is of great help to both countries. To maintain a balance of power with neighboring countries as well as North Korea's threats, the U.S. Forces in Korea is greatly helping both countries. The U.S. should further appreciate the strategic value of South Korea in checking China and Russia, and

South Korea should make full use of the two countries' advantages while using the U.S. military force to maintain the balance of power. The origin of the U.S. camp name among the merged bases was summarized and presented as attached data in this paper. We hope that thi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 strong Korea-U.S. alliance.

Key Words: Korea-U.S. Alliance Korea-U.S. alliance, United States Forces Korea, redeployment, security value

붙임) 주한미군기지 현황

(음영 : 캠프명 유래 확인)

캠프명	지역	반납 (폐쇄)	캠프명	지역	반납 (폐쇄)
1.카이저(Kaiser)	포천	1970	40.브라이언 올굿		2018
2.게리 오웬(Garry Owen)	파주	2004	41.Command Center 서울	서울	2018
3.그리브스(Greaves)		2004	42.니블로막사		2008
4.스텐톤(Stanton)		2007	43.콜번(Colbern)	하남	2008
5.에드워즈(Edwards)		(2004)	44.이글(Eagle)	원주	(2010)
6.자이언트(Giant)		2004	45.롱(Long)		(2010)
7.찰리 블럭(Charlie Block)		2007	46.용인(Yongin)	용인	(2004)
8.키티 호크(Kitty Hwak)		2004	47.마켓(Market)	부평	2019
9.리버티벨(Liberty Bell)		2007	48.미셔(Mercer)		1992
10.펠햄(Pelham)		2004	49.그랜트(Grant)		1975
11.하워즈(Howze)		2006	50.Humphreys	평택	
12.보니파스(Bonifas)		2007	51.에임스(Ames)	대전	1991
13.하우스		2007	52.팔공산 통신소	군위	1990
14.자유의 다리		2007	53.성서기지		(1992)
15.파평산 관제소(파주)		1991	54.위성 추적관측소		1994
16.님블(Nimbke)	동두천	2007	55.워커(Walker)		
17.케이시(Casey)		(2018)	56.조지(George)	대구	
18.캐슬(castle)		2013	57.헨리(Henry)		
19.호비(Hovey)	양주	2019	58.대구 COB		
20.광사리(Kwangsa-Ri)		2005	59.오스커 병커		
21.모빌(Mobil)		2016	60.캐럴(Carrol)	칠곡	
22.라파디아(Guadia)	의정부	2007	61.브룩클린힐(Brooklyn)	양산	
23.시어스(Sears)		2011	62.살렘(Salem)	김천	2011
24.에세이온(Essayons)		(2006)	63.무적(Mu-Juk)	포항	
25.카일(Kyle)		2007	64.리비		(1992)
26.폴링워터(Falling Water)		2006	65.포항비행장		
27.스탠리(Stanely)		2018	66.하야리아(Hialeah)	부산	2010
28.잭슨(Jackson)		2018	67.수영비행장		1998
29.레드 클라우드(Red Cloud)		(2018)	68.맥냅(Mcnab)	제주	2005
30.페이지(Page)	춘천	2005	69.오산 기지(51전비)	오산	
31.용산 메인	서울	2008	70.군산 기지(8전비)	군산	
32.사우스 포스트		2008	71.K-16	성남	
33.코이너(Conier)		2018	72.수원 CAB	수원	
34.킴(Kim)		2016	73.청주 CAB	청주	
35.그레이(Gray Annex)		(1992)	74.김해 COB	김해	
36.모스(Morse)		(2006)	75.진해 CAB	진해	
37.아리랑택시		2003	76.군산 POL 터미널	군산	
38.유엔콰라운드		2007	77.광주광역시 COB	광주	
39.이즈벨		(1992)	78.CP 탱고(Tango)	과천	

많은 기지들 중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지들을 연구하면서 정리순서는 북에서 남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파주에 있었던 **캠프 에드워즈**이다. 이 캠프는 82공병중대 주둔지였으며, 6.25전쟁에서 1951년 1월 2일에 전사하고 명예훈장을 사후 수여받은 제 2보병사단 23보병연대 2대대 소속의 주니어 D. 에드워즈 중사(SFC. Junior D. Edwards)의 명예를 위해 그의 성씨를 인용하였다. **캠프 보니파스**는 비무장지대 관람과 공동경비구역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캠프 키티호크와 리버티벨을 1976년에 합친 곳이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살인사건 당시 조선인민군에게 살해된 주한미국 육군 아서 G. 보니파스 대위(사후 소령)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서 개명하였다.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는 6.25전쟁 도중 1952년 전사한 제 7보병연대 공병장교 보이드 케이시 소령의 이름이다. **캠프 호비**는 캠프 케이시와 USAG 케이시 엔클레이브의 일부분으로 제 7보병사단 17보병연대 A중대 원으로서 1953년 7월 6일 폭찹힐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하워드 C. 호비(Howard C. Hovey) 상사를 기리기 위해 캠프명을 호비로 하였다.

의정부의 **캠프 잭슨**은 6.25전쟁에서 은성훈장을 수여 받은 조지 W. 잭슨 일병의 이름이다. 다음은 **캠프 레드 클라우드**로 본디 이름이 캠프 잭슨이었던 이 기지는 평안북도 창성군 근처에서 전사한 명예 훈장 수여자인 미첼 레드 클라우드 Jr. 상병의 이름을 따서 1957년 5월 18일에 캠프 레드 클라우드로 개명되었다. 춘천의 **캠프 페이지**는 6.25전쟁 중인 1950년 장진호전투에서 공훈으로 명예훈장을 수여받은 존 D. 페이지(John D. Page) 대령 이름이다.

용산의 **캠프 코이너**는 1953년 한국 전쟁 중에 은성 훈장을 수여받은 제 7보병사단, 31보병연대 3대대 소속 랜돌 코이너 소위(2nd Lieutenant Randall Coiner)의 이름을 딴 기지이다. **브라이언 올굿** 육군지역병원은 제 65 의무여단 제 121 전투지원병원이었던 곳으로 2008년 6월 30일 이라크에서 순직한 브라이언 D. 올굿 대령(Col. Brian D. Allgood) 이름을 따서 개명, 올굿 대령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울육군병원에서 근무하고 이후 이라크 다국적군(MMF-I)의 외과장으로 이라크 배치. 2007년 1월 20일 부상자를 태우고 가던 UH-60 블랙호크가 로켓에 요격

되어 사망하였다. 이 명칭은 평택기지 병원에 동일하게 사용 중이다.

원주의 **캠프 롱**은 6.25전쟁 중인 1951년 원주부근에서 세운 공로로 명예 훈장을 받은 육군 병장 찰스 R. 롱(Sergeant Charles R. Long)을 기려 지었으며, 그는 전사 당시 제2보병사단 38보병연대 M중대 소속 박격포소대의 전방 관측병이었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는 1961년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순직한 제 6수송중대의 벤저민 K. 험프리스 준위(CW2 Benjamim K. Humphreys)의 이름을 1962년에 사용하였으며, 1964년 미국 제 8군사령부에서 독립하여 험프리스 지역사령부로 개편하였다. 1974년에 제 19지원여단 창설되면서 USAG 캠프 험프리스로 지명, 1985년에는 전시 작전지원단으로 구조조정하였다.

대구에 있는 **캠프 위커**는 1950년 12월 23일 당시 교통사고로 순직한 8군 및 국제연합사령부 사령관 월터 위커 중장을 기리기 위해 명칭을 사용하였다. **캠프 조지**는 6.25전쟁 중인 1952년 11월 30일 부친의 송내동 근처에서 전사한 명예 훈장수여자인 제 45보병사단 179보병연대 C중대의 찰리 조지 일병(Charles George)의 명예를 기려 붙였다. **캠프 헨리**는 6.25전쟁 초기 1950년 9월 1일 경북 안동시에서 전사한 제 2보병사단 제 38보병연대 F중대의 프레드릭 F. 헨리(명예훈장 수여자) 준위의 이름을 따서 붙여져, 1960년 기념관화 하면서 휴전 이후 주한 미육군이 주둔하였던 곳이다.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는 부대 초대사령관의 고향 근처 플로리다주에 있는 유명한 경마장을 떠올리고 그 도시이름을 따서 명하였으며, 제주도 **캠프 맥넵**은 6.25전쟁 발발 후 1952년 유엔사령부의 공군이 창설되고 본격적인 주둔하기 시작한 1953년부터 1958년까지 책임자였던 맥넵대령(col McNab)의 이름을 인용하였다.

다음으로 훈련장 중 포천에 있는 **로드리게스** 훈련장은 조지프 찰스 로드리게스 대령(1928년 11월 14일 ~ 2005년 11월 1일)의 이름을 인용한 곳으로, 그는 한국 전쟁 당시 문혜리 지역에서 공로가 인정되어 미국에서 가장 높은 군사 훈장인 명예 훈장을 수여받았다. 상병으로 7보병사단, 17보병 연대, 2대대, F중대에 배치되어 1951년 5월에서 6월 유엔 반격기간 동안 문혜리 마을 근처의 일부 고지대를 점령하는 임무를 수행 중 15명

의 적군을 사살하면서, 전략적 강점을 확보했다. 로드리게스는 상사계급으로 승진하여 명예훈장을 1952년 2월 5일 수여 받았다.

주한미군기지 출입구에 첫 한국 군인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례가 국방일보에 보도되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오산 죽미령 전투 참가 윤승국 장군을 기억하도록 **윤 게이트**로 변경한 것이며, 이는 주한미군기지 출입구 명칭에 처음 한국 군인의 성(姓)을 딴 것이다.³¹⁾ 윤승국 장군은 6·25전쟁 당시 유엔 지상군이 북한군과 첫 교전을 벌인 오산 죽미령 전투에 참전한 한국군인으로 육사 4기 예비역 소장이다. 오산 죽미령 전투는 1950년 7월 5일 스미스 특임대 540명이 전차 36대를 앞세우고 남진하던 5,000여명의 북한군과 벌인 유엔 지상군 최초의 전투다. 당시 대위였던 윤 장군은 미군 연락장교로 포대 진지에 배치돼 미군과 함께 북한군에 맞섰고, 철수 작전을 이끌며 200여 명의 미군의 목숨을 구했다. 평택기지에는 총 6개 출입구가 있다.

상기 캠프와 훈련장 명칭 이외에도 조사하지 못한 곳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는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 다소 제한된 내용이 많이 있다. 이 자료가 향후 주한미군기지 명칭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31) 국방일보, “주한미군기지 출입구에 첫 한국 군인 명칭”, 2020. 6. 22일자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

김승택 *

- I. 서론
- II. 미국과 중국의 전략
- III. 미중 전략경쟁 심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IV.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
- V. 결 론

논문요약

21세기 국제정치의 최대 화두는 미국과 중국간의 전략경쟁일 것이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 방위적 압박이 국제사회에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중간 전략경쟁의 여파는 한반도에 가장먼저 그리고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미 그 여파는 몰려왔고 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큰 파도로 몰려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두고 벌어진 사태는 미중 전략경쟁이 한국에 가져올 여파의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다.

한국의 딜레마는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한국은 미국 중심의 안보협력체와 중국 중심의 경제협력체를 균형있고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한국은 전략적 지혜를 발휘하여 미중간의 전략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자강(自強)과 한미동맹의 기반으로 하는 균세(均勢), 그리고 교린(交隣) 전략을 구사하여 생존공간을 확보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여 양국과 긴장관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제어 : 미중 전략경쟁,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일대일로, 반접근 지역거부, 강군몽(強軍夢),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I. 서론

21세기 국제정치의 최대 화두는 미국과 중국간의 전략경쟁이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 방위적 압박이 국제사회에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78년 덩소핑이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한 이래 경이적인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거의 매년 두 자리 숫자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한세대이상 지속하였다. 그 결과 2003년 GDP기준 세계 7위였던 중국은 이태리, 프랑스, 영국, 독일을 차례로 따라잡고 2010년에는 일본까지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등극했다. 2014년 IMF는 구매력평가기준(PPP: Purchasing Power Parity)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PPP 기준이긴 하지만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에서 2위로 내려앉은 것은 142년만의 대사건이었다. 2018년말 현재, 중국의 GDP는 미국의 65%까지 추격해 왔다.¹⁾

2012년 중국의 5세대 지도자로 등장한 시진핑은 ‘중국의 꿈’을 제시하며 중국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것임을 선언하였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요구하며 고양된 자신감을 과시하였다. 오늘날 중국은 G2로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글로벌 경제를 견인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였다. 지난 한 세대에 걸쳐 급속한 경제성장을 시현해 온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하드파워로서 군사력, 소프트파워로서 과학기술능력, 문화력을 포함한 종합국력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옴으로써 장기적으로 미국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국가로 부상²⁾한 것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은 대중국 전략의 대대적인 전환이 불가피하였다.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아시아·태평양 재

1) 최병일,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서울: 책들의 정원, 2019), p. 22.

2) 유호근·설규상, “미·중관계 변화와 동북아 패권구도,” 『동북아 신질서 구축과 전략적 선택』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6), p. 8.

균형(Asia-Pacific Rebalance)’이라고 명명하고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서둘렀다.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부상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상호협력 및 경쟁을 통해 중국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국제 질서에 편입시키고자 노력했다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중 양국의 전략경쟁의 여파는 국제사회 암운을 던져주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자신의 영향권으로 간주해 왔던 지역이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중간 전략경쟁의 여파는 한반도에 가장먼저 그리고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미 그 여파는 물려왔고 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큰 파도로 물려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균형이 무너지고 강대국간의 각축이 전개되면 한반도를 생존공간으로 하는 한국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중간 전략경쟁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정학적, 지정학적 구도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의 수립을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으로 미중간의 전략경쟁에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선 미중 양국의 전략과 한국에 대한 영향요소를 분석하고, 이어 한국의 대응전략을 모색하였다.

II. 미국과 중국의 전략

1. 미국의 대중국 전략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공개한 일련의 국가전략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17년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2018년에 발표한 국방전략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리고 2019년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가 그것이다. 2017 NSS에서는 국제사회가 지정학으로의 회귀라는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수정주의, 불량

국가인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 등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중시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원칙에 입각한 현실주의 전략을 강조하였다.³⁾ 2017 NSS가 밝힌 미국의 국익은 ‘미국 국민의 보호’, ‘미국 번영의 촉진’, ‘힘을 통한 평화의 보존’, ‘미국의 영향력 확대’이다. 2018 NDS는 미국의 최대 위협은 테러가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같은 현상타파세력과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경쟁이라고 규정하였다.⁴⁾ 2018 NDS에서는 NSS가 밝힌 미국의 국익 수호의 방안으로써 ‘미국 본토에 대한 방어’, ‘군사적 우월성 유지’, ‘핵심지역에서 세력균형의 보장’,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최적의 국제질서의 발전’을 국방전략의 목표로 삼았다.⁵⁾ 이어 대중국 압박의 실행 전략적인 2019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는 전략의 목표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을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APEC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지역 비전 구현을 위한 4가지 원칙으로 ‘모든 국가들의 주권과 독립성에 대한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개방된 투자, 투명한 조약, 연계성에 기반한 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규정과 규범 유지’를 제시하였다.⁶⁾ 2019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는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세 가지의 노력선(line of effort)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준비태세(preparedness) 유지이다. 이는 전투 신뢰성이 높은 전력을 전방배치하고, 필요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핵, 미사일, 육·해·공·우주 등 모든 영역에서 전력의 양적·질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협력관계(partnership) 강화이다. 이는 기존의 동맹국과의 관계는

3)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The White House, 2017), pp. 25-32.

4)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D, 2018, p. 2.

5) 김주리,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35권 제4호 2019년 겨울(통권 제126호)(서울: 국방연구원, 2020), p. 45.

6)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apec-ceo-summit-da-nang-vietnam/> (검색일: 2020.4.10.)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국가들과는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미국이 구축해 온 동맹관계를 미국이 가진 가장 중요한 비대칭 전략자산으로 평가해 왔다. 미국에게 있어 동맹과 파트너십은 전쟁수행 능력을 배가하는 전력승수(force multiplier)로 평가된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수정주의 세력의 도전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동맹·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셋째, 지역 연결체제의 증진(promotion of a networked region)이다. 기존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십을 네트워크형 안보체제로 확대시켜 적으로 부터의 공격을 억제하고 역내 안정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역에 대한 접근의 자유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⁷⁾

요약하면 미국은 대중국 견제의 실천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역내 미국의 패권을 유지 및 강화하여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군사력의 준비태세 강화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동맹 및 우방국, 파트너십 국가들과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중국의 도전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2. 중국의 대미국 전략

시진핑은 2012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 선출되자마자 국가박물관에서 민족부흥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였다. “현재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합니다.”⁸⁾ 시진핑은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국굴기(大國崛起)’의 공세적인 대외전략을 채택하였다. 시 주석은 대국굴기의 목표로 두 개의 100년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소강(小康)사회를 이루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의식수준이 높은 조화

7) 김주리, 앞의 책, P. 53.

8) 앤솔통 저·고상희 역, 『2023년 세계사 불변의 법칙』 (서울: 글항아리, 2014), p. 257.

로운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이룬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이를 ‘중국몽(中國夢)’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이라고 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위협적인 국가를 미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압력과 견제를 극복하고 현대화된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강군의 꿈(強軍夢)’ 실현을 국가전략과 중국군의 주요과제로 설정했다.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밝힌 강군몽 실현 계획은 2020년까지 인민해방군이 기계화, 정보화로 군사력을 제고하고, 2035년까지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완성하고, 2050년까지 세계일류의 강한 군대를 만든다는 것이다.⁹⁾

중국의 군사력 증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간한 ‘2019년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2위해 해당하는 2,610억달러(약 322조원)로 전 세계 군비의 14%를 차지했다.¹⁰⁾ 특히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군사력 투사의 핵심 전력인 해군력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2018년 2월에 펴낸 연례보고서에서 “중국 해군이 21세기 들어 건조한 군함 규모가 한국·일본·인도 3국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고 분석하며 중국의 군사력 팽창이 동북아의 군사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¹¹⁾ 중국은 2030년까지 미국 함대에 육박하는 해군력을 건설하려 한다. 중국은 2030년까지 핵추진 항공모함을 포함해 모두 4척의 항모를 배치할 계획이다.¹²⁾ 2019년 8월 현재 중국 해군은 2척의 항모와 488척의 수상전투함, 789척의 잠수함, 246척의 보조함, 235,000명의 해군병력을 운용하고 있다.¹³⁾ 지난 4월 11일 6척으로 구성된 중국 랴오닝함 항모전단은 대만 동부해협에서 탑재헬기의 이착륙과 대잠수함 훈련을 하고 이튿날 대만동부 해안을 따라 이동하며 바시해협을 통

9) China Daily, “PLA to be world-class forces by 2050,” 2017.10.27.

10) (국방일보), 2020년 4월 28일.

11) (조선일보), 2018년 2월 19일.

12) (한겨레), 2018년 5월 14일.

13)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9 RINSA 세계안보정세분석』 (논산: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9), p. 25.

과해 남중국해로 이동했다.¹⁴⁾ 무력시위를 통해 남중국해를 포함한 소위 제1도련선(島連線) 밖으로 미 해군의 영향력을 밀어내고 동 지역을 중국이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해외군사기지 확보를 추진하여 2016년 8월 아프리카 아덴만 부근의 지부티에 최초의 해외 해군기지 구축에 성공하였으며, 이어 파키스탄 과다르 항만,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와 호주 다윈 항구의 99년 장기임대, 필리핀 수빅항 민간조선소 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상업적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만들이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은 신 실크로드 전략을 발표했다. 중앙아시아를 지나 중동을 통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육상 실크로드인 일대(一帶 one belt)와 명나라 정화의 대선단이 개척한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인 일로(一路 one road)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¹⁵⁾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협력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직설적으로 말하면 글로벌 지정학의 판도를 뒤집겠다는 것이다. 즉 유라시아 공간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전략적 구조를 형성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볼 때 일대일로 전략은 미국에 맞서 21세기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이자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라고 할 수 있다. 일대일로 전략과 관계되는 지역에는 세계 인구의 65%에 달하는 44억의 인구와 세계 경제의 29%에 달하는 21조 달러의 GDP 국가들이 속해 있다¹⁶⁾.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럽국가들과 경제적 관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중동,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도 전 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9년 4월에 개최된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40여명 이상의 국가지도자들이 참여했다. 이 회의에서 640억 달러(74조) 규모의 프로젝트협력이 체결되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는 2017년 현재 10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내륙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다.

14) (세계일보), 2020년 4월 23일.

15) 최윤식, 『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나리오』(서울: 지식노마드, 2018), p.330.

16) 차문석, “미중의 글로벌 전략과 동북아 지정학의 귀환: 한반도 통일 위상학의 변화,” 『국가전략』 제26권 1호 (성남: 세종연구소, 2020), p. 149.

요약하면 중국은 군사력의 강화 및 확대(강군의 꿈)를 통해 남중국해를 시작으로 서태평양과 인도양 방면으로 군사적 세력권을 확대한다.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참여국가와의 우호연합을 확대하여 미국의 강점인 동맹 및 파트너 네트워크를 파괴하여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한다. 이러한 전략으로 2050년 미국을 추월하여 글로벌 강대국 지위를 획득하는 중국몽,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Ⅲ. 미중 전략경쟁 심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왈츠(Waltz)가 지적하였듯이 국제체제에서 정치적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강대국이므로 역내에서 상대적 약소국의 위치에 있는 한국이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는 안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양국 모두로부터 직접적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대중국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중국은 경제적 의존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에 대한 정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첫째, 미국과 중국 양국중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양자택일의 강요 또는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19세기 중반까지의 중국 중심 질서에서,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지배,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주도의 질서로 변천했다.¹⁷⁾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의한 구조적 쇠퇴(decline) 뿐만 아니라 내부적 고갈(decay)이 더해져 쇠퇴하는 패권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중국 억제라는 전략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힘이 부친 미국은 동맹국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 및 우방국과의 전략적 연대와 군사·안보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적극적인 합류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17) 김원배, 『격동하는 동북아 지형』 (서울: 나남, 2018), p.22.

2013년 12월 방한했던 바이든 미 부통령은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그리 좋은 베팅이 아니다(It’s not a good bet to bet against the United States)”라며 노골적으로 미국의 속내를 표현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구상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에 참여를 요구하는 것¹⁸⁾, G7을 확대하여 G11을 구상하며 한국을 초청한 것 등은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연대에 동참하라는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야말로 중국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믿으며, 지난 2세기의 역사는 정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국의 부상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¹⁹⁾ 중국은 한국이 과거 조공을 바치던 속국이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부상하는 지금 한국은 당연히 예전의 속국의 위치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중국은 힘이 커지면서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 평가도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한반도를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전략적 완충지역 정도로 인식했다면 G2로 성장한 21세기에는 세계패권을 지향한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직·간접적인 영향권내에 두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세력권 안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이다.

2019년 12월 4일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WTO를 초석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나는 우리(중국과 한국) 사이에 반드시 새로운 공동 인식이 형성될 것이라 생각한다”²⁰⁾며 미국의 무역보복을 규탄하는데 한국이 중국의 편에 서줄 것을 촉구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될수록 미국은 한국을 향해 더욱 강력하게 선택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중국역시 한국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18) 외교부는 2020년 6월 5일 “미 국무부 키이스 크라크 경제차관이 한국의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EPN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2020년 6월5일.

19) Yan Xuetong, “The Rise of China in Chinese Eye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0: 26(2001), pp. 33-34.

20) (중앙일보), 2019년 12월 5일.

(A2AD: Anti-Access/Area Denial)²⁶⁾ 전략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A2AD 전략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누려왔던 해·공역의 자유로운 진입 및 사용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인식하였다. 중국의 A2AD 전략에 대응하는 미군의 합동전투개념은 JAM-GC(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Global Commons)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육군의 작전개념은 다영역전투(MDO: Multi Domail Battle)²⁷⁾이다. 다영역전투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상배치 전력을 이용하여 해·공역으로 전투력을 투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육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트리엇(PAC-3) 지대공 미사일, 전구고고도 지역방어(THAAD) 요격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전력은 지상배치형 대함전력과 함께 미 육군이 다영역 전투를 구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²⁸⁾ 중국의 경제적 보복사태를 불러왔던 2015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이러한 배경하에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2019년 8월 2일 1987년 체결된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조약을 탈퇴하였다. 이는 겉으로는 러시아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적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와의 INF 조약을 탈퇴하여 중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INF 조약을 체결하거나 그것이 불가할 경우 아시아 동맹국을 활용하여 중국을 겨냥하는 중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다.²⁹⁾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을 배

26) (반접근)은 태평양내 위치한 전진기지로부터의 미 전력의 대중국 작전수행을 차단하는 것이며, (지역거부)는 동·남중국해와 서해에서 작전중인 미 해상전력의 자유로운 군사활동을 차단하는 것이다. 류해성,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A2AD) 구사에 따른 미국의 군사적 대응과 시사점,” 『합참』 제80호 2019년 여름호, p. 60.

27) 다영역전투는 전투공간의 전 중심과 다중 영역에서 능력 통합을 통해 유리한 기회를 조성하여 적에게 다영역에서의 딜레마를 강요함으로써 주도권을 장악 및 유지하고, 적을 격퇴하여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이다. The US Army TRADOC, “The US Army in Multi-Domail Operations 2028,” 『TRADOC Pamphlet 525-3-1』 (2018), p. 17.

28) 김재엽,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도전과 미국의 군사적 응전(공해전투에서 다중영역전투까지),” 『한국군사학논집』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2019), p. 140.

29) 이수형, “중거리핵전력(INF) 폐기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INSS 전략보고(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10월.

로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던 양국 관계가 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싼 패권경쟁 시기에 접어들었다. 미중간의 패권경쟁은 무역, 기술, 금융 등 경제 영역에서 시작해 현재는 정치, 군사 방면의 동맹 가치 재조정으로 이행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미국적 가치와 중국적 가치의 충돌로 이어질 것이다.²²⁾ 키신저 전 미 국무부 장관은 “미중 양국이 냉전단계의 초입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도 “아직 미중간 냉전 2.0은 아니지만 냉전 1.5처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²³⁾

중국과의 전략경쟁이 가열되면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동참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대하여는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다. 즉,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전략을 구사하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행동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다.²⁴⁾ 이외에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미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이 소극적인 한미일 삼각 협력²⁵⁾에의 적극적 참여,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참여, 미국이 추진중인 반중국 경제블록인 EPN에 참여 등 다수가 있다.

중국과의 전략경쟁이 심화될수록 미국의 견제 활동도 강화될 것이며 한국에 대한 동맹국으로서의 책무와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와 압박도 증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미국 전략무기의 한국내 배치 요구 등 한반도의 대중국 군사적 전진기지화를 위한 미국의 압박이 점증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해·공군력 건설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격차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다. 따라서 군사력 확충 노력과 함께 미국의 해·공군력 우위를 무력화하고 자국의 전략적 의도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방안에 고심한 끝에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22) 김계동 외12인, 『한반도 국제관계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9), p. 395.

23) (한겨레), 2020년 5월 13일.

24) Michael Green, et al., *Asia-Pacific Rebalance 2025: Capabilities, Presence and Partnerships*, CSIS, January 2016, p. 60.

25) 지난해(2019년8월 22일) 한일 무역갈등으로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를 예고하자 미국이 직접화법으로 지속유지를 요구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의중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2AD: Anti-Access/Area Denial)²⁶⁾ 전략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A2AD 전략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누려왔던 해·공역의 자유로운 진입 및 사용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인식하였다. 중국의 A2AD 전략에 대응하는 미군의 합동전투개념은 JAM-GC(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Global Commons)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육군의 작전개념은 다영역전투(MDO: Multi Domail Battle)²⁷⁾이다. 다영역전투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상배치 전력을 이용하여 해·공역으로 전투력을 투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육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트리엇(PAC-3) 지대공 미사일, 전구고고도 지역방어(THAAD) 요격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전력은 지상배치형 대함전력과 함께 미 육군이 다영역 전투를 구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²⁸⁾ 중국의 경제적 보복사태를 불러왔던 2015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이러한 배경하에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2019년 8월 2일 1987년 체결된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조약을 탈퇴하였다. 이는 겉으로는 러시아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적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와의 INF 조약을 탈퇴하여 중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INF 조약을 체결하거나 그것이 불가할 경우 아시아 동맹국을 활용하여 중국을 겨냥하는 중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다.²⁹⁾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을 배

26) (반접근)은 태평양내 위치한 전진기지로부터의 미 전력의 대중국 작전수행을 차단하는 것이며, (지역거부)는 동·남중국해와 서해에서 작전중인 미 해상전력의 자유로운 군사활동을 차단하는 것이다. 류해성,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A2AD) 구사에 따른 미국의 군사적 대응과 시사점,” 『합참』 제80호 2019년 여름호, p. 60.

27) 다영역전투는 전투공간의 전 중심과 다중 영역에서 능력 통합을 통해 유리한 기회를 조성하여 적에게 다영역에서의 딜레마를 강요함으로써 주도권을 장악 및 유지하고, 적을 격퇴하여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이다. The US Army TRADOC, “The US Army in Multi-Domail Operations 2028,” 『TRADOC Pamphlet 525-3-1』 (2018), p. 17.

28) 김재엽,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도전과 미국의 군사적 응전(공해전투에서 다중영역전투까지),” 『한국군사학논집』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2019), p. 140.

29) 이수형, “중거리핵전력(INF) 폐기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INSS 전략보고(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10월.

치·운용한다면 중국의 해군력을 차단 및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³⁰⁾ 아직 미국의 요구는 없지만 언제든지 한국내 전진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전력이라 평가된다.

결국 중국의 A2AD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전력투사와 기동력이 핵심이라고 볼 때 사전 전진 배치된 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중국과 근접한 한국에 대한 전략무기 배치 요구는 점점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다섯째, 중국은 한국의 대중국 경제적 의존관계를 활용하여 미국의 대중국 견제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도록 압박 강도를 높여갈 것이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교역국이자 최대 해외투자처로 부상했다. 중국은 2018년과 2019년 전체 한국 무역에서 각각 26.8%와 24.9%의 비중을 차지했다³¹⁾. 미국은 이에 반해 12%와 13.5%로 중국의 절반수준이다. 무역수지 역시 2019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00억 달러에 그친 반면, 대중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57억 달러였다.³²⁾ 과거에는 미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경제는 몸살을 앓는다고 했었지만, 이제는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한국경제는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아내야 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중국이 박근혜 정부의 사드(THAAD) 배치를 문제 삼아 ‘한한령’을 내리자 롯데의 중국내 매장 철수 등 한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사례는 한국경제의 대중국 연동관계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대중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이 안보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시킬 경우 한국의 대응수단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경제보복조치는 자국의 이익과 정치·외교적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구사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³³⁾

30) (연합뉴스), 2019년 3월 14일.

31) 주재우, “한미 안보협력과 한중 경제협력: 중국의 패권도전에 대한 소고,” 『한국국가전략』 제5권 제1호(서울: 한국국가전략연구소, 2020), p. 124.

32) (한국일보), 2019년 11월 12일.

33)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코로나 19의 기원을 국제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히자 중국은 호주를 상대로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정부는 킬코이 파스토랄, JBS 비프시티, 던모어 플랜트, 노던 코퍼레이티브 등 4개의 호주 육가공업체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앞으로 5년간 호주산 보리에 각각 73.6%, 6.9%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할

2019년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가한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을 앞에 두고 두 개의 경고성 발언을 했다. 첫째, 의사결정을 내릴 때 외부의 영향에 구속받지 말 것을 요구했다. 다분히 한국은 사드(THAAD) 배치를 교훈삼아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 해석된다. 둘째, 한중 양국의 공통된 우려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약속한 사드 추가배치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반대, 미국의 MD 편입 반대 등 소위 ‘3불 정책’을³⁴⁾ 조속히 실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중간 전략경쟁에 심화될수록 중국은 한국경제의 대중국 의존이라는 구조적 약점을 활용하여 미국과의 거리두기를 압박할 것이다.

IV.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

중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에 이어 대국굴기를 본격화함에 따라 패권국 미국과의 사이에 대격돌,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에³⁵⁾ 대한 경고와 논의가 무성하다. 세계가 냉전종식 이후 30년 정도의 짧은 탈냉전시대의 꿈에서 깨어나서 인류에게 익숙한 경쟁의 역사로 돌아왔다. 시진핑은 도광양회, 화평굴기, 화해세계 등 평화와 협력·조화를 뜻하는 과거의 외교적 수사를 대국굴기(大國崛起)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선포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최대 위협은 테러가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같은 현상타파세력과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경쟁이라고 규정하고,³⁶⁾ 무역전쟁을 필두로 전방위적 대중국 압박에 돌입했다. 미국과 중국은 누가 21세기의 국제질서를 결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장기전에 들어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연간 보리 생산량의 50%를 중국에 수출해 왔다. (주간동아), 2020년 5월 24일.

34) 최진욱, “대북정책과 한미공조,” 『현대 한미관계의 이해』 (서울: 명인문화사, 2019), p. 251.

35)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세력이 지배 세력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위협을 해을 때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혼란 상황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레이엄 엘리슨 저·정해운 역, 『예정된 전쟁』 (서울: 세종서적, 2018), p.16.

36)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D, 2018, p. 2.

선 것이다. 미중간 전략경쟁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정학적, 지경학적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의 수립을 요구받고 있다.

첫째, 자강(自強) 노력으로 방위 충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동북아는 심화되고 있는 미중의 전략경쟁의 여파가 가장 먼저 그리고 직접적으로 투영되는 지역이다.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 미중사이에서 한국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자강(自強) 즉 자체 군사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도 책임국방을 내세웠다. 주변 강대국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은 가질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방위 충분성’에 입각한 자력국방력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국제정치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권력정치(power politics)다. 힘(power)이란 강대국 국제정치에서 통화(通貨)나 마찬가지로, 강대국들은 이를 위해 경쟁한다. 국제정치학에서의 힘은 경제학에서의 돈과 마찬가지로 개념이다.³⁷⁾ 한국이 상당한 규모와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과의 비대칭성이 줄어들어 한국의 주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고,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어 동맹의 결속도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20세기 초 자강노력을 게을리 한 채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다 국권을 상실한 대한제국의 사례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교훈이다.

힘없는 국가의 주권을 지켜줄 강대국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스스로의 군사력 증강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한 남북간 9.19 군사합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주변국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자강의 도모는 쉽 없이 이어져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은 동서를 관통하는 금언이다.

둘째,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국은 양국 모두와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을 동등한 행위자로 상대

37) 미어세이머 저·이춘근 역,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서울: 김앤김북스, 2017), pp.48-49.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이웃 국가들과 속국관계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³⁸⁾ 아시아에서 위계질서는 일반적으로 19세기까지 전통을 이어 왔고 중국은 지배국가로, 2차 국가들 혹은 ‘속국들’은 주변국가로 비취졌다. 이것은 서구의 국가간 평등을 강조한 자유민주적인 전통과 매우 상반되는 것이다.³⁹⁾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이 대국이라고 해서 소국들을 괴롭히지는 않겠지만, 소국들이 덤벼드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⁴⁰⁾ 중국의 대한국관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이 한국을 동등한 행위자로 상대하는 것은 한미동맹으로 미국의 힘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건강한 관계증진의 전제조건은 튼튼한 한미동맹관계의 유지이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눈부시고 곧 미국을 추월할 기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미국은 건재하다. 대국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다. 제조대국으로 일어서고 무역대국으로 융성하고, 모든 무역대국은 반드시 군사대국이 되고 군사대국 다음은 금융대국이 되고 금융대국 단계에서 쓰러진다. 2018년 기준 미국과 중국의 실력을 보면 중국은 제조업에서는 미국의 164% 무역에서는 108%로 미국을 제쳤다. 대국으로 가는 길에서 보면 다음은 군사력과 금융력의 충돌이다. 그러나 중국은 군사력에서는 미국의 39%, 금융력에서는 3%에 못 미친다. 그래서 중국은 강국은 맞지만 미국의 힘에 비교해 보면 기술과 금융에서는 여전히 “B급 강국”이다.⁴¹⁾ 모델스키의 세계 리더십 모델에 따르면 세계 리더십의 순환은 약 100년가량 지속하고 대략 25년 정도로 나누어지는 네 국면으로 구성된다고 한다.⁴²⁾

38) David Kang, *China Rising: Peace, Power, and Order in East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39) David Kang, “Hierarchy in Asia International Relations: 1300-1900,” *Asian Security*, Vol. 1, No. 1 (2005), pp. 54-55.

40) Wang, Y, “China’s new foreign policy: transformations and challenges reflected in changing discourse,” *The Asian Forum*, 2014. 3. 21.

41) 정인갑 외5인, 『문명충돌과 미중무역전쟁』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9), pp. 322-323.

42) 1국면은 세계전쟁 국면이다. 세계 지도국으로 활동할 능력이 세계전쟁 기간을 통해 결정된다. 내리막길을 걷는 세계 지도국은 승계해야겠다는 국가로부터 도전을 받는다. 동맹국이 결성되고 25년 동안 여러 차례 전쟁과 갈등을 겪는다. 지구적 질서를 강제할 물리적 능력과 이데올로기적 메시지를 갖춘 한 나라가 등장한다.

모델스키의 이론에 비추어 보면 미중 전략경쟁이 진행중인 현재의 국면은 3국면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의 리더십이 앞으로도 족히 50년 이상은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익숙한 것의 중요성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중국의 부상이 놀라운 나머지 미국의 힘과 역할의 중요성에는 둔감해 지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미국이라는 균형추가 없어질 경우 어떤 상황이 도래할 것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래서 키신저는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미국 사이에 세력균형에 가까운 무언가가 존재한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균형을 잡아주는 국가가 아니라 균형을 지키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⁴³⁾라고 지적했다.

미중 전략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이 생존과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통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양국과의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세력균형 전략과 협력관계의 외교술을 결합하면 대립양상을 모두 없애 버리지는 못해도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은 완화시킬 수 있다. 질서를 유지하려면 자제력, 힘, 정당성이 늘 미묘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아시아의 질서는 세력균형과 협력관계 개념을 결합시켜야 한다.⁴⁴⁾ 다만, 중국에 대하여는 한미동맹이 한국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적이고 비적대적인 동맹이라는 점을 이해

2국면은 세계 강대국 국면이다. 승리가 확정되면 새로운 세계지도국의 지정학적 프로젝트가 실행된다. 새로운 의제를 적용하고 강제할 새로운 제도가 안착된다. 진반적으로 새로운 의제는 환영받고 수용된다. 3국면은 정당성 하락 국면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지도국이 강제한 질서에 대한 반대자가 증가한다. 세계 지도국의 선의도 의심받는다. 세계 지도국의 행위도 점차 자기 충족적으로 바뀐다. 대안적 의제가 점차 비중을 더해간다. 세계 지도국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지만, 아직까지 세계 지도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4국면은 탈집중화 국면이다. 이전 국면에서 시작된 도전이 더욱 강해진다. 세계 지도국은 물질적·이데올로기적 능력을 확장하여 이러한 도전에 대응한다. 하지만 지도국은 점차 약해지고 더욱 잦아진 공격에 훨씬 취약해 진다. 도전과 대응의 회오리바람은 세계전쟁 국면으로 이끈다. 세계 지도국은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받으므로 힘의 물질적 기초가 훼손된다. 행동과 수사사이에는 모순이 드러난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지도국의 정당성은 점차 의문시되고 도전은 더욱 강해진다. Modelski, *Long Cycle of World Politic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7.

43) 헨리 키신저 저·이현주 역, 『헨리키신저의 세계질서』 (서울: 민음사, 2016), pp. 263-264.

44) 헨리 키신저 저·이현주 역, 위의 책, p. 265.

시키고 설득시켜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교린(交隣) 전략으로 우호국을 확대하여야 한다. ‘교린’전략은 주변국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돈독히 하여 패권국가의 독단을 견제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이다. 국가의 역량은 변할 수 있지만, 지리적 위치는 변할 수 없다. 국경을 맞대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있는 주변국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웃국가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어떤 나라이든 상관없이 주변국과의 불화는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국가도 개인과 같이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적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다. 게다가 오늘날은 통신과 이동기술이 발달하고, 한국의 국력도 신장되면서 주변국의 범위도 점차 넓어졌다. 이제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의 국가들만이 주변국이 아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주변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확대된 범위의 주변국들과의 선린·우호관계의 구축과 발전은 격동하는 세력변동의 시대에 생존과 번영이라는 국익의 보호와 확장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주변국 외교는 다양한 국가와 서로 협업하는 네트워크 구축 외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외교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혼자서는 안되고 여럿이 함께 해야 한다는 데 있다. 세계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과거에는 G7이면 충분하였지만 이제는 G20이 필요한 시대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들을 엮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변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확대·강화하여 가능한 많은 수의 내편을 모으는 것이다. ‘뜻을 같이 하는(like minded) 국가’들을 모으고 모임을 주도하는 외교다. 작은 수가 모이면 다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내편이 많아지면 세력(collective power)이 형성되고, 세력의 힘으로 강대국의 권력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한국은 저개발 중·소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국가이다. 식민지와 분단 그리고 전쟁을 겪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매력적인 성공모형이다. 네트워크 구축 외교를 위한 충분한 외교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강화하고 국제정치 및 지역정치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여와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의 영향력 공간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원칙’을 정하고 일관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미국의 패권적 국제질서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급성장하는 중국에 의해 추월당할 것인지를 걱정하며 중국과 경제, 통상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역외 균형자’로 믿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도 더욱 강화하는 ‘양다리 걸치기’ 또는 ‘위험대비책(hedging)’을 추진하고⁴⁵⁾ 있지만, 이는 자칫 양측 모두에게 외면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더구나 한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양다리 걸치기’ 전략을 구사하기도 어렵다. 한국은 ‘원칙’에 기반한 전략적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원칙의 첫째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기준, 규범, 그리고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을 준수하는 것이다. 즉 자유, 민주, 인권과 같은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가치의 증진과 확대를 원칙으로 삼아, 이에 부합하는 어젠다의 경우 그것이 미국주도이든 중국주도이든 차별을 두지 않고 적극 지지·협력하는 것이다. 보편가치라는 원칙과 국제기준을 지키면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비난할 명분이 없고, 그 정당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IIB⁴⁶⁾ 가입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AIIB의 지배구조와 운용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중국을 설득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을 설득한 바 있다. 두 번째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무역구조를 일관되게 지지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무역구조는 한국이 번영을 이룬 토대였다. 국제사회가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호혜와 평등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여야 한국의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유지라는 분명한 원칙을 정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면 한국의 국익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이므로 주변 4대 강국중 어느 나라도 다른 한 나라가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영향력

45) 김우상, 『신한국책략Ⅲ』(서울: 세창출판사, 2012), p. 5.

46)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 대항하기 위해 2016년 1월 중국의 주도로 설립된 은행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을 가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어느 강대국도 한국을 무시하고 동북아 질서 재편을 도모할 수 없다. 미국도 아태지역 및 동아시아 질서에서 한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중국 또한 그들이 역사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동북아 질서 재편에 한국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⁴⁷⁾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보편적 원칙과 함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 준다면 미중 전략경쟁의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공간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하여야 한다.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한국과 중국의 교역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고, 2004년에는 제1의 교역 대상국으로, 2007년에는 최대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2019년 현재 한국의 대중국 교역은 전체 교역의 1/4에 해당하는 24.9%를 차지했다. 한국의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이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동반자, 최대 수출시장, 최대 수입대상국이자 최대 해외투자대상국이다. 그러나 대중국 경제 의존도의 증대는 양날의 검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관계가 악화되면 아킬레스건이 된다. 2016년 사드 사태가 좋은 사례이다.

2016년 7월 한국과 미국은 한국에 ‘사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2012년부터 미국은 사드배치를 줄기차게 요구하였지만 결정을 유보하였던 한국이 전격 배치를 결정한 것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결정적이었다. 중국 당국은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이후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을 시행했다. ‘한한령’이란 “한류를 억제하는 명령”이라는 뜻으로 한류 콘텐츠의 중국내 진입 또는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명령을 뜻한다. 중국정부는 한국으로의 관광을 제한하고, K-POP공연을 취소 및 불허하고, 한국제품 불매운동을 벌였다. 사드배치 기지를 제공한 롯데는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정부는 위

47) 김원배, 앞의 책, p.217.

생불량 등 다양한 위반을 이유로 롯데 점포의 영업을 제한하였고 견디다 못한 롯데는 중국내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한한령으로 2016년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대비 약 400만명이 감소하였고,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액은 약 60조원에 이른다.⁴⁸⁾ 결국 한국은 중국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사드 추가배치 반대, 미국의 MD체제 참여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등 소위 ‘3불 정책’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관계를 무기화하여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개입한 것이다.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중국이 벌이고 있는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은 강대국 경쟁시대에 중국의 민낯을 올바르게 보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경제문제를 언제든지 외교적·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이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발전시켜야 하지만 국가 안보차원에서 과도한 의존은 피해야 한다. 최근 한국정부가 신 남방정책을 추진하여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국가들과 교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여섯째, 미중 양국의 핵심이익이 교차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여 갈등을 피한다. 영국의 파머스턴(H. Palmerston)은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오로지 우리의 이익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어느 국가이든 자국의 이익확보에 있어서는 양보나 타협이 어렵다. 특히 중국은 중화사상이라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팽배한 나라로서 자국의 이익보호에 매우 강경하며 그것이 ‘핵심이익’일 경우에는 더욱 전투적이다. 2016년 7월 2일 헤이그 국제상설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2013년 필리핀이 제소했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만장일치로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은 중국이 주장해 왔던 9단선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이 주장하는 소유권은 불법이며, 남중국해에서의 권리주장과 인공섬 건설은 국제분쟁을 악화시켰고, 분쟁지역의 산호초 및 자연환경을 파괴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중국은 PCA의 판결에 따르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⁴⁹⁾ 남중국해는 중국의 고유영토로서 핵심이익이므로 타협의 대상이

48) 차창훈, “중국의 위상제고와 한미관계,” 『현대 한미관계의 이해』 (서울: 명인문화사, 2019), p. 204.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와 동시에 남중국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확대전략’으로서 인공섬 건설, 미사일 기지 건설, 해양방위대 순찰 등 자국의 해양영토 확대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중 양국의 핵심이익이 교차하는 민감한 사안의 대표적인 사례는 사드이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허용을 두고 경제보복을 필두로 다양한 방법으로 노골적으로 보복하였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사드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 『아태지역의 탄도미사일 방어: 지지와 반대』는 “사드배치 여부는 한국이 장차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그 의미를 전략적 선택의 문제라고 평가하였다.⁵⁰⁾ 사드 사태와 같이 미중 양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되어 한국이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면 경제분야이든 안보분야이든 뼈아픈 희생을 치러야 한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핵심이익이 교차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MD체제 참여를 두고 한국정부가 취한 입장과 전략은 전략적 모호성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다. 부시 행정부(George W. Bush)시기 미국은 한국의 MD참여를 요구했다. 하지만 주변국 특히 중국의 반발이 불을 보듯 분명한 상황에서 선뜻 MD참여를 수용할 수 없었던 한국은 시인도 부인도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였다. 미국에는 전략적 중심이 짧은 한반도 전구의 특성상 군사적으로 볼 때 패트리엇과 같은 저고도 탄도미사일방어체계가 효과적이지 MD와 같은 고고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국 특성에 맞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개발·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49) 이회옥·먼홍화 저, 『한중관계의 새로운 모색』 (서울: 다산출판사, 2017), p. 69.

50) Ian E. Rinehart, Steven A. Hildreth and Susan V. Lawrence,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April 3, 2015, p. 12.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두고 미국도 중국도 반발할 수는 없었다. 앞으로도 미중 양국의 핵심이익이 한반도에서 충돌하는 상황은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해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압박을 받는 상황을 피해나가야 할 것이다.

V. 결 론

국제질서에 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원인중 하나는 그 질서가 힘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조정할 수 없을 때이다. 중국의 부상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는 지금 힘의 균형에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세계적인 범위에서는 아직 중국이 미국에 맞서기는 어렵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동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시작되는 지역이고, 강도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앞으로도 수 십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 가운데에 한반도가 있다.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미중간의 전략적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은 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군사적으로 더욱 팽창할 것이며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장하려할 것이다. 중국의 전략적 확장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핵심이익과 충돌하게 되고 결국 미중관계는 대결로 비화될 것으로 본다.⁵¹⁾ 미중간의 경쟁구조를 한국이 조정할 능력은 없다. 한국이 할 수 있는 대응은 미중간의 전략적 갈등의 여파가 한국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다. 문제는 한국은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리관유 전 싱가포르 수상은 “옛날에는 힘의 균형이라는 개념이 대체로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합한 개념이다. 사실 이제는 경제력이 군사력보다 더 중요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제적으로 급속하게 강력해 지는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의도에 불신을 갖게 되

51) Timothy R. Heath and William R. Thompson. "Avoiding US-China Competition is Futile: Why the Best Option is to Manage Strategic Futile," *Asia Policy*, vol. 13, no. 2 (April 2018), pp. 91-120.

면 한국은 경제와 경제의 대상으로 고착화되어 한중관계는 만성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고 한미동맹 관계를 소홀히 할 수도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국력 약화로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중심의 질서가 일대일로와 같은 중국이 주도의 전략으로 다시 대륙 중심의 질서로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⁵²⁾ 미국이 패권을 내어주는 시기는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아도 앞으로도 한세대 이상은 족히 소요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미국중심의 세계질서하에서 살아나가야 한다. 선불리 편승의 대상을 저울질할 때가 아닌 것이다. 결국 한국은 미국 중심의 안보협력체와 중국 중심의 경제협력체를 균형있고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만,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은 정치적으로 미국 중심의 안보협력체에 무게 중심을 두고 행동하여야 한다.

사드 배치를 두고 한미간 그리고 한중간 벌어진 사태는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좋은 교훈이 된다.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대일항전 70주년 전승절에 참가하여 중국을 상징하는 ‘천안문’ 문루에 올라 중국군의 전승 열병식을 참관했다. 한중 FTA체결도 체결하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가입하였다. 북핵문제 해결 등을 위한 한중간 우호적 분위기 조성이 목적이었지만 미국이 보기에는 다분히 한국이 중국으로 경사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중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한국에게 사드배치를 수용하라고 요구해 왔다. 한국은 중국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한국의 국가이익은 크게 손상을 받았다.

한국은 전략적 지혜를 발휘하여 미중간 전략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자강(自強)과 한미동맹의 기반으로 하는 균세(均勢), 그리고 교린(交隣) 전략을 구사하여 생존공간을 확보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

52) 김원배, 앞의 책, p.66.

서는 최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여 양국과 긴장관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소극적·피동적 행보를 보일 필요는 없다. 한국은 동북아의 주변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 약소국이지만 과거와 같은 절대적 약소국은 아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 수준도 10위권에 속하는 중견국⁵³⁾ 수준의 국력을 갖추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국가인 것이다. 한국의 강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중 양대 강대국의 전략경쟁의 여파를 차단하고 생존과 번영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논문투고일 : 2020.05.15]

[논문심사일 : 2020.05.31]

[논문수정일 : 2020.06.19]

[게재확정일 : 2020.09.14]

53) 오르겐스키(A. F. K. Organski)에 의하면 중견국은 강대국처럼 국제체제에서 정치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폭넓게,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군사 투사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역 차원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국력을 갖추고 있거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지역체제 내 현상유지를 원하는 지배 국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이다. A.F.K. Organski, *World Politics*(New York: Alfred A. Knopf, 1958), pp. 365-369.

참고문헌

-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9 RINSA 세계안보정세분석』,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9.
- 그레이엄 엘리슨 저·정혜윤 역, 『예정된 전쟁』, 세종서적, 2018.
- 김계동 외12, 『현대 한미관계의 이해』, 명인문화사, 2019.
- 김우상, 『신한국책략 III』, 세창출판사, 2012.
- 김원배, 『격동하는 동북아 지형』, 나남, 2018.
- 김주리,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35권 제4호 2019년 겨울(통권 제126호), 국방연구원, 2020.
- 김재엽,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도전과 미국의 군사적 응전(공해전투에서 다중영역전투까지),” 『한국군사학논집』,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19.
- 로버트 D. 카플란 저·이재규 역, 『21세기 국제정치와 투키디데스』, 김앤김북스, 2019.
- 리처드 하스 저·김성훈 역, 『혼돈의 세계』, 매일경제신문사, 2017.
- 미어세이머 저·이춘근 역,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김앤김북스, 2017.
- 엔췌통 저·고상희 역, 『2023년 세계사 불변의 법칙』, 글항아리, 2014.
- 유호근·설규상, “미·중관계 변화와 동북아 패권구도,” 『동북아 신질서 구축과 전략적 선택』,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6.
- 이수형, “중거리핵전력(INF) 폐기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INSS 전략보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10월.
- 이희옥·먼홍화, 『한중관계의 새로운 모색』, 다산출판사, 2017.
- 주재우, “한미 안보협력과 한중 경제협력: 중국의 패권도전에 대한 소고,” 『한국국가전략』 제5권 제1호, 한국국가전략연구소, 2020.
-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저·황성돈 역, 『전략적 비전』, 아산정책연구원, 2016.
- 최병일,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책들의 정원, 2019.
- 피터 자이한 저·홍지수 역, 『세일혁명과 미국없는 세계』, 김앤김북스, 2019.
- 피터 자이한 저·홍지수/정훈 역,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김앤김북스, 2019.

- 허욱 · 테렌스 로릭, 『한미동맹의 진화』, 에코리브르, 2019.
- 차문석, “미중의 글로벌 전략과 동북아 지정학의 귀환: 한반도 통일 위상학의 변화,” 『국가전략』 제26권 1호, 세종연구소, 2020.
- 최윤식, 『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나리오』, 지식노마드, 2018.
- 합동참모본부, 『합참』 제80호 2019년 여름호
- 헨리 키신저 저 · 이헌주 역, 『헨리키신저의 세계질서』, 민음사, 2016.
- (국방일보), 2020년 4월 28일.
- (조선일보), 2018년 2월 19일.
- (한겨레), 2018년 5월 14일.
- (세계일보), 2020년 4월 23일.
- (중앙일보), 2019년 12월 5일.
- (한국일보), 2019년 11월 12일.
- (연합뉴스), 2019년 3월 14일.
- (주간동아), 2020년 5월 24일.
- David Kang, *China Rising: Peace, Power, and Order in East Asia*,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 David Kang, “Hierarchy in Asia International Relations: 1300–1900,” *Asian Security*, Vol. 1, No. 1, 2005.
- Elbridge A. Colby and A. Wess Mitchell, “The Age of Great-Power Competition,”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20.
- Ian E. Rinehart, Steven A. Hildreth and Susan V. Lawrence,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April 3, 2015.
- Modelski, *Long Cycle of World Politic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7.
- Michael Green, et al., *Asia-Pacific Rebalance 2025: Capabilities, Presence and Partnerships*, CSIS, January 2016.
- Natiou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White House, 2017.
-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D, 2018.

The US Army TRADOC, "The US Army in Multi-Domail Operations 2028," *TRADOC Pamphlet 525-3-1*, 2018.

Timothy R. Heath and William R. Thompson. "Avoiding US-China Competition is Futile: Why the Best Option is to Manage Strategic Futile," *Asia Policy*, vol. 13, no. 2, April 2018.

Wang, Y, "China's new foreign policy: transformations and challenges reflected in changing discourse," *The Asian Forum*, 2014.

Yan Xuetong, "The Rise of China in Chinese Eye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0: 26, 2001.

China Daily, "PLA to be world-class forces by 2050," 2017.10.27.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s Strategic Countermeasures to Cope With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Kim Seung Taek

The major topic in international politics in 21st century would be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The speedy growth of China and all round pressure by U.S. to contain China makes ripple effects. The spillover effects of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will come to Korean peninsular firstly and directly. Those spillover effects has come to Korea already and are coming and the possibility of coming in huge wave is getting higher and higher. A difficult situations happened since USFK's deploy of THAAD will be just a preview of spillover effects of those strategic competition.

A dilemma to Korea is that Korea depends on U.S for security but depends on China greatly for economy. The best solution for Korea will be balanced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U.S. centered security system and China centered economy cooperation system. Korea must avoid to be sucked deeply into turmoil of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using strategic wisdom. To achieve these goal Korea should enhance self-reliant defense capability and maintain balance of power based on ROK and U.S. alliance as well as pursue a good neighbor strategy. Beside these, Korea must be careful to avoid making any unnecessary tension with U.S. and China by maintain strategic ambiguity regarding certain matters which is related to core interests of U.S. and China.

Key word :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do-Pacific Strategy Report, One Belt and One Road, A2AD, KangGunMong, Free and open Indo-Pacific.

북한 핵 억제전략분석과 대응방안 모색

방호엽 *

- I. 서론
- II. 북한의 핵위협과 핵 공격 가능성 평가
 - 1. 북한의 핵 보유 전략
 - 2. 북한의 핵 위협 능력평가
 - 3.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 분석
- III. 억제제 이론적 고찰과 한국의 거부적 억제능력 방향평가
 - 1. 억제제 이론적 고찰
 - 2. 한국의 거부적 억제능력 방향평가
- IV. 북한 핵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 1. 정치적 대응전략 모색
 - 2. 군사적 대응전략 모색
- V. 결론

* 중국 산둥대 아태연구소 초빙연구원 / e-mail: bhang1030@naver.com

논문요약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 이후 이를 소형화·경량화·다종화에 이어 수 소폭탄제조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며 핵보유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로는 첫째, 자신들이 핵보유국가가 되면 이로 인한 국제적인 군사적 위상을 향상시킨 상황에서 군사적우세권을 잡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둘째, 미군의 한반도 증원여건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셋째, 필요시에는 도발이라는 강수를 두어 한미를 이간하는 술책을 강구하려고 할 것이다. 넷째, 자신들은 이러한 주변국의 강대국 사이에서 중간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주변국을 견제하며 한국의 핵 보유여건을 철저히 배격하는 역할을 가지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는 적대적 무시전략과 무 대응전략을 적절히 구사한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에 맞는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한·미·일차원에서 군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조기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거나 발사하려고 하는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여 지상에서 파괴시킴으로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에 대한 공격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부적 억제전략을 모색하는 방법을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이다.

주제어 : 핵 보유전략, 응징적 억제, 거부적 억제, 능동적인 맞춤형 억제전략

I. 서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이를 소형화·경량화·다종화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수소폭탄으로 한국이나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¹⁾ 이에 따라 우리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에 근거하여 한미연합으로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수립하고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는 북한이 미국의 핵우산 의지를 오판하여 공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발전시킬 부분이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라고 생각한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邀擊, interception)하거나, 발사하려고 하는 핵미사일을 선제타격(先制打撃, preemptive strike)하여 지상에서 파괴시킴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을 발사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억제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방어하는 차원에서 억제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실패 시에도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부적 억제는 방어능력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상대방을 단념시키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방어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킬 체인’(kill chain)이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태세를 구비해 나가고 있지만, 이를 억제하는 차원에서는 다소 미흡한 대책이라 볼 수 있다.²⁾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북한의 핵 보유 및 핵 공격가능성에 대한 위협의 실태를 평가하고 억제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한국의 거부적 억제능력을 고찰하여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정

1) 『연합뉴스』 (2017. 09. 05)

2)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 핵무장! 우리의 대비방향” 『KIMA FORUM』 통권 제16호(2017. 09. 22), p.32.

치·군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II. 북한의 핵위협과 핵 공격 가능성 평가

1. 북한의 핵 보유 전략

북한의 핵 보유전략은 6·25 직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1960년대로 분석된다. 아울러 6·25전쟁 시에는 적화통일 일보직전에 미국의 개입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기 위해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추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개념에서 한국을 위협하고 미국의 개입을 방해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결정적인 군사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위상을 높여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 핵 보유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은 1956년 구소련의 드브나 다국적 핵 연구소 창설에 참여하여 1962년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한 후 1965년 연구용 원자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5년부터 재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어떤 정치적 압박과 제재에도 자신들의 핵개발 의지를 철저히 속이며 지속적으로 개발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까지 약 70여회 이상의 핵 뇌관 실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북한체제에서 핵무기는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한반도의 군사적 전력상태를 절대적 우위상태로 만들기 위해 핵 보유전략을 추진한 점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다.³⁾ 또한 영변의 5MW 원자로를 핵무기 개발을 위한

3) 북한의 핵전략은 ‘핵보유국의 지휘공고화’ 법령(일명 4.1핵 보유법령)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북한은 핵보유의 책임과 원인을 미국의 적대정책과 핵 위협으로 가시화시키고 있다. 이는 정정협정무력화와 한·미동맹와해 및 주한미군 철수까지를 겨냥한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플루토늄 추출에 유리한 흑연감속로인 점을 볼 때 핵개발 발전용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용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이모든 핵개발 및 보유전략이 체제유지를 위한 절대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

2. 북한의 핵위협 능력평가

북한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다가 1993년 국제원자력 기구가 특별사찰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도가 국제사회에 노출 되었다.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인 다양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여 2006년 10월 9일에 제1차, 2009년 5월 25일에 제2차, 2013년 2월 12일에 제3차, 2016년 1월 6일에 제4차, 2016년 9월 9일에 제5차, 그리고 2017년 9월 3일에 제6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총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 2차 때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확보하였고, 3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에는 그들의 일차적인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왜냐하면 2006년 제1차 핵실험 시에는 정확한 규모는 확인될 수 없었지만, 2009년 제2차 핵실험 때에는 4kt,⁴⁾ 제3차 핵실험 때에는 6-7kt의 위력으로서⁵⁾ 무기급의 핵폭발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차 핵실험 후에는 핵무기 사용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하였다.⁶⁾ 이어 4차 핵실험이후에는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핵무기 병기화의 가장 높은 단계인 핵탄두 폭발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수소폭탄은 아니어도 핵무기 보다 2~5배의 위력이 큰 증폭핵 분열탄(boosted fission bomb)의 개발에 성공하였을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⁷⁾

4) Bruce Klingner. "The Case for Comprehensive Missile Defense in Asia." *Backgrounder* (Heritage Foundation), No. 2506 (Jan 7, 2011), p. 3.

5) 『조선일보』, (2013. 02. 13).

6) 북한은 제3차 핵실험 후 그들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의하여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국가, 즉 한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권태영 외.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서울: 북코리아, 2014), p. 192.

7) 『연합뉴스』 (2016. 01. 06).

2016년에 실시한 5차 핵실험이후에는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전략 탄도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확인하였으며,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분열물질에 대한 생산과 이용기술을 통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차 핵실험은 종전 핵실험에 비해 위력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장착용 핵탄두(彈頭) 형태의 실험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⁸⁾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해 핵탄두 장착 미사일보유가 현실화된 것이란 의미로도 풀이된다. 6차 핵실험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5차 핵실험의 위력에 비해 5~6배 규모로 파악되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인공지능 추정치를 대입하면 이날 폭발의 위력은 100kt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이제 북한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어 수소폭탄이라는 핵무기로서 위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의미를 보여준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운반체 기술로서 2017년 7월과 11월에는 화성-12형(최대사거리 5,000km), 화성-15형(최대사거리 10,000km)에 대한 시험발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핵탄두 실험을 통해 완성된 핵과 자신들이 개발한 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에 적재하여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⁹⁾ 또한 북한은 핵무기제조의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 영변이외에도 비밀시설에서 플루토늄 추가추출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¹⁰⁾ 됨으로써 국방부 등에서는 “북한이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kg 보유하고 있는 것으

8) 『조선일보』, (2016. 09. 11).

9)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기밀평가를 통해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운반체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2017. 08. 09)

10) 핵 전문가인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영변 외에도 최소 한 곳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변 핵 시설이 폐기돼도 북한은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9. 02. 28).

로 판단하고 있다.”¹¹⁾

이러한 점은 북한이 이것을 모두 핵무기로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60여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¹²⁾ 2010년 11월 북한은 미국의 핵과학자들에게 우라늄 농축 공장을 공개하였고,¹³⁾ 국방부에서도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¹²⁾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¹⁴⁾ 그리고 미국의 핵과학자인 헤커(Siegfred S. Hecker) 박사도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핵무기를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¹⁵⁾ 이와 같이 지속적인 우라늄 농축이 가능한 점과 계속하여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20년에는 100개 정도까지 보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¹⁶⁾

3.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 분석

북한은 자신들의 핵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핵 위협의 강도 및 범위를 계속 확장시켜나가고 있다. 즉 대남 군사적 차원에서 보면 남북 간 재래식 군사적 균형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핵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이것은 재래식전력에 의한 위협에 한계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을 앞세운 상태에서 비대칭군사력을 군사적 외교력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에서 한반도의 위협방향을 유지하는 의도로 판단된다.

11)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8), p. 25; 국정원은 “북한은 현재 플루토늄을 50여 kg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 프로그램도 상당 수준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2019. 04. 15)

12) 홍우택·박창권, “북한의 핵전략분석” 『KINU연구총서 18-14』 (통일연구원, 2018.12.15.), p.67.

13) 김동수 외, “2013년 북한 핵 프로그램 및 능력평가” 『KINU 정책시리즈』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38.

1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8), p. 25.

15) Siegfried S. Hecker. “The real threat from North Korean is the nuclear arsenal built over the last decad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anuary 7, 2015).

16) 권태영 외. (2014), p. 175,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현재 15~60개 핵탄두를 보유했으며, 2020년에는 최소 30개에서 최대 100개까지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2019. 02. 21)

그러므로 북한은 열세에 있는 재래식 군사력보다는 핵 등의 비대칭적 군사적 위협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의도대로 한반도의 안정을 볼모로 판세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¹⁷⁾

이러한 의도는 북한이 핵보유국가임을 주장하면서 미국을 직접상대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정치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점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대남차원에서 3차 핵실험이후부터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며 한국 내 보수와 진보간의 남남갈등을 야기하는 등의 대남통일전선전술을 활성화 해 나가고 있다. 또한 대미차원에서는 제3차 핵실험 후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며¹⁸⁾ 미국본토 공격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미국본토 공격가능성에 대한 주장으로 북한은 화성-14형 2차 실험 성공경축연회를 통해 “우리(북한)식의 위력하고 다종화된 로케트들이 백두산대국의 핵 병기창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고 밝힌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¹⁹⁾ 여기에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 600기 이상, 노동 미사일 200기 이상 등 1,000여기 정도의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²⁰⁾ 핵미사일의 이동식 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도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 공격능력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된다.

17) 북한이 한국의 어느 특정지역이나 목표를 상으로 기습인 공격을 감행하여 목표를 달성 후, 정치적 협상을 요구하고 한·미 양국이 어떤 응징조치를 취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공격으로 확보한 것을 기정사실화 할 수도 있고, 정치협상에 응해 올 경우에는 핵무기를 통해 주도권을 잡고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주도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처음부터 제한전쟁 도발 후 중단, 또 다른 제한전쟁 도발을 반복하면서 한국 내에 전쟁에 대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남 갈등을 유도하여 한국 사회를 혼란 상태로 빠트리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차동길, “북한의 전쟁전략실체에 관한 실증·해석적 연구” 『경기대 박사논문』 (2014. 6). p104.

18)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하려면 미사일 직경(스커드 B의 경우 90cm 정도)이하로 소형화하고, 탑재중량(스커드 B의 경우 1t 정도) 이하로 경량화해야 됨.

19) 『중앙일보』 (2017. 07. 31)

20) 홍우택·박창권, (통일연구원, 2018. 12. 15.), p. 67.

북한은 이러한 핵 공격가능성을 빌미삼아 한국과 미국을 정치적으로 위협하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 첫째, 제3차 핵실험 후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의하여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국가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침을 법률로 명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²¹⁾ 둘째, 4차 핵실험이후에는 “조선은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위력을 최종 확인하였으며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된으로써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 5차 핵실험이후에는 “우리가 최강의 핵 억제력을 갖춘 것은 바로 미국의 강권과 핵위협공갈에 맞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고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라며 미국을 상대로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한반도의 한미동맹 와해에 그 목적을 두고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미국 내 국민여론조성에 필요한 심리전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미 우선주의’에 대한 정치적 여건을 이용하여 미국의 핵 공격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미국 내 여론을 한미동맹와해나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해도 개입하면 안 된다는 등의 여론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때문에 자신들이 의도한대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게 되면 필요시 한국에 핵무기 사용을 위협한 가운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비정규전 수단인 특수부대 등의 세력을 이용하여 한국 내 지금까지 도발했던 것과 다른 차원의 도발을 계획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²²⁾ 왜냐하면 공권력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한국의 정치상태를 이용하여 한국 스스로 붕괴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오판하는 부분과 함께 설령 군사적으로 반격하려고 하면 핵 공격

21) 북한은 핵의 용도를 ‘전쟁 억제’와 ‘섬멸 보복타격’ 용으로 사용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사용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미국에 동조하는 나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 시기에 있어서는 핵전쟁이든 재래식전쟁이든 북한을 침략하고 공격하는 나라에 대해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태영 외. (2014), p. 192.

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8), p.23

위협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III. 억제 이론적 고찰과 한국의 거부적 억제능력 방향평가

1. 억제의 이론적 고찰

이론적으로 억제는 상대방이 공격을 시도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것을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라고 한다. 그리고 성공하더라도 기대되는 이익보다 더욱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인식시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라고 말한다. 이러한 억제의 공동적 개념은 핵 보유국가간 서로의 핵 공격행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서로 간 피해가 크다는 점을 상호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핵을 보유한 국가 간에는 적용될 수가 있다. 하지만 핵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의 경우는 핵 방어수단이 미흡하게 되면 억제의 효과가 저하된다. 억제를 냉전 기간에 적용된 사례를 보면, 미국과 구소련은 상대방의 공격에 생존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전략폭격기, 전략잠수함을 집중적으로 증강하였다.²³⁾

이러한 핵억제전략은 상대방이 도발할 경우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unacceptable damage)를 각오해야 된다는 점을 서로 간에 느끼게 됨으로써 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 응징적 억제 논리이다.²⁴⁾ 즉 상대방이 먼저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생존한 핵무기로 반격을 가하여 상대 국가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논리이다. 그래서 냉전시대에 미국과 구소련은 상대방의 선제공격으로부터 생존 가능한 대륙간탄도탄(ICBM), 전략폭격기(ALBM), 전략잠수함(SLBM)을 구비하고자 노력하였고, 상호확증파괴전략(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라는 개념으로 대규모

23) 미국은 이것을 삼각축(Triad)이라고 명명하고 학자들은 이러한 논리를 상호확증 파괴전략(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으로 분류함.

24) 정재욱, “북한의 군사도발과 ‘적극적 억지전략’의 구현 방향.” 『국제정치논총』, 제52집 1호(2012), p. 139.

보복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응징적 억제는 핵보유국가간에만 억제논리가 발생하고 더불어 치열한 핵 군비경쟁을 유발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가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게도 할 수 있는 핵미사일에 대한 핵심적 억제요소는 거부적 억제능력이다.

최근 미국이 핵미사일에 대한 요격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공중에서 요격하는 능력이 점차 적용되어가는 실정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개발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발사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즉 거부적 억제에 주안을 두고 핵전략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거부적 억제는 충분한 방어력을 구비하여 적이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공격자의 목표확보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주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통제하는 가운데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1983년 미국의 레이건(Ronald W. Reagan) 대통령은 ‘전략적 방어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을 제시하여 공격하는 상대방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것을 강조하였고, 이로써 재래식 전쟁에 적용되어온 거부적 억제가 핵전략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2,000km 이상 고도의 외기권을 통하여 음속의 10-20배로 공격해오는 상대방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직격파괴(直撃破壊, hit-to-kill: 몸통을 직접 타격하여 파괴시키는 것)하는 기술개발을 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2004년부터 핵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무기체계를 실전에 배치하기 시작하였고,²⁵⁾ 그 후로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를 구축해 나갔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일본 등 미국의 우방국들은 거부적 억제의 형태를 도입해 나가고 있고, 점차 세계 다른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이다.²⁶⁾ 아직도 응징적 억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이미 핵전략에서 거부적

25) 미국의 BMD 현황은 <http://www.mda.mil/system/system.html> 참조.

26) 세계적 BMD 현황은 <http://www.missiledefenseadvocacy.org> 참조.

억제는 상당한 비중을 지니게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2. 한국의 거부적 억제능력 방향평가

가. 요격능력(hit-to-kill) 구비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의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왜냐하면 1990년대부터 BMD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²⁷⁾이 지속되면서 항공기 요격용의 PAC-2 미사일과 해상의 SM-2 미사일만 확보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KAMD도 “한국의 미사일 방어는 미국 MD 참여”라는 일부 국민들의 주장으로 인하여²⁸⁾ 정치적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을 피하고자 PAC-3 지상배치 단거리요격미사일에만 의존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다가 지금은 KAMD를 조기경보체계, 지휘통제체계, 요격체제로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 레이더에 의하여 적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면 이를 작전통제소에서 분석한 후 최적 요격포대에 명령을 하달하고, 요격포대가 자체 레이더로 추적하여 요격하는 개념을 정립하여 체계별 필요한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경보체계로는 이스라엘로부터 구입한 그린파인 레이더와 함께 PAC-3 요격미사일로 15km 고도에서 요격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중첩된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방어력 차원에서 충분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중거리 및 장거리 지상 요격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중첩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내일 당장이라도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요격능력을 갖추기에 아직은 완벽한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국의 사드(THAAD)를 보강하여 추가적으로 배치하고,²⁹⁾ 지속적으로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확률을 높이는 연구를 지속하면서

27) 『동아일보』 (1999. 8. 15).

28) 정옥식, 『미사일 방어체제(MD)』 (서울: 살림, 2003).

29) 『조선일보』 (2014. 10. 08).

필수적인 중첩방어(multi-layered defense) 능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나. 선제타격능력 강구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공격은 핵의 거부적 억제 및 방어라는 점에서 선제타격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러한 선제타격은 적의 공격이 임박(imminent)하였다는 증거에 기초하여 시작하는 공격이지만, 그 임박성에 대한 동의가 어려워 국제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임박하다는 데 대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상황이거나 너무나 압도적인 위협이면서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을 허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³⁰⁾ 왜냐하면 북한의 핵개발 이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³¹⁾

지금 우리의 현실은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이 미흡함으로 인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가 발견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타격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³²⁾ 이것은 ‘킬 체인’이라는 방법으로 탐지(1분) → 식별(1분) → 결심(3분) → 타격(25분)의 절차로서 30분 내에 선제 타격하는 것이다.³³⁾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탐지를 위한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와 정찰위성의 역할이 중요하다.³⁴⁾ 둘째, 타격 능력에서는 현 지대지 미사일 성능향상과 함께

30) <http://www.hoover.org/publications/hoover-digest/article/6590> (검색일: 2020. 4. 26).

31) 김찬규. “무력공격의 개념 변화와 자위권에 대한 재해석.” 『인도법논총』. 29호(2009), p. 7; 제성호. “유엔헌장상의 자위권 규정 재검토: 천안함사건에서 한국의 무력대응과 관련해서.”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1호(2010), p. 73; 김현수.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연구.” 『해양전략』. 제123호(2004), p. 260.

32) 『조선일보』(2013. 02. 07).

33) 권혁철.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킬 체인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제178호(2013년 가을), p. 38.

34) 우리 군은 “이번에 도입하는 총 4대의 글로벌호크는 최대고도 60,000피트, 최대32시간까지 작전수행을 할 수 있으며 2020년 연말쯤에 1호기가 작전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 12. 05)

첨단의 다양한 타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전투기에서의 원거리 정밀타격이 필요하고 또한 잠수함이나 함정의 정밀타격능력도 증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타격능력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F-15 전투기와 첨단 정밀유도탄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지만, 독자적인 글로벌 호크를 비롯한 감시·정찰 능력은 아직은 완벽한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타격목표를 정립하기 위해 감시·정찰 능력을 좀 더 보강하여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제타격에 대한 결행 결심도 미군과의 협조문제로 인하여 독자적인 결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책임문제 등의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필요시 선제타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성공적 구현을 위한 능력을 집중적으로 확충하고, 직접파괴 등의 위력을 북한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차원에서 미리 협약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 북한이 체제유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정책은 결국 핵 공격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다가 핵 공격을 받은 다음에 반격하는 것은 오히려 많은 국민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이후의 핵 공격가능성도 그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핵미사일 공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대응방법은 사전에 선제타격이나 발사후의 직접파괴 등을 실시하기 위해 사전 또는 동시격파라는 방침을 사전에 설정해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러한 공격가능상황을 평가하는 징후목록을 설정해두고 요격절차를 사전에 정립해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 한미공조체계가 이러한 점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더욱 세밀하고 정밀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선제타격이나 동시격파의 성공을 위해서는 타격력도 중요하지만 정보의 중요성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전에 북한 핵미사일 보관 장소, 이동상황, 발사 징후 등에 대한 정확한 첩보나 정보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미국 및 일본과 정보공유를 철저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과 협정을 체결한 정보보호협약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

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공유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첩보나 정보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무인정찰기나 인공위성을 확보해 나가는 계획과 함께 신뢰성 있는 첩보나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인간정보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이는 의심되는 지역에 고정간첩 등을 활용하여 정보수집 및 타격을 유도 할 수 있는 비밀요원을 만들 필요가 있고, 필요시 북한 내부에 필요한 정보수집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킬 체인에 필요한 선제공격이나 동시타격의 경우에는 결정자체도 어렵지만, 발사전후의 제한된 시간 내에 성공시키는 것도 쉽지는 않다. 따라서 이를 위해 선제타격과 동시파괴 등에 대한 계획과 능력을 발전시키고, 상황별로 최적의 전력상태를 완비하기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선제타격에 필요한 수단 중에 스텔스기에 의해서 북한의 방공망을 회피하여 공격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연구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2019년까지 총 13대를 도입 완료하였고 2021년까지 27대를 점차적으로 도입 완료하여 총40대를 확보하는 능동적 억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³⁵⁾ 따라서 확보 전까지 보완책과 향후 이를 응용하는 단계까지 고려하여 미국과의 작전협조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유사시 성공의 확률증대와 함께 북한에 대한 억제효과까지도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 평시 억제능력 운용체제 강구

평시억제능력에는 지상, 공중, 그리고 해상 및 해저에 분산 배치된 응징용 정밀타격 무기체계(PGM)와 플랫폼, 그리고 이들을 운용하기 위한 감시정찰 자산(ISR)과 지휘·통제·통신·컴퓨터(C4)자산 등의 비 WMD첨단 재래무기들을 활용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중에 타격무기는 육·해·공

35) 공군은 현 안보여건을 필요로 하는 전투기의 최소 숫자를 430대로 보고 2019년부터 F-5, F-4등의 노후기종들이 도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력화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다. 정영태 등,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KINU 연구총서 14-11(2014.12) p.192.

군이 운용하는 지상, 공중, 그리고 해상 및 해저에서 발사되는 체제이다. 한반도 여건에 부합하는 첨단타격무기의 숫자와 다양성은 북한이 남쪽을 향해 배치하고 있는 각종 미사일들을 압도하는 목적들을 달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속성, 정밀성, 생존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응징수단들을 차질 없이 운용하기 위해서는 첩보수집 자산과 이를 지휘 통제하는 자산이 필요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북한이 평시에 국지도발 등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첩보수집자산 중에 감시정찰과 신호정보 자산과 함께 인간정보 자산은 첩보수집활동의 연계성을 보장 할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폐쇄된 사회체제의 특성으로 많은 제한사항이 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역량이 튼튼하게 구비되어 있다면 이 또한 그들의 의도가 드러나는 차원에서 이러한 절차가 오히려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 도발유형에 대한 억제능력을 갖추기 위한 과제로서는 먼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차원에서의 도발과 북한의 핵 보유가 어느 정도 가시화된 이후의 도발유형으로 구분하여 억제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서는 끈임 없이 미사일 실험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첩보 및 정보획득과 신무기 확보노력 등을 통해 미사일실험에 대한 직접격파 등의 거부적 억제능력을 강화해야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드(THAAD)와 PAC-3 미사일방어체제를 완성하는 점에서도 시기성을 고려하여 완벽한 억제능력을 갖추는데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 가시화된 이후에는 좀 더 강력한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요시설이나 정찰기 등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나 간첩, 특수세력 등을 이용한 국가주요시설 파괴나 생화학물질을 이용한 테러, 그리고 전자전 및 사이버해킹을 통해 공권력의 무력화를 유도하여 남남갈등을 형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국민적 단합된 내실을 강구하고 필요시 강력하고 신속한 응정보복능력을 갖추기 위한 협조된 동맹협약 등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때 우리는 다양한 공격의 적기를 놓쳐버렸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러한 침략의 형태가 나타나면 즉각적인 응징의 역할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우리의 첨단무기 등을 통해 이를 반드시 징벌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북한이 핵 보유나 도발에 대한 야욕을 갖지 못할 것이며 우리국민들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어 이것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밑받침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핵보유국에 대한 인정과 향후를 고려한 공격수단은 지상뿐만 아니라 공중 및 해상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발전시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평시능동적인 억제전략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 방위적으로 능동적인 응정보복의 능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IV.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1. 정치적 대응방안 모색

가. 적대적 무시전략(malign neglect)과 무 대응 전략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치적 대응방안 중에 ①대화와 협상, ②강압외교와 봉쇄, ③적대적 무시와 무 대응 전략 등을 고려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핵 보유 의도가 자신들의 체제유지가 우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고, 과거 6자회담, 남·북, 미·북 정상회담 등을 통한 대화와 협상 그리고 강압외교와 봉쇄 등의 압박 정책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점을 고려 시 이제는 적대적 무시(malign neglect)나 무 대응 전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³⁶⁾ 따라서 이러한 적

36) David J. Bishop. "Dismantl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SSI Monograph*.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5.

대적 무시나 무 대응 전략은 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핵무기 포기상황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핵문제 해결방안은 적대적 무시나 무 대응전략이 적절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체제유지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더욱 강력한 제재로 북한정권의 갈등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면에서의 적대적 무시전략과 무 대응 전략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를 위한 방법론에서 북한정권의 심리전전도를 무시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실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적대적 무시전략과 언론차원에서의 무 대응 전략을 적절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국내외적인 국민적 공감대 마련에 주력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치·군사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방법만이 존재하게 만들어야 한다. 즉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국민의 하나 된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는 필요시 국민투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사드배치문제와 핵 추진잠수함 건조 문제를 국민투표로 정하게 되면 이것이 정치적 쟁점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드배치와 핵추진잠수함확보는 북한뿐만 아니라 미래주요전장공간의 우세를 선점하는 진정한 역비대칭전력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제한사항에도 방해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국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적으로 국민여론을 하나로 만들고 나서는 국제적 지원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먼저 핵확산 금지조약(NPT)회원

국으로서 핵무기 개발 계획이 없음을 대내외에 알리고 최소한 방어적 차원에서 추가적인 사드(THAAD)배치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 등이 필요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병행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요격능력을 완비하고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24시간 추적·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배치를 단계별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군사적 대응방안 모색

가. 한·미·일 협조 체계 마련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ICBM)과 잠수함 탄도탄 미사일(SLBM)³⁷⁾은 한국, 미국, 일본 모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양국은 이미 동맹관계일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재하고 있어 유기적인 협조가 보장되지만 한국과 일본 간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과거에 체결한 한일 정보협조체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등이 정치적 상태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점³⁸⁾을 고려하여 정치와 군사부분을 철저히 배격하는 한일양자 간의 협정을 통해 전반적인 북 핵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튼튼한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 핵위협제거나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SLBM에 대한 모든 정보와 타격무기, 전술과 교리, 훈련에 관한 협력, 그리고 관련정보까지 모든 정보공유와 필요시 합동작전까지 구사할 노력을 강구하며 이를 북한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문제로 1993년 825호부터 실시한 유엔결의안이 이제 2019년 2464호를 통해 무려 16번이나 발효되어 철저한 봉쇄를 실행하고 있지만,³⁹⁾ 이에 따른 국가 간의 협조와 압박이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지 못하

37) 북 SLBM 잠수함 3척 동시 건조시설 갖췄다. 『연합뉴스』 (2020. 05. 08)

38)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결국 종료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극적으로 연기됐다. 『연합뉴스』 (2019. 11. 22)

39) 「위키백과」 “유엔안전보장결의 현황” (검색일: 2020. 4. 29)

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발전시켜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과 관련된 현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관련된 제반조치를 협조하며 압박하는 체계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 분야에서는 미국이 선도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가 갖추어져야 하고 정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필요시 완벽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나가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3개국의 잠수함 전력을 하나의 전략적 틀로 형성하게 되면 북한 잠수함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거나 필요시 파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가 있을 것이다.⁴⁰⁾ 북한은 3개국의 잠수함 협조전략의 사실만으로도 자신들의 잠수함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때문에 한·미·일 차원의 정보공유와 대응에 필요한 협조체제를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한미연합대응체계 강구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미 연합 ‘킬 체인’을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까지 구축해야 한다. 이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와 SLBM 탑재 잠수함을 평시부터 킬 체인의 타격 대상에 포함시켜 감시하고 유사시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과 SLBM 잠수함을 추적·감시하여 핵미사일 발사를 억제하고, 발사 시에는 수상이나 육상에서 요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작전적여건 마련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합참은 한·미 연합으로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효과적으로 지휘할 새로운 연합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위성, 정찰기 등 한·미 연합 정찰 및 감시 자산으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도와 SLBM 탑재 잠수함의 위치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는 역량을 결집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KAMD와 킬체인 등의 능력을 완성하기 전까지 힘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억제에 대한 완충적인 효과이기 때문이다.

40) 2015년 4월 제1차 대잠수함전 협력위원회(ROK-US Cooperation Committee)와 같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둘째,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한미연합작전지침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⁴¹⁾ 이는 보다 긴밀한 한·미 간 연합작전체제 구축을 통해 결정적일 때 북한의 미사일실험이나 발사에 대한 격파능력을 갖추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는 육·해·공군의 한·미 작전세력이 실시간으로 24시간 감시태세를 강구하고 유지해 나가야만 작전 성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상에서의 추가적인 사드(THAAD)배치는 물론이고 육상과 해상에서의 PAC-3요격 시스템을 완비하여 단 한발의 핵미사일도 놓치지 않고 요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이 실시할 수 있는 핵미사일공격 가능성에 대한 지상·해상·공중에서 공격할 수 있는 요격능력을 갖추어 필요시 미사일 실험에서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거부적 억제능력을 갖추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V. 결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금은 정치·군사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야만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철저한 대비체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억제력 발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시 자연히 군사적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첨단재래식 전력의 확보필요성에 더욱더 가중되는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이러한 비대칭차원의 열세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보유국가임을 주장하며 미국을 직접 상대하면서 한반도 군사문제를 협의하며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에서 이를 느낄 수 가 있다. 때문에 한국을 배제하며 전반적인 문제를 미국과 협상하려는 의도 속에 한국은 자칫하면 정치·군사적인 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도 끌려가는 상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다.

41) 한미는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4D 작전개념'을 합의한 이후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 협의회의에서는 '4D 작전개념'에 기반 하여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수행과 능력향상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반영한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하였다.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8) pp. 52~53.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핵·경제병진노선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다.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며 경제적 보상여건을 마련하며 이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게 된다면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협상전술에 말려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경제병진노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공세적인 대남정책에 자신감을 표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미차원에서는 북한의 핵 무력 수단은 한미동맹을 이완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북한의 핵 카드에 단호하게 불허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미 본토가 핵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미국국민들의 여론이 지금과 같은 한미동맹의 보호우산을 접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추구하고 핵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립할 수 있다. 첫째, 자신들이 핵보유국가가 되면 이로 인한 국제적인 군사적 위상을 향상시킨 상황에서 군사적우세권을 잡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둘째, 미군의 한반도 증원여건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셋째, 필요시에는 도발이라는 강수를 두어 한미를 이간하는 술책을 강구하려고 할 것이다. 넷째, 자신들은 이러한 주변국의 강대국 사이에서 중간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주변국을 견제하며 한국의 핵 보유를 철저히 배격하는 역할을 가지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갖추기 위해서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은 국가생존이 달린 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치·군사적으로 전 방위적인 대응능력을 갖추어 북한 핵 위협을 철저하게 무력화하는데 온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된다.

[논문투고일 : 2020.05.15]

[논문심사일 : 2020.05.31]

[논문수정일 : 2020.06.19]

[게재확정일 : 2020.09.14]

<참고 문헌>

-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8).
- 권태영 외.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서울: 북코리아, 2014).
- 권혁철.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킬 체인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제178호(2013년 가을).
- 김동수 외.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KINU 정책시리즈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김찬규. “무력공격의 개념 변화와 자위권에 대한 재해석.” 『인도법논총』. 29호(2009).
- 김현수.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연구.” 『해양전략』. 제123호(2004).
- 정영태 등,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KINU 연구총서 14-11(2014.12).
- 정육식. 『미사일 방어체제(MD)』 (서울: 살림, 2003).
- 정재욱. “북한의 군사도발과 ‘적극적 억지전략’의 구현 방향.” 『국제정치논총』. 제52집 1호(2012).
- 제성호. “유엔헌장상의 자위권 규정 재검토: 천안함사건에서 한국의 무력대응과 관련해서.”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1호(2010).
- 홍우택·박창권, “북한의 핵전략분석” 『KINU연구총서 18-14』 (통일연구원, 2018. 12. 15.).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 핵무장! 우리의 대비방향” 『KIMA FORUM』 통권 제16호(2017. 09. 22).
- 차동길. “북한의 전쟁전략실체에 관한 실증·해석적 연구” 『경기대 박사논문』 (2014. 6).
- 『동아일보』 (1999, 08, 15).
- 『연합뉴스』 (2016. 01. 06), (2017. 08. 09 / 09. 05), (2019. 02. 08 / 02. 21 / 02. 28 / 04. 15 / 11. 22 / 12. 05), (2020. 05. 08).
- 『조선일보』 (2013, 02, 07 / 02. 13), (2014, 10, 08), (2016. 09. 11).
- 『중앙일보』 (2017, 07, 31).

「위키백과」 “유엔안전보장결의 현황” (검색일: 2020. 4. 29).
<http://www.hoover.org/publications/hoover-digest/article/6590>, (검색
 일: 2020. 04. 24).
<http://www.hoover.org/publications/hoover-digest/article/6590>, (검색
 일: 2020. 04. 24).
<http://www.mda.mil/system/system.html>, (검색일: 2020. 04. 29)
<http://www.missiledefenseadvocacy.org>, (검색일: 2020. 04. 29)
 Bruce Klingner. "The Case for Comprehensive Missile Defense in
 Asia." *Backgrounders* (Heritage Foundation), No. 2506 (Jan 7,
 2011).
 David J. Bishop. "Dismantl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SSI Monograph*.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5.
 Siegfried S. Hecker. "The real threat from North Korean is the
 nuclear arsenal built over the last decad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anuary 7, 2015).

Abstract

Analyzing North Korea'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and seeking countermeasures

Bhang ho yup

North Korea is trying to become a nuclear power state after claiming that after six nuclear tests, it has succeeded in miniaturization, lightening, and diversification of hydrogen bomb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nuclear attack both at home and abroad while pursuing an appropriate strategy of disregard. And militarily, the South Korea, United States, and Japan need to have the ability to intercept North Korean nuclear missiles. This will be a deterrence strategy that will cause North Korea to lose its ability to attack nuclear missiles.

key word: Nuclear holding strategy, deterrence by chastisement, deterrence by denial, Active and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국가안보에 대한 군과 언론의 갈등 형성 배경과 발전 방안

윤원식 *

- I. 서론
- II. 알권리와 언론자유, 국가안보와의 관계
- III. 군과 언론의 갈등 관계 형성 배경 고찰
- IV. 군과 언론 간의 갈등 해소 및 발전 방안
- V. 결론

* (예)육군 대령, (재)글로벌스마트융합센터장, 국제정치학 박사
주요 논저: 국가안보 위기시 군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등
e-mail: ywshik@daum.net

논문요약

이 논문은 국가안보 의제에 있어서 군과 언론의 갈등 관계에 대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군과 언론관계에 있어서 갈등관계 형성의 특수성을 고찰한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군과 언론간의 갈등 형성은 근본적으로는 1948년 8.15 광복 전후의 시기에 발생한 남북분단과 그로인한 이념 대립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이념대립의 문제가 우리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반감과 부작용이 군과 언론 관계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왔다. 광복 이후 한국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서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한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와 국가안보 이슈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지금까지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상태이다.

그동안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언론 환경의 변화를 비롯하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이 동시화·개방화되었고 국민의 군에 대한 시각과 언론에 대한 이해 수준이나 관점도 다양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 당시의 이념 대립으로 인해 형성된 군과 언론 간의 근본적인 갈등은 별다른 시스템의 변화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군과 언론 상호간의 갈등 해결과 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국가안보 관련 이슈에서 시대 변화와 언론 환경의 변화에 부합되는 군과 언론 관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군과 언론의 갈등, 알권리, 언론자유, 이념대립, 국가안보

I. 서론

군과 언론의 갈등관계에 대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중의 하나인 Alan Hooper는 군(軍)과 언론(言論)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스페인 내전(1835년-1837년)때부터 ‘불편한 관계’에 있어 왔다고 했다.¹⁾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군과 언론 간에는 기본적으로 갈등이 있다.²⁾ 그것은 군의 기밀보호와 군사작전에 대한 보안유지를 우선시하는 군의 인식과,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와 보도를 통한 정보공개가 우선이라는 언론의 인식이 상충되는 데서 비롯된다.

이와 같이 국민의 알 권리를 둘러싸고 기본적으로 군과 언론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보편적인 현상이다. 군의 ‘보안우선의 기밀주의’와 언론의 ‘알권리 우선의 공개주의’로 인한 갈등은 국가안보 위기와 관련된 이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이기에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추구하는 이념가치 등과 비교하여 다른 어떤 요소들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무분별한 표현과 언론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³⁾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언론의 보도가 군과 언론 관계는 물론,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한국의 군과 언론간의 갈등은 남북분단 전후에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갈등과 반공주의와 군부권위주의의 수용과 거부로 인한 문제가 갈등 형성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군과 언론 간의 갈등과 마찰은 왜 발생하는가? 그러한 갈등 관계의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군과 언론간의 갈등은 해소될 수 없

1) Alan Hooper, *The Military and The Media* (England, Gower Publishing Co., 1982). 차영구 역, 『군과 미디어』 (서울: KBS영상사업단, 1985), p. 15.

2) 영국의 언론인 크로지어(S.F.Crozie)는 1954년에 그가 기고한 *Army Quarterly*에서 “저널리스트와 군인처럼 서로를 불신하려는 집단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군과 언론의 이러한 불신의 1차적 원인은 서로가 상대방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Alan Hooper(1982). 차영구 역(1985), p. 18에서 재인용

3) 한국언론정보학회,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2), p. 176.

는 것인가? 하는 것에 문제인식을 토대로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 특히 한국의 군과 언론간의 갈등 관계 형성의 특수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나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알권리와 언론 자유, 국가안보와의 관계

1. 알권리의 개념과 유래

‘알권리’(right to know)라는 개념이 등장된 것은 꽤 오래 전부터이지만,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어 오늘날과 같은 현대적인 개념의 용어로 발전된 것은 2차 대전 직후인 1945년 1월에 미국 AP통신사의 전무 켄트 쿠퍼(Kent Cooper)가 뉴욕의 한 연설에서 알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에 기고하면서 부터이다.⁴⁾ 이어 그는 1956년에 『알권리』라는 책을 출간하여 알권리라는 용어를 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 한편 미국의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법률고문인 해럴드 크로스(Harold L. Cross)가 1953년에 『국민의 알권리』(People's Right to Know: Legal Access to Public Records and Proceedings)라는 책을 출간하여 알권리의 내용과 법적 근거에 대한 관심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⁵⁾ 그 결과 1966년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적인 정보의 공개를 독립된 법률로 명문화한 미국의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 FOIA)이 제정되는 배경이 되었다.⁶⁾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개정된 헌법 제5조 1항에서“모든 사람은 그 의견을 언어·문서·도화로서 자유롭게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알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⁷⁾ 한편 국제적으로는 1948년 제3차 유엔총회가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사람은 누구나...모든 수단에 의해 또 국경과는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탐구

4) 이재진, “저널리즘 영역에 있어서 알권리 기원과 개념 변화에 관한 연구”, 『언론과 학연구』 제5권 1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05), p. 241.

5) 강준만, 『미디어법과 윤리』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6), pp. 195-196.

6) 이재진(2005), p. 244.

7) 이재진(2005), p. 243.

하고 받으며 전달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⁸⁾ 그 후 1967년에 UN이 국제인권규약으로 발표한 이후 알권리라는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어처럼 사용되기 시작했다.⁹⁾

한국에서는 알권리라는 용어가 처음 신문에 등장한 것은 1964년 4월 21일 경향신문 사설¹⁰⁾이며, 학술적으로는 1969년 장용 교수가 자신의 저서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부정되는 곳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존재할 수 없으며 독재자와 국민의 알권리는 상극적인 입장에서 계속 암투를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¹¹⁾ 아울러 1961년 신문편집인협회의 개정된 신문윤리강령에는 “신문의 자유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서 끝까지 이를 옹호하여 민중의 알야 할 권리에 부응하여야 한다”¹²⁾고 명시하였다.¹³⁾

알권리의 보편적인 개념은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방해받지 않고 요구하고 또한 그것들을 받을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주권자로서 국민이 필요한 공적정보 외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문화적 객체로 생활하기 위한 정보와 인격적 주체로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에 마음대로 접근하고 취득할 수 있는 자유,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롭게 이의 공개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있다.¹⁴⁾

저널리즘 측면에서 본다면 알권리는 1922년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이 ‘여론’(Public Opinion)이라는 책에서 ‘대중의 알권리와 정부의 비밀주의’의 갈등을 간파하면서, 언론에 맡겨지는 국민의 알권리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특권’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 온 개념이다.¹⁵⁾

그런가하면 “알권리는 대외적으로 언론이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내세울 때 정당화의 명분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그러나 알권리는 언론의 권리가 아니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¹⁶⁾ 또 경우에 따

8) 이재진(2005), p. 243.

9) 한국언론연구원, 『매스컴대사전』 (서울:한국언론연구원, 1993), p. 891.

10) 이재진(2005), p. 249.

11) 장 용, 『언론과 인권: 한·미 언론법과 판례의 비교연구』 (서울: 선명문화사, 1969), p. 11.

12) 동아일보, 1961년 9월 13일. 1면

13) 이재진(2005), p. 259.

14) 김옥조, 『미디어 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p. 312.

15) 이재진(2005), p. 241.

16) 김옥조(2005), p. 316.

라서는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국민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 까지 보도하거나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경우에도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¹⁷⁾ 미국의 언론인 커트 뢰트게(Kurt Luedtke)는 1982년 미국의 신문발행인협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시민의 알권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론인들에 의해 과장되어 온 하나의 허구적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오리건 대학의 에버렛 데니스(Everette Dennis)도 “알 권리는 언론 기업들의 기업권(corporate rights)으로 전락했다”¹⁸⁾고 비판하고 있다.

메릴(Merrill, 1974)은 알권리를 하나의 신화(myth)로 보고 있는데, 다양한 외적 제약을 받는 언론사가 취재 보도하는데 있어서의 발판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언론이 헌법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믿는 데는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다.¹⁹⁾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언론이 알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비록 언론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 있어서 지식인들로부터 쏟아지는 비난 즉, 언론이란 이기적인 동기로 운영되는 집단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도 있는 것이다.²⁰⁾

2. 알권리와 언론자유에 대한 제한 범위

국민의 알권리는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알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²¹⁾ 이러한 알권리의 범위와 유형은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언론학자 제임스 위긴스(James R. Wiggins)는 알권리를 5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²²⁾

17) 강준만(2016), p. 196.

18) 강준만(2016), p. 196.

19) Merrill, J. *The imperative of Freedom*, (New York: Hastings House, 1974). 이재진(2005), p. 238에서 재인용.

20) 이재진(2005), p. 238.

21) 김옥조(2005), p. 320. 독일 기본법 제5조 1항에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①정보를 입수하는 권리 ②사전 억제나 제한 없이 인쇄 또는 방송하는 권리 ③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보복의 두려움 없이 인쇄 또는 방송하는 권리 ④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자료에 접근하는 권리 ⑤위헌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정부나 법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시민에 의하여 방해됨이 없이 정보를 전파하는 권리. James R. Wiggins, *Freedom or Security* (New York: Oxford

현대국가에서 국민의 알권리는 언론자유(言論自由, freedom of press)와 맥을 같이할 때 더욱 의미 있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언론의 자유는 “성숙한 개인 또는 이러한 개인들의 집단이나 조직 등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害)를 가져다주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²³⁾로서, 쉽게 표현하면 언론의 보도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신문·잡지·방송 등의 보도기관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관한 사건의 뉴스나 정보를 공중에게 공표 또는 전달할 수 있는 자유로서, 넓은 의미로는 보도 자료를 취재할 수 있는 취재의 자유, 취재한 보도 자료를 편집할 수 있는 편집의 자유까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결국 보도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그러나 언론자유 개념은 그 사회의 역사적·이념적 전통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고 실천의 차원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무한정 허용하는 국가는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즉 언론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국가들은 사회통합과 질서유지라는 국가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언론자유를 폭을 한정하고 있는데, 다만 국가에 따라 언론을 규제하는 정도와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²⁵⁾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국민의 알권리에서 알권리의 주체는 국민이지만 언론은 이의 대변자로 인식되고 있는데, 결국 언론에서 알권리는 개인들이 꼭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공적 정보를 국민을 대신해서 수집하고 이를 보도하는 사회적 책임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러한 알권리가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 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알권리 또는 언론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권리와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록 언론자유가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적·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충돌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⁶⁾

University Press, 1964), pp. 3-4.; 육군공보실, 『군과 언론』 (정문사, 1993), p. 19에서 재인용.

23) 한국언론연구원(1993), p.927.

24) 한국언론연구원(1993), p.543.

25) 최정호·강현두·오택섭 공저, 『매스미디어와 사회』 (서울: 나남출판, 1998), p.430.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이어 제21조 제4항에서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76조 2항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는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통해서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헌법 제77조 3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은, 언론 자유가 무제한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언론 환경에서 기자들이 느끼는 언론자유 제한은 이러한 법과 제도에 의한 속박 요인은 높지 않고, 정부나 정치권력 또는 광고주, 사주나 사장, 편집·보도국 간부들에 의한 요인이 훨씬 높다는 사실²⁷⁾에서 개념상의 인식과 실제 언론 현장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 현실이다.

3. 국가안보 이슈 관련 취재·보도와 언론 자유

군과 언론이 국가안보 위기사태에 임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호 갈등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군과 언론 관계는 그 속성상 갈등관계에 있다고는 하나 상호간의 이해를 위한 노력과 제도적 시스템 여부에 따라 그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26) 김 암, “군과 언론과의 관계 고찰”, 『국방논총』 제12호(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 1990), p. 99.

27) 정부나 정치권력(30.3%), 광고주(23.2%), 사주·사장(17.0%), 편집·보도국 간부(13.5%), 기자 자신의 자기검열(9.3%), 독자·시청자·네티즌(2.8%), 언론관련 법과 제도(2.4%), 이익단체(1.1%), 시민단체(0.6%)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의 언론인 2013』 제12회 언론인 의식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3), p. 133.

뿐만 아니라 언론이 군과 국민간의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국방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군과 국민을 이어준다는 점에서 군과 언론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과 군 간의 일체감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²⁸⁾

현실적으로 군과 언론의 갈등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의 알권리(Right to Know)’를 내세워 언론의 자유로 대변되는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둘러싼 정보공개와 정보수집의 자유를 주장하는 언론과, 국가안보를 위한 기밀보호로 압축되는 ‘국민의 알 필요(Need to Know)’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려는 군의 시각의 차이 또는 인식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상황에서는 언론의 취재와 보도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의 취재·보도에 임하는 관점이나 방법도 평소의 일상적인 상태와는 달리 군의 기밀보호나 작전보안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보도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이라 하겠다. 즉 평시에는 군과 언론 관계에 있어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상충될 경우 일반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국가안보 관련 사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나 군의 작전보안은 국민의 안전과 군사작전의 성패와도 직결될 수 있는 경시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생존권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기밀의 보호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국가의 존립과 국가의 기본질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아무리 민주주의의 존속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²⁹⁾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한 보도에서는 다양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언론

28) Alan Hooper(1982), 차영구 역(1985), pp. 18-19.

29) 최정호·강현두·오택섭 공저(1998), p. 432.

의 일반적인 보도와는 달리, 안보문제는 다양한 계층의 상이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표출되는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문제가 걸려있는 사안이므로 안보를 저해하는 요소에 대응하는 일관된 시각이 있어야 한다.³⁰⁾는 견해도 있다.

이와 같이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 군과 언론이 각각 고유의 속성과 권리·역할만 주장하고 어느 한쪽의 절대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다루게 되면 늘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군과 언론이 특정 상황에서는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이라는 차원과 관점에서의 협력과 이해를 통한 전략적 동반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일정한 제도와 틀이 마련되어 있으면 서로 간의 갈등을 줄이고 더욱 발전적인 관계가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III. 군과 언론의 갈등 관계 형성 배경 고찰

1. 군과 언론에 관한 한국의 법과 제도

언론의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하여 군과 언론 관계에 대한 방침이나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로는 ‘계엄법’ (법률 제69호 1949.11.24. 제정, 최근 개정은 법률 제14839호 2017.7.26)과 ‘통합방위법’ (법률 제5264호 1997.1.13 제정, 최근 개정은 제14839호 2017.7.26), ‘군사기밀보호법’ (법률 제2387호 1972.12.26 제정, 최근 개정은 법률 제13503호, 2015.9.1)이 있다.

또 법률은 아니나 국방부분부 및 예하 각급부대의 소속 군인 및 공무원들의 언론홍보업무와 관련된 직무에 대한 수행 지침을 규정해 놓은 ‘국방부 훈령’ 1552호 (국방홍보훈령은 최초 제정은 국방부 훈령 제480호로서 1994.7.8. 이후 2013.7.16. 재 제정되었고 가장 최근 개정은 2018.4.20. 국방부 훈령 제2153호)이 있다.

국가가 전시(戰時)나 국가비상사태를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인 계엄법은 제2조에서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

30) 이동훈, “북한 연평도 도발 사건과 관련한 방송3사 보도 태도 분석”, 자유기업원 CFE Report 143 (2010.12.16), p. 24.

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고, 경비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이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비상계엄시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으로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1980년 5월 18일에 마지막 선포 이후로 지금까지 37년째 선포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계엄법의 적용이나 집행 사례는 없다.

평상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인 ‘통합방위법’ 제10조에는 언론의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하여 합동보도본부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제1항에서 “작전지휘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의 취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 진행 상황 및 대국민 협조사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보도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항에서는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 병력 또는 장비의 이동·배치·성능이나 작전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나 지역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16조에는 ‘통제구역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나 적의 침투·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에는 인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작전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24조에서는 제16조에 규정한 “출입금지나 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통합방위법을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19조에는 통합방위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취재활동 지원을 위해 작전지휘관은 1일 한 차례 이상 통합방

위작전의 진행 상황을 취재기자단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취재를 원하는 언론기관은 작전지휘관에게 취재기자의 명단을 통보하도록 하고, 작전지휘관은 취재기자에게 식별표지를 제공하고, 식별표지를 착용한 취재기자는 취재허용지역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취재활동이 작전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취재허용지역 범위 밖에서 취재하는 기자는 안내 요원의 안내에 따라 취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취재는 선정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가 취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작전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의 구체적인 침투·도발 행위의 내용과 아군의 작전 상황 등에 대해서 일정한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령 제27조에는 통합방위법 제16조에서 규정한 통제구역 설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즉 제1항에서 “통제구역은 교전 등으로 인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구역,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 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으로 명시하면서, 제3항에서는 “통제구역의 설정기간, 설정구역, 설정사유와 통제구역에서의 행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제구역이 있는 지자체 게시판에 이 사실을 공고하고, 신문·방송에 보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방위법은 그동안 국내의 여러 안보위기 상황에서 종종 선포되어 이제는 군과 언론이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하고 있는 것과 이것이 적시에 제대로 시행되고 준수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이다. 예를 들면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에서도 연평도(행정구역상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지역에 통합방위 ‘을중 사태’가 선포되고, 이어 며칠 후에는 언론과 주민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통제구역’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서 군 작전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경우가 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구분, 지정, 공개, 해제, 처벌 등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다. 동법 제2조 2호에서 “군사기밀을 언론 등에 공개할 때는 적법한 절차를 따를 것”을 명시하고, 제7조에서 “군사기밀을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인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6796호, 1973.8.8.제정, 가

장 최근 개정은 2018.8.21. 대통령령 제29114호)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2조 2항에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하여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의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종종 문제가 된 것이 이 부분이다. 즉 언론이 일단 보도한 이후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군사기밀인지 몰랐다’ 고 할 경우에 법 집행이 애매하게 되거나, 또는 군사기밀이라고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 대한 욕심이나 언론사 간의 경쟁으로 인해 보도할 경우에 군과 언론과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강제성 있는 법 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법률은 아니지만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해병대에 소속된 인원들의 언론홍보업무와 관련한 업무수행 기준을 규정한 국방부 훈령인 ‘국방홍보훈령’이 있다. 이 국방홍보훈령은 모두 11장 53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제18조 (보도제한 및 유의사항)와 제23조(통합방위사태 시 언론 대응 기구), 제24조(전시 언론대응기구)가 국가안보 위기사태 시의 언론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 가운데 훈령 제18조에는 일반적으로 군사작전시 언론에 비공개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 또 제23조에는 통합방위법에 규정된 언론관련 사항을 적시하면서, 제2항에서 “「국가안보 위기사태 시 언론대응기준」에 따라 언론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제3항에는 “통합방위작전 취재 시에는 적어도 취재 1일 전까지는 취재 기자 명단과 ‘취재동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형적으로는 군과 언론 관계 측면에서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를 위한 여러 형태의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법과 제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적용되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과 제도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이기에 예기치 않은 여러 유형의 상황에서는 예상치 않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한국의 군과 언론 관계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특수성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2. 군과 언론 간 갈등관계 형성의 특수성

한국의 군과 언론 사이에는 이념(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오랜 사회 갈등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국의 정치체제의 선택 문제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즉 광복 전후에 소련이나 중국식의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와 미국식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 가운데 어떤 정치체제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체제의 선택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결국 좌파나 우파냐의 이념적 대립과 남한과 북한으로의 영토 분단 상황 등이 이어지면서 더욱 표면화되었고, 남북의 분단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고착화되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되었고, 이것이 다시 남북간의 이념 대립과 남한 내부에서의 이념적 남남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이념 대립은 진보주의나 보수주의나 하는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과 대결 속에서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갈등이자 주요 갈등 요소로 작용해 왔다.³¹⁾ 특히 대북문제와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념적 성향이 나타나고 있고,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³²⁾

이러한 한국사회의 이념적 대립, 즉 보수와 진보를 구분 짓는 두 개의 축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수용과 거부’라는 축과 ‘권위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또 하나의 축으로 볼 수 있다.³³⁾ 이러한 이념 대립과 갈등은 광복초기에 우세적이었던 좌파진영이 미 군정기 동안 우파 진영에 의해 축출되면서 시작되었고,³⁴⁾ 그것이 한국전쟁과 유신체제를 거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³⁵⁾ 즉 한국 사회에서 이념 대립과 갈등은, 보수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수용과 권위주의’로, 진보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거부와 자유주의’의 강조로 특징지을 수 있다.³⁶⁾

31) 권시정, “한국 언론의 국방정책 보도와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추이 변화”,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p. 6.

32) 김무경·이갑윤, “한국인의 이념정향과 갈등”, 『사회과학연구』 제13권 2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2005), pp. 37-78.

33) 권시정(2013), p. 7.

34) 김세은, “한국 보수신문의 유사성과 차별성: 조선-중앙-동아일보 사설의 이념성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15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0), pp. 37-78.

35) 조희연,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서울: 당대, 1998), pp. 91, 99-100.

한국사회의 이러한 이념 대립은 광복 후 언론 영역에서도 재현되어 좌파와 우파의 대립은 곧 좌파신문과 우파신문의 대립이 되었고, 당시 신문은 정파지(partisan press) 성격을 지녔으며, 기자들은 당파의 이념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로 활동했다고 평가되고 있다.³⁷⁾ 이로 인해 한국 언론은 공적 문제를 사회적 시각에서 보도하지 않고 계급적·당파적 시각에서 보도해 왔다고 비판받고 있다.³⁸⁾ 언론의 이러한 정파성은 공공 이슈를 신문사 나름의 정치적인 성향을 담아 보도하는 것이 상업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경향이 많다는 사실³⁹⁾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으로 한국 언론은 일제 강점기와 군부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아왔거나 정치권력과 갈등구조를 빚어왔는데, 한국 사회가 점차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유주의 체제로의 정치사회적인 변동과 더불어 언론자율화가 진행됨으로 인해 정치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강화됨에 따라 이것이 정부와 언론간의 갈등요인이 되었다.⁴⁰⁾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바탕에서 한국 언론은 이른바 이념적 성향에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으로 대별되어 특정의 이념적인 사안과 관련된 보도에서는 극단적인 어휘의 사용과 프레임을 통해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금기시할 만큼 극심한 갈등양상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⁴¹⁾ 한편 한국인들의 이념적 성향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각종 조사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보도에서는 이념 갈등이 주요한 사회갈등으로 다뤄지는 이유는 언론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념 갈등을 확대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⁴²⁾

이러한 남북간의 정치체제와 분단으로 인한 좌·우의 이념적 대립이 광복 후

36) 강원택, “정보화,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 변화 혹은 적응,” 『한국과 국제정치』 제21권 3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5)

37) 강명구, “언론 권력과 훈민적 공론장” 특집-한국 사회의 5대 권력: 역사와 그 성격, 『역사비평』 제7권 2006년 겨울호 (역사문제연구소, 2006), p. 76.

38) 김승수, “한국저널리즘의 위기와 대안,” 『언론과학연구』 제11권 3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11), p. 19.

39) 정동우, “시장지향적 저널리즘에 대한 기자들의 수용태도,” 『한국언론정보학회』 제49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10), p. 93.

40) 정군기,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른 언론의 성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p. 10.

41) 권시정(2013), p. 7.

42) 권시정(2013), p. 8.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반공 이데올로기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그 연장선상에 진보와 보수로 구분되는 언론의 정파적 이념 성향이 노출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 국가안보 관련 이슈에서 정부(군)와 언론의 갈등, 언론 상호간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한국적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동안 남북대결 시대와 군사통치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안보를 각별하게 강조해 왔기 때문에, 국가기밀의 보호로 말미암아 언론의 군에 관한 보도는 통제를 받아 왔으며 그로인해 언론 보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가 1990년대에 들어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남북한 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보도억제가 합리화되는 사례가 줄어들게 되었다⁴³⁾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면에서 국가안보 위기에 대한 의제에 있어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군과 언론, 그리고 이념이 다른 언론 상호간의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소지ಗಳು 잠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추구하는 이념 성향에 따라 매스 미디어가 지닌 여러 형태의 메커니즘을 통해 동일한 사실(fact)에 대해서도 각기 다르게 보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전문적인 식견과 합리적 토론을 요하는 국방(안보) 외교 이슈가 언론의 특정 프레임으로 인해 이념 논쟁의 덫에 걸려들면서 이분법의 틀 속에 갇히게 된다⁴⁴⁾는 점에서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와 충돌로 인한 국가안보 의제에 있어서 언론의 정파성 문제는 한국의 군과 언론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IV. 군과 언론 간 갈등 해소 및 발전 방안

군과 언론 간의 갈등이 근본적으로는 광복 전후의 시기에 비롯된 좌·우의 이념 대립 문제와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남북분단의 장기화 등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는 원인 가운데는 문제 해결

43) 최정호·강현두·오택섭 공저(1998), pp. 433-434.

44) 김경모·정은령, “네러티브 프레임과 해석공동체: 전작권 환수논란 프레임 경쟁과 해석집단의 저널리즘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제57호(한국언론정보학회, 2012), pp. 128-129.

을 위한 조정 통제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구가 미비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의 실무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몇 가지 실효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군과 언론의 교류협력 제도화를 위한 상설 협의기구 구축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안보 관련 주요 이슈나 위기사태 발생시 군과 언론이 각각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서로 간의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군과 언론 간의 상설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협의기구는 위기에 통합방위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 같은 법을 통한 강제 이전에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언론의 군 기밀 누설이나 위반의 경우에 실제로 관련법을 적용하여 엄격히 조치하기 까지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번거롭고, 사건이 종결되기 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군 당국과 해당 언론사간의 감정적인 대립과 앙금이 다른 사안으로 확산되는 등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실제 국가안보 관련 사안 발생시 관련된 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설령 언론이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제재나 통제를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법은 위법자에 대한 마지막 수단에 불과하고, 또한 현장 상황과 보는 관점에 따라 법 조항을 적용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는 실제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에서도 종종 나타났다. 작전을 수행하기에도 시급한 상황이고 연평도 곳곳에 흩어져 취재하고 있는 취재진들을 대상으로 법률 위반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고 고발 조치해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본질도 아니다. 따라서 군과 언론이 필요시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인 협의기구가 있어야 한다.

2. 군과 언론의 상호 교육 및 협력 프로그램 구축

군과 언론이 서로의 입장과 관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교차 교육지원 등의 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기자협회나 한국방송기자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워크숍 등을 할 때 군 공보 관계관과의 대화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군 작전시의 취재 기본 규칙에 대한 소개나 교육이 필요하다. 즉 군사기밀보호법 소개, 통합방위작전시의 언론의 취재에 대한 법적 규제 소개, 과거 유사사태시의 경험사례 소개, 군과 언론이 합의하여 제정한 ‘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기준’에 대한 소개 교육 등으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및 협력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한국의 언론인에 대한 의식조사⁴⁵⁾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기자들이 ‘사내외 연수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자가 무려 96.1%에 달한다는 점에서도 실효성이 클 것이다.

언론 입장에서는 특히 군사작전 등의 위험 지역 취재 시에 대비한 개인의 안전대책 강구나 취재 원칙이나 방법에 대한 교육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과의 일정한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화학가스 사고나 방사능 누출사고, 화생방 테러 상황 시 방독면이나 헬멧 착용방법, 독도법, 구급법, 응급조치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필요시 가용한 여건에 따라 군의 안전 장비를 지원하여 취재 기자의 안전을 도모해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또 점진적으로는 이러한 군사작전 취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기자에 한해서만 군 작전에 대한 취재를 허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⁶⁾

이러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은 결과적으로 국가안보 이슈나 주요 위기사안의 발생시 군과 언론이 서로 갈등과 불신을 하거나 또는 통제나 차

45)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의 언론인 2013』 제12회 언론인 의식조사(한국언론진흥재단, 2013).

46) 이에 대해서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당시 연평도에서 취재했던 방송기자들의 특별좌담회에서 외국의 분쟁지역 취재에 투입되는 기자들에 대한 사전 준비와 교육 프로그램의 예를 들어 한국 상황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단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 서로 협조하고 상생하는 전략적 동반자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V. 결론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국가안보 이슈에 대한 군과 언론의 갈등과 마찰은 그 원인과 배경을 광복 전후의 시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 좌우의 이념대립과 남북분단, 그리고 그 이후의 군정주의에 대한 수용과 거부라는 특수성이 언론을 비롯한 한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광복 이후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괄목할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나, 군과 언론 관계에 있어서는 2012년에 제정된 ‘국가안보 위기시 군 취재 보도 기준’ 외에는 외형적으로나 실제 운영 면에서 눈에 띄는 제도적 변화나 발전은 없다. 특히 올해는 군과 언론간의 갈등과 마찰 관계의 실상이 잘 드러난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천안함 피격사건’(2010.3.26.)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2010.11.23.)이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10년 전 이러한 사상초유의 군사적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 군과 언론 관계 발전을 위한 술한 공론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군과 언론 관계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움직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에 있다.

따라서 군과 언론은 이제라도 사회 전반의 시스템 발전과 국민의 의식 수준 향상에 부합되도록 국가안보 의제에 있어서도 언론의 취재와 보도,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군사기밀과 군사보안 우선주의에 대한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합리적인 적용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즉 국가안보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군사기밀과 군사작전의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가운데 국민을 상식선에서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는 군과 언론 관계로의 정립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군과 언론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추구라는 관점에 있어서 ‘전략적 동반자

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관계 설정에 충실해야 국민과 미디어 수용자들 모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문투고일 : 2020.08.18]

[논문심사일 : 2020.08.26]

[논문수정일 : 2020.08.31]

[게재확정일 : 2020.09.14]

참고 문헌

1. 국내문헌

- 강명구, “언론 권력과 훈민적 공론장 특집-한국 사회의 5대 권력: 역사와 그 성격”, 『역사비평』 제7권 2006년 겨울호 (역사문제연구소, 2006)
- 강원택, “정보화,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 변화 혹은 적응”, 『한국과 국제정치』 제21권 3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5)
- 강준만, 『미디어 법과 윤리』,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6.
- 권시정, “한국 언론의 국방정책 보도와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추이 변화”, (성균관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 권장원, “한국 언론사의 관계 권력 구조에 대한 연구: 연고에 의한 사적 신뢰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8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04)
- 김무경·이갑윤, “한국인의 이념 정향과 갈등”, 『사회과학연구』 제13권 2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2005)
- 김세은, “한국 보수 신문의 유사성과 차별성: 조선-중앙-동아일보 사설의 이념성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15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0)
- 김옥조, 『미디어 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김재범·문성철, “국가안보와 언론 자유 세미나: 천안함 사태 언론 보도 진단과 개선 방안”,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2010.5.26.
- 김철우 외, “군 비상사태시 취재보도 발전방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 보고서. 2011.6월.
- 박선원, “남남 갈등과 언론: 대북정책 보도에서 언론의 역할”, 『대북 인식과 대북정책 재론: 남북화해와 남남화해를 위하여』 경남대 북한대학원·경실련통일협회·한국NGO학회공동학술회의, (2002)
- 대한민국 정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2011.
- 대한민국 국방부, 『천안함 피격사건 언론보도 분석』, 2010.9.
- 박홍원, 『대북정책과 언론-국가관계』, 서울: 한국언론재단, 2001.
- 박재영 외 14명, 『저널리즘의 지형: 한국의 기자와 뉴스』, 서울: 이채, 2016.

- 윤석민, 『미디어 공정성 연구』, 서울: 나남, 2015.
- 이재진, 『미디어 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이재진, “저널리즘 영역에 있어서 알권리 기원과 개념 변화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5권 1호 (한국지역언론학회, 2005)
- 장 용, 『언론과 인권: 한미 언론법과 판례의 비교연구』, 서울: 선명문화사, 1969.
- 조희연,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서울: 당대, 1998.
- 최정호·강현두·오택섭 공저, 『매스미디어와 사회』, 서울: 나남출판, 1998.
- 홍성걸, “이념 양극화가 정책 과정에 미치는 영향: 정책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2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 허강준, “군사기밀의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9.

2. 기타

- Alan Hooper, *The Military and The Media* (England, Gower Publishing Co., 1982). 차영구 역, 『군과 미디어』, 서울: KBS영상사업단, 1985.
- Charles C. Moskos, *Reporting the War When There is No War: The Media and the Military in Peace and Humanitarian Operations*, Chcago, IL:Robert R. McCormick Tribune Foundation, 1996.
- Charles F. Herman, *Crisis in the Foreign Policy: A Simulation Analysis*, Indianapolis: The Bobbes-Merill Company, Inc, 1969.
- Deutsch, M, *The resolution of conflict: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process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3.
- General William C. Westmoreland, *A Soldier Reports* (Doubleday, New York, 1976). 최종기 역, 『왜 월남은 패망 했는가 - 야전군사령관의 보고서』, 서울: 광명출판사, 1976.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통령훈령 제124호, 2004. 7.12)

『국방홍보훈령』 (국방부훈령 제1552호, 2013.7.16.)

『군사기밀보호법』 (법률 제10792호, 2011.6.9.)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13호, 2012.9.21.)

『통합방위법』 (법률 제11635호, 2013.3.22.)

『통합방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4690호, 2013.8.20.)

Abstract

A Study on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Conflict between Military and Media on National Security Issues

Yoon, Won Shik

Conflict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media is a common phenomenon in a country with a liberal democratic system. In major issue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the formation of conflicts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media in Korea has one more characteristic that stems from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in addition to these general features seen in most countries.

The inherent specificity of South Korea's military and media relations is the beginning of the divis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that occurred before and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August 15, 1948. Since then, this problem has long affected military and media relations with the opposition to the authoritarian regime and its side effects in the fast-paced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our society.

Since Korea's liberation from Japan's colonial rule, Korea has seen epochal changes and developments throughout its social, economic. However, the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due to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and instability in national security issues may differ in degree, but there has been no fundamental change so far.

In the meantime, with the development of media technology, the overall system of society, including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has been synchronized and opened, and the people's view of the military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media has diversified. Nevertheless, the

fundamental conflict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media, which was formed by ideological confrontation during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continues without any changes in the system. This is because the system for resolving conflicts and developing relations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media is insufficient.

Under this perception, the government has sought ways to develop military and media relations in line with the changing times and the changing media environment in national security-related issues.

key words: Military and media, right to know, freedom of speech, ideological confrontation, national security

한국의 해상교통로(SLOC)의 안전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Safety Improvement Options of the Korea's
Sea Lanes of Communication(SLOC)

박상증 *

- I. 서론
- II. 해상교통로의 중요성
- III. 해상교통로에 대한 상황평가
- IV.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원,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교수(nicegift701@kndu.ac.kr)

논문요약

이 연구는 해양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청해부대를 파병한 이래 현재에도 해상교통로 상의 테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에 따른 미중갈등의 고조로 해양수송을 통한 전시 작전지속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의 해양수송량은 국가 전체 교역량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해상교통로는 한일, 동남아, 북미주, 중동, 유럽, 호주 등 6개이다. 이 중에서 동남아항로와 중동항로는 유류, 철광 등의 수입자원의 절반 이상의 수송에 이용되고 있으나 남지나 해역, 말라카 해역, 호르무즈 해역 일대에 해상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해상교통로 안전활동은 국제조약기구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이익이 상충될 경우에는 자국의 해군력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드론, 로봇 등 4차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해양안전 강화방안도 활성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해양 안보환경에서 한국의 해상교통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군비전2045’와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해상교통로 안전에 대한 규범적 효력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확대하며, 국내적인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주제어 : 해상교통로, 4차 산업혁명, 해군비전2045, 해양레짐

I.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국으로서 수출입 물량의 약 99%를 해상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해상을 통한 세계교역량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뿐만 아니라 에너지, 곡물, 자동차 등의 수출입 물량도 대부분 해상을 통해 운송하고 있다. 해양은 유사시 국가생존에 필요한 식량, 에너지, 그 밖에 중요자원과 필요물자를 수송하는 중요한 보고이다. 전 세계 해상운송체계는 116개의 해협과 운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46,000척의 선박과 4,000여개의 항구로 이루어져 있다.¹⁾ 세계 원유무역의 2/3가 해상교통로를 통해 수송되며 액화천연가스(LNG), 기타 에너지 자원도 대부분 해상을 통해 수송되고 있다.

1994년 유엔해양법 조약이 발효된 이래 국제사회는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유엔해양법에 따라 자국의 이익확보를 위해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을 확장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동북아 국가들은 반도, 분쟁도서, 군도, 전략적 해협과 해로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국가이익을 위한 잠재적인 갈등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남북한의 서해상 해상경계문제, 한일간의 독도문제, 중일간의 동지나해 해상경계문제, 러일간의 북방영도 남쿠릴열도 자원문제, 대만해협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분쟁 등 분쟁의 불씨가 상존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해상테러, 해적행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해적과 해상강도들의 무기체계도 상당한 수준으로 해상교통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해상에 은거지를 두고 선박이나 항구를 공격하는 해상테러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협 등에서 출몰하고 있는 해적과 해상강도로 인해 해상운송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해양국가나 해양을 이용하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가 절실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2009년 3월에 청해부대를 파견하여 국제사회의 해적

1) Iran Storey, "Securing Southeast Asia's Sea Lanes: A Work in Progress", *ASIA POLICY*, NUMBER 6 (July, 2008), p. 1; Duostech, duos technologies, inc, "MARITIME AND PORT SECURITY WHITE PAPER", 2008. 11. 12

소탕과 해상안보에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청해부대는 아덴만 여명작전을 포함하여 수차례의 해적활동에 대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세계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공지능, 무인체계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해양교통로의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해상교통로는 우리나라 수출입 운송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상교통로의 의미와 위협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해상교통로의 중요성

해상교통로(Sea Lanes of Communications, SLOC)는 군사적·상업적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군사적 측면의 해상교통로는 “작전부대와 작전기지를 연결하여 그 노선을 따라 보급품과 증원군이 이동하는 해상의 통로”²⁾로 병참선, 군수선 등을 의미한다. 상업적 측면의 해상교통로는 “해상에서 인원과 물자를 수송하는데 필요한 수로계통과 시설”³⁾을 의미한다. 오늘날 해상교통로는 전시 보다 평시 경제적 중요성에 의해 주목받고 있다. 어떤 국가도 해상으로 공급되는 물자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이 곤란하기 때문에 해상교통로에 대한 국가간 상호의존도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전시 해양교통로는 긴요하다. 전 세계에 수많은 동맹국이나 군사기지를 가진 미국 등 초강대국조차도 해외의 군사기지나 해상작전부대를 지원하는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다.⁴⁾

1. 지정학적 가치

우리나라는 식량, 에너지 등 주요 자원을 해양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는 우리나라의 사활적 이익이다. 만약 가

2) 군사영어편찬위원회(편), 「군사영어사전」(서울: 병학사, 1980), p. 476.

3) 군사영어편찬위원회(편), 위의 책, p. 756.

4) 김달중(편), 「한국과 해로안보」(서울: 법문사, 1988), p. 148.

상 적국에 의해 한국의 중요한 해상교통로가 차단될 경우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페르시아만에서 일본으로 이르는 긴 항로를 ‘생명선’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의 화물선과 유조선이 이용하는 해상교통로는 대부분 국제분쟁 지역이다.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인도양을 거쳐 말라카해협을 지나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거쳐 부산·울산에 이르는 항로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은 해로이다. 동남아 해역은 세계에서 해적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⁵⁾ 세계적으로 매년 약 300건의 해적행위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적행위의 발생 건수는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말라카해협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군도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의 상선들도 여러 차례 해적에게 약탈당한 바 있으며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도 해적들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 간의 긴장이 팽배한 남중국해의 센카쿠 열도와 조어도 지역은 한국의 화물선, 상선, 유조선 등의 안전이 위협받는 지역이다. 냉전 당시 이 지역 해상교통로의 안전은 미국이 보장하였다. 미국은 막강한 해군을 통해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을 위해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보장해 왔다. 21세기 들어오면서 미국은 경제적 비용 문제 및 인도-태평양전략과 연계하여 해상교통로의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2. 경제적 가치

오늘날 해상교역은 국제적 경제활동의 신장에 따른 물자와 용역 등의 수송 증대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해양은 식량과 광물자원의 보고(寶庫)로서 중요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⁶⁾ 실제로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釣魚臺)를 들 수 있다. 이 지역은 오키나와

5) 이춘근, “한국 해군력 증강의 논리,” 『Strategy 21』 제4호(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p.64.

6) 항공교통의 눈부신 발전으로 해상교통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물동량의 대량이동에는 아직도 해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석찬, “동아시아 도서분쟁과 독도”, 『국제문제』 3월호(국제문제연구소, 1998), pp. 15-16.

남단과 대만의 북단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일본은 센카쿠 섬에 일장기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⁷⁾ 1980년대 이후 이 지역의 엄청난 석유 매장량이 확인된 이후 중국·일본 간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센카쿠 열도 부근의 석유 매장량은 약 100억 배럴에서 1,000억 배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⁸⁾ 일본의 1일 석유 소비량을 600만 배럴 정도라고 보면, 만약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영토로 확정되면 일본은 향후 30년 이상 쓸 수 있는 석유를 확보하게 된다. 반면에 이 섬이 중국령 조어대(釣魚臺)가 되면 중국 역시 더 이상의 석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유권은 국가 생존 및 번영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양력의 강화와 유지는 필수적인 정책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3. 군사적 가치

해양군사력은 대규모 상륙전력의 건설, 함정 발사 미사일의 개발, 항공모함의 개발, 핵무기의 결합 가능성 등으로 급격하게 신장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해상군사력으로 육상의 군사·경제적 목표물을 해상에서 원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해상교통로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월남전과 이란-이라크전이 장기화되었을 때 해상교통로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는 작전지속능력이 결여되어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또한, 1984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해군이 해상을 봉쇄하자 고립된 아르헨티나가 협상에 나오게 된 사례도 해상교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사례이다.⁹⁾

오늘날 대량살상무기(Warfare Mass Destruction, WMD)의 확산을 방지

7)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에 대해 중국과 일본 측 주장의 잘잘못을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두 나라 모두 자신의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수, “센카쿠(조어도) 분쟁의 국제법적 고찰,” 『해양전략』 제97호(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7), pp. 156~183

8) Kent E Calder, "Fueling the Rising Sun : Asia's Energy Needs and Global Security,"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19-3(Summer, 1998), p.68.

9) 이선호, “해상교통로 방호와 해상세력의 역할,” 『해운한국』 제106호(한국해양문제연구소, 1982), p. 61.

하기 위해 설립된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활동도 대부분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해상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중요한 군사적 가치가 있다.

III. 해상교통로에 대한 상황평가

1. 주요 해상교통로 분석

한국 선박의 주요 항로는 한일, 동남아, 북미주, 중동, 유럽, 호주 등이다.¹⁰⁾ 이 중에서 동남아 항로와 중동 항로는 유류, 철광석 등 수입자원의 절반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중요항로이다. 특히 남지나 해역과 말라카 해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과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 페르시아만은 동남아 항로와 중동 항로의 안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한일 항로는 크게 3개로 구분된다.¹¹⁾ 첫째 한국의 서해안과 남서해안에 위치한 항구로부터 일본에 이르는 해로, 둘째 한국의 동해와 동남해안에 위치한 항구로부터 대한해협이나 쓰시마해협을 통하여 일본에 이르는 해로, 셋째 한국의 동해안 항구로부터 독도 인접해역을 통하여 일본의 서안에 이르는 해로이다. 이들 3개 해상교통로는 단거리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12마일 영해 및 200해리의 경제수역 설정에도 불구하고 대한해협은 한일간의 국제해협으로 한국의 일방적인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한일간의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3해리 영해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¹²⁾

동남아 항로는 제주도 동남방을 통과하여 일본의 유구열도를 지나, 필리핀과 대만 사이의 바시해협(Bashi Strait) 또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대만해협(Taiwan Strait)를 경유하여 남지나해에 이어 동남아 지역에 이르는 항로이다. 동남아 지역은 한국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무

10) 김달중, “한국해로 안전연구”, 「국방학술논총」 제2권(한국국방연구원, 1989), p. 78. 아프리카 항로와 남미항로는 국적선사의 이용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국적선의 운항형태도 적재공간 부분용선 혹은 합작형식으로 운항되고 있어서 주요 항로에서 제외하였다.

11) 정창식, “일본의 해로방위와 한국안보”, 「국방연구」 제29권 1호(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86), p. 74.

12) 김영구, 「현대해양법론」(서울: 아세아사, 1988), p. 76.

역과 해운활동에 중요한 시장이다. 동남아 항로에는 동지나해, 바시해협, 남지나해가 있으며, 이 지역의 국가로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북미주 항로는 비교적 안전한 항로로 한미동맹 관계와 군사협력 차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수출·입 화물의 수송 이외에 전시 미 증원 병력과 군수물자의 수송 측면에서 안보상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중동 항로는 동지나해, 남지나해를 경유하여 인도양과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항로로 4개의 해상 항로¹³⁾가 있으며, 이 중에서 말라카해협을 경유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항로이다. 수마트라와 말레이시아 반도 사이의 약 500마일의 말라카 해협은 통항선박의 밀도가 높고 1973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해로이다. 만약 이 해로가 봉쇄될 경우 롬보크해협이나 호주항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약 3~7일이 더 소요된다. 특히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은 이라크, 이란, 오만 등의 국가이익이 얽혀 있어서 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¹⁴⁾

유럽 항로는 영국 선주를 중심으로 구성된 극동화물동맹(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이 주도하는 지역이다. 유럽 항로의 기점은 부산이며, 주요 기항지는 일본의 동경, 오사카, 요코하마, 코베와 대만의 카오슝(Kaoshiung), 싱가포르, 홍콩, 포트켈랑(Port Kelang) 등이다. 또한 인도양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지중해의 주요항구를 기항하며, 최종적으로 도버해협을 거쳐 서구의 주요항구와 함부르크로 연결된다.

해상교통로의 안전확보는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과 직결된 안보문제이다. 특히 에너지 자원, 제철원료 등은 모든 산업부문의 발전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국방 장비의 생산과 이용을 보장하는 병참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들의 안정적 확보 여부는 국가 경제적 문제를 넘

13) 정창식, 앞의 논문, pp. 74-75.

1. 한국→바시해협→말라카해협→인도양→페르시아만
2. 한국→바시해협→카리마타해협→준다해협→인도양→페르시아만
3. 한국→바시해협→바라바크해협→마가카해협→롬보크해협→인도양→페르시아만
4. 한국→필리핀→만다해협→움바이웨타해협→인도양→페르시아만

14) 김달중, 앞의 책, p. 103.

어서 국가안보문제로 직결된다.

2. 해상교통로의 위협요인

해상교통로의 주요 위협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확장 경쟁, 해적 및 해상테러, 해군력 증강 경쟁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은 도서영유권, 해양경계협정 등으로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곳이다. 현재까지 도서영유권 분쟁지역은 조어도/센카쿠 제도, 독도, 남부 쿠릴 제도 등이다. 이 중에서 조어도/센카쿠 제도는 주변 해역에 석유자원의 매장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유권 분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은 12해리의 영해 인정에 따라 배타적 주권의 적용범위가 좁아졌으나, 1994년 11월에 발효된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인접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 및 제7광구 대륙붕 문제로 EEZ의 경계선을 확정짓지 못하고 "한·일 중간수역"이라는 공해와 비슷한 완충구역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2001년 6월 30일에 발효된 "한·중 어업 협정"에도 불구하고 "잠정조치수역"을 운용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도서영유권과 해양경계 분쟁의 주요 목적은 대부분 해저 석유, 천연가스, 광물자원 및 해양생물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은 에너지 수입국들로서 해양에너지 확보를 위해 언제든지 분쟁 가능성이 큰 국가들이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¹⁵⁾는 1998년부터 해적행위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기관이다. 특히 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에서의 해적행위로 인한 선박 피해는 1998년 이래 15조 달러를 넘어선

15) 국제해사기구는 12번째로 탄생한 유엔전문기구로서 해상에서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를 관장한다. 해양수산부, 「IMO GUIDE BOOK」(서울 : 해양수산부, 2007), p. 1; UN 해사회의에서 1948년 3월 6일 IMCO 설립협약이 채택되어 1959년 1월 6일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가 설립되었으며, 1982년 5월 2일 국제해사기구(IMO)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은 1962년 4월 10일 가입하였다. IMO의 설립 목적은 "Safe, secure and efficient shipping on clean oceans"이다. <http://www.imo.org/en/About/Pages/Default.aspx>(검색일 : 2020. 8. 12)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적들은 화물의 강탈뿐만 아니라 선박 자체의 절도와 인명피해 등도 일으키고 있다. 또한 해적공격으로 인해 선박의 지연도착, 보험료 증가 등도 발생되고 있다. 최근의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해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새로운 해적행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적활동의 범위가 다국적 해군의 항행보호구역을 교묘하게 회피하여, 아덴만 해역에서 소말리아 이남의 인도양까지 확대되고 있다. 둘째, 해적이 사용하는 무기의 성능이 좋아지고 있어서 해적활동이 낮에서 밤으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해적의 약탈목표가 선박과 화물에 국한되지 않고, 선원이나 승객을 납치하여 몸값을 요구하는 것까지 악화되고 있다. 넷째 서아프리카 해역, 특히 나이지리아 연해 해역의 해적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해적의 습격지점이 해안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과 연계하여 대양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형 잠수함, Aegis형 구축함, 대형 상륙함뿐만 아니라 해양에서 운용하는 드론, 로봇 등도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제6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일대일로전략에 따라 대양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걸프전 이후 군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신형함정과 군사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대양 해군력의 복원 및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신 해군교리」에 따라 노후된 공격용 잠수함과 수상함을 대체하고 해상기지와 연안기지의 다기능 항공기를 개발하고, 전투 준비력 현대화를 통한 신속대응군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국제사회의 해상교통로 안전활동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위한 국제활동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국제해사국(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IMB)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IMO는 IMB와 공동으로 선박에 대한 공격과 시도된 공격을 분류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표 1> 해상교통로 안전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현황

구 분	주요 활동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 해상안전에 관한 국제기준 제정 및 감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 • 해적 및 무장강도에 의한 선박의 피해 방지 및 억제 • 선박에 대한 공격과 시도된 공격을 분류하여 정기적으로 보고
국제해사국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B)	•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Council) 산하 기관 • 국제 통상과 해상 운송에의 불법행위 방지 • 현재 해적신고센터(PRC)를 운영 • IMO와 협업으로 선박에 대한 공격과 시도된 공격을 정기적으로 보고
해상안전위원회 (Maritime Security Council, MSC)	• 14개 국가로 조직 구성 • 해상안전계획을 IMO 총회에 제출
해적정보공유센터 (Information Sharing Center, ISC)	• 아시아 지역 16개 회원국간의 국제기구 • 아시아지역해적방지협력협정(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Anti-Piracy in Asia, ReCAAP)에 따라 2006년 9월부터 운영
말라카해협회의 (Malacca Security Council)	• 말라카해협의 안전, 보안 및 해양환경 보호 증진을 위한 ‘해협 연안국과 이용국간 회의’ • 매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3개 연안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 이용국들이 참석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상호협력방안 논의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ISPS)	•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해상테러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테러로부터 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조약 •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

추가적인 수상교통로 안전을 위한 국제활동으로는, 아시아지역해적방지 협력협정(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Anti-Piracy in Asia, ReC AAP), 항해안전에 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SUA), 선박 경보전파 시스템, 해양전자고속도로(Maritime Electronic Highway, MEH) 등이 있다.

IV.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

세계는 해양안보 분야에서도 4차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인구절벽시대의 도래에 따라 인명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면서 사이버, 인공지능, 무인체계 등 초연결·초지능 기술 분야의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¹⁶⁾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규범적 효력과 협력적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해상테러와 해적퇴치에 대비할 수 있는 규범의 정비와 체제 구축을 추진하여야 한다. 세계적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적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포괄적이며 상호협력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간 협력에 추가하여 민간협력과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규범적 효력 강화

해적테러 및 해적발생이 증대되면서 19세기부터 국제사회의 규범적 대응체계도 발전되어 왔다. 각 국가들은 해적행위를 국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해적을 체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관습법을 발전시켜 왔다.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모든 국가가 해적행위를 통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국제적 재판관할권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해상 해적행위는 불법이며, 모든 국가는 공해상의 해적행위에 대해 체포하고 기소할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해적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재발을 억제하기

16)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해군비전 2045 미래 해양전 개념, 2019.12월

위해서는 국가 간의 해적행위에 대한 수사 정보의 교환 및 공조는 물론 관련자 처벌 수준을 표준화하는 등 지역 차원의 법 집행의 협력(Law Enforcement Cooperation)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위협에 대한 평가와 감소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선박의 형태에 따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다르다. 선박 운항의 형태, 선박의 종류, 이용하는 해협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국제해협이나 주요항구 지역에서의 테러 공격은 단지 특정지역 뿐만 아니라 국제 차원에서 커다란 경제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간 선박회사나 운송회사와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상호간 협력적인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합의된 기준(Guideline)을 포함하여, 납치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협에 인접해 있는 소화기나 경량무기의 확산을 통제할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국제적 협력 강화

해상에서의 국제적인 분쟁과 해상테러리즘과 같은 불법적인 폭력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양 사용 특성상 어느 특정 국가들만의 노력에 의해서만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상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적문제 심각성을 공동 인식하고,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해적 위험지역 순찰 감시강화 및 공동훈련을 강화하며,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해적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해적행위 방지 국제협력에의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안보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해적문제를 지역안정에 영향 미치는 대표적 국제범죄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아세안지역포럼(ASEAN¹⁷⁾ Regional Forum, ARF) 등 다자안보대화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또한 상그릴라 대화와 같은 협의체를 활용하여 대화의 의제로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방안과 해적퇴치에 대한 다자적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적행위나 해상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차원의 연합해상보안군을 창설도 가능하다. 지역국가들간의 연합해상보안군을 설치하여 운영하면, 군사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현시만으로도 해적과 테러리스트들에게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심리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3국은

17)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리적 인접성, 해양에 대한 공동 이익 등에 따라 해상테러 방지를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의 구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동북아 지역협력을 위한 해양레짐 협력체 형성과 이를 위한 한·중·일·러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동북아 국가들이 역내 정치, 안보, 경제 관련 영향력 확대의 민감한 견제 상황을 벗어나, 동북아 전체의 기술적, 기능적 협력관계를 확대할 수 있다면 동북아 지역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4국 정상이 협의하여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하고, 기능적 협력체를 구성하여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3. 국내적 방안 강구

국내적으로 해적, 해상강도, 해상테러 등에 대처하고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노력도 확대되어야 한다. 먼저, 최근에 시행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집행을 위한 대테러 전담기구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고, 국제적으로 유엔의 대테러 관련요구에 부응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둘째, 해상교통로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해적 및 해상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해 해양안전종합정보망(GICOMS)을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해상교통 상황을 종합관리하고 국제항로의 우리 선박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광역초계기와 남중국해를 포함하여 말라카해협까지 작전수행이 가능한 함정 등을 추가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광역 경비체계의 보강이다. EEZ에 대한 해경의 경비임무를 해군 함정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해군의 작전구역을 EEZ까지 조정하여 감시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해상대테러부대의 전력을 해상드론, 해상로봇 등으로 보강하고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검증된 것처럼 해상테러리즘의 진압을 위한 마지막 선택은 강경진압이다. 해상 대테러부대는 날로 지능화되고 첨단장비로 무장화된 해적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해외 전지훈련 등을 통하여 선진전술 습득과 전문성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 또한 유사시 원거리 해역까지 전개 가능한 공군 수송기를 비상대기 전력으로 운용하

여야 하며, 테러발생 가능성이 높은 선박에 대한 관속훈련을 통해 선박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들 선박을 대상으로 대테러 모의진압훈련도 수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양 해군력 증강을 통해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9년 4월 소말리아에 청해부대 파병 이후 2010년 제7기동함대를 창설하는 등 해양안보를 위해 대양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해군에서 발표한 ‘해군비전2045’¹⁸⁾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지원과 연계하여 아덴만, 호르무즈, 말라카 해역 등에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 무인체계, 경항모 도입 등도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한국의 해상교통로의 중요성과 현황, 위협요인과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12대 강국으로서 2009년 국제적 위상 제고 차원에서 소말리아에 청해부대를 파병하여 소말리아 해적소탕 및 해상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해양은 미래에도 원유, 곡물, 공산품 등의 해상교역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또한 해상 자원 및 경계에 따른 분쟁, 해적과 해상테러, 주변 국가들의 해군력 증강 등 분쟁발생 요인들이 증가되고 있어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도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의 군사적 활용, 인구절벽에 따른 생명중시 경향 등과 연계하여 해양안보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증진하고 국내외 규범의 준수와 발전 등을 통해 국제공조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러 4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해상협력레짐을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과 요인들에 대한 지역국가 간의 정보교환과 대화채널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필요하다면,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를 통해 해양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체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테러방지법의 조기정착과

18) 해군창설 100주년을 행한 새로운 도약, 해군비전2045, 해군본부, 2020.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는 어느 특정 국가만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간 해양문제에 대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방안과 규범체계를 통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논문투고일 : 2020.08.18]

[논문심사일 : 2020.08.26]

[논문수정일 : 2020.08.31]

[게재확정일 : 2020.09.14]

참고문헌

1.저서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테러방지법), 2020.
- 군사영어편찬위원회(편), 「군사영어사전」(서울: 병학사, 1980).
- 김달중(편), 「한국과 해로안보」(서울: 법문사, 1988).
- 김영구, 「현대해양법론」(서울: 아세아사, 1988).
- 문정인, 부승찬, 걸프에서 동북아 해상교통로는 안전한가, 오름, 2013.
- 안승희, '해군비전 2045' 구현 '국방개혁2.0 해군추진계획' : 창설 100주년 맞는 2045년에 '대양해군'으로 우뚝, 국방저널 2019년 한국무역협회(편), 「무역연감 2002」(서울: 한국무역협회, 2002).
- 해양수산부(편), 「2002년 해양수산통계연보」(서울: 해양수산부, 2002).
- 해군본부, '해군창설 100주년을 행한 새로운 도약, 해군비전2045', 2020.
-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해군비전 2045, 미래 해양전 개념', 2019.

2.논문

- 김달중, “한국해로안전연구”, 「국방학술논총」 제2권(한국국방연구원, 1989).
- 김석찬, “동아시아 도서분쟁과 독도”, 「국제문제」 3월호(국제문제연구소, 1998).
- 문병옥, “선박통제를 통한 해상교통로 확보방안 연구”, (숭실대 통일정책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이선호, “해상교통로 방호와 해상세력의 역할”, 「해운한국」 제106호(한국해양문제연구소, 1982).
- 정대율,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IMO 및 우리정부의 노력”(서울: 해양수산연구원, 2006).
- 정재환, “한국의 해상교통로 안전확보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2).

- 정창식, “일본의 해로방위와 한국안보”, 「국방연구」 제29권 1호(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86).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와 광역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2)」 (서울, 2005).
- DONNA J.NINCIC, "Maritime Piracy: Implications for Maritime Energy Security", *Journal of Energy Security*, 2009.2.19.
- Duostech, duos technologies, inc, "*MARITIME AND PORT SECURITY WHITE PAPER*", 2008.11.12
- IMO, MSC. 4 / Circ. 98, 13 April 2007 / Circ. 115, 10 July 2008 / Circ. 133, 19 March 2009.
- Iran Storey, "Securing Southeast Asia's Sea Lanes: A Work in Progress", *ASIA POLICY*, NUMBER 6, July 2008.
- Peter Chalk, "The Maritime Dimension of International Security", *R AND PROJECT AIR FORCE*, 2008.
- Sam Bateman, Catherine Zara Raymond, Joshua Ho, "Safety and Security in the Malacca and Singapore Straits, Institute of Defence and Strategic Studies Policy Paper", 2006.
- US Department of Energy,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World Oil Transit Chokepoints*, November 2005.

Abstact

A Study on Safety Improvement Options of the Korea's Sea Lanes of Communication(SLOC)

Park, SangJung Ph.D.

Guest Researcher, Security and Strategy Institute
(Professo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safety Improvement Options of Korea's Sea Lanes of Communication (SLOC) with changes in the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Since the oversea deployment of Cheonghae unit (ROK Navy unit) 2009, Korea has been exposed to maritime terrorism threats through SLOCs and also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wartime operational sustainabilities through SLOCs due to the escalation of conflict between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U.S.) and 'One belt, One road strate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Korea's maritime transportation volume is up to three-quarters of the country's total trade. There are six major SLOCs: between Korea and Japan, to Southeast Asia, to North America, to the Middle East, to the Europe and to Australia. Among the six SLOCs, Southeast Asian and Middle East routes are used for transportation more than half of the imported resources such as oil and iron ore even though maritime threats exist in Nami-na, Malacca, and Hormuz maritime areas on the both SLOC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ctively engaged in safety activities of SLOCs through international treaty and organizations. however in

the event of conflicting national interests, the country's naval power plays a decisive role. Measures to strengthen the safety of SLOCs using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cluding drones and robots, are also being launched.

To improve the safety for the Korea's SLOCs in the rapidly changing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throughout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the normative effect on safety of SLOCs, exp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ise domestic measures in connection with the 'ROK Navy Vision 2045'

Key words: Sea Lanes of Communication(SLOC),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OK Navy vision 2045, Maritime Regime

저자소개(가나다순)

김승택

현재 합참의장 자문관으로 근무하면서 합동 및 연합연습/훈련간에는 선임 관찰관으로 활동 중이다. 국방부 정책실에서 다년간 근무하였으며 미국정책 과장을 역임하였다. 연구 관심분야는 한미 동맹관계, 전략권 전환 등이며 군사외교 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문근형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고려대 정책대학원 국제관계 석사학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국제정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석사논문은 “탈냉전이후 중국의 동북아 대외정책 연구”, 박사논문은 “국제군인스포츠 위원회(CISM) 활동과 군사적 역할 분석”이다. 재향군인회 학술지 제1호에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연구”, 제2호에 “북한 정세 급변시 주변국 개입가능성 연구”를 제 3호에는 “한국전 참전 ‘추모의 벽’ 건립 추진 경과 소고”를 기고하였다.

박상중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교수로 국가안보, 정책전략, 리더십개발 등을 강의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정치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과 부천대학교에서 국방외교, 협력안보, 리더십개발, 조직관리 등의 강의를 하였으며, 등재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3회 수상하였다. 현재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조사위원회 제도개선분과 자문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회 정책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방호엽

재향군인회 안보교수로 활동 중이며, 경남대학원에서 정치외교 박사를 취득하였다. 국방대학교 전문연구원 및 국방TV고정패널로 활동하였고, 미래의 한반도 전쟁양상에 필요한 “비살상무기의 군사적 효용성분석 및 방향구상”에 대한 합참 실무간부 세미나와 합동군사연구지를 통해 미래 4세대 전쟁양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중국 산둥대 아태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2017년부터 동북아 평화유지에 기여하며 한반도 통일에 노력하고 있다.

윤원식

국방부·합참에서 언론 공보 관련 실무자와 과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재)GSCC센터장 및 Y미디어&컨설팅에서 4차산업혁명 및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해 강연 등을 하고 있다, 연세대 신문방송학과에서 석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외교안보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은 “국가안보 위기사 군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연구윤리규정

□ 목적

향균학술지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함.

□ 적용대상

향균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투고논문 및 투고자에 대하여 적용.

□ 연구자의 윤리의무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향균학술지에 투고를 원하는 연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함.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함.
-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함. 연구결과를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연구자는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연구원에 보고하여야 함.

□ 부정행위 방지목적

이 규정은 향균학술지에 게재 및 게재신청 된 논문의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그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

□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

연구개발 과제에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결과에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함.

-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
-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자신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명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당 원구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행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음.
-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의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함.
-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기타 연구 부정행위의 기준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규정에 준하여 적용.

□ 심사주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담당함.

□ 절차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 절차는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연구 부정행위의 판정 절차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외부의 제보나 심사자의 문제제기 등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
-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편집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함.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됨.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편집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함.
- 연구 부정행위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제재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혹은 복수의 제재)를 내릴 수 있음.

- 본 학술지에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사실 공시 및 학술지 온라인판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 부정행위 확정 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부정행위 및 게재취소 사실 공시

□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연구 윤리규정 위반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 논문의 집필자가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 7일 이내에 새로운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편집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됨.

□ 재심위원회 구성

- 재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 위원장이 임명한 위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자격은 편집위원회의 구성 자격요건과 동일함.
- 재심위원은 최초심의에 참석하지 않은 새로운 인원이어야 함.

□ 제보자에 대한 비밀 보호 및 공지의무

-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공지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윤리소위는 이를 성실히 보장하여야 함.

논문투고 및 심사/집필요령

□ 논문심사

1. 심사절차

- 가. E-mail 접수(korvass0201@naver.com) 또는
우편접수(우)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6층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구축 후에는 시스템 활용
- 나. 논문 심사(3인) 의뢰 / 심사(2주)
* 제목 또는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접수 취소.
- 다. 논문심사 결과 접수 및 판정
- 라. 심사결과 투고자 통보
- 바. 수정논문은 1주 이내에 수정 제출 / 접수

2. 심사기준

- 가. 내용의 적절성 : 논문의 주제가 ① 외교 ② 국방 및 안보 ③ 통일정책
④ 향군 제도개선 분야 등에 관련된 주제
- 나. 내용의 창의성 : 논문의 내용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
롭고 참신한 것
- 다. 전개의 논리성 :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고 명료
- 라. 향군 발전 및 학문적 기여도 : 논문의 내용은 향군의 제도개선 등에
기여하거나 학문적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어야 함
- 마. 형식의 적절성 : 논문양식을 준수
- 바. 연구 방법의 적절성 : 논문은 연구주제에 대한 문제제기, 연구방법,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등에 타당성이 있어야 함.

□ 논문투고

1. 논문 투고자는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 및 그에 준하는 경력 및 전문성을 갖춘 인원으로 한다. 단 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는 지도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와 공동 연구자로서 투고할 수 있다.
2. 논문 투고는 ‘원고집필요령’을 따라야 하며, 논문주제는 외교, 국방/안보, 통일정책, 향군 제도개선 분야로 한정한다.
3. 투고논문 접수는 이 메일 혹은 출력물이 연구원에 도달한 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4. 투고원고는 국문요약, 핵심단어, 영문초록,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완전한 논문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제출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투고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미발표 논문이어야 하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한다.
6. 투고 논문은 연구원에서 관장하는 소정의 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7.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연구논문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8. 학술지의 발간횟수는 연 2회이며, 발간예정일은 4월 8일과 10월 8일 재향군인의 날로 하며 논문접수 마감일은 발행일 45일 전까지인 2월 25일과 8월 25일까지 수시접수 한다.

□ 확정 및 인쇄

1. 편집위원회에서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1주일 이내의 저자 교정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인쇄용 원고를 송부받아 취합한다. 저자 논문은 편집 간사의 ‘인쇄 형식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출간한다.
2.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저자의 교정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인쇄용 원고를 송부받아 취합한다. 게재논문은 편집 간사의 ‘인쇄 형식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출간한다.

□ 원고집필요령

1. 원고의 분량 : 원고의 분량은 각주, 표, 그림이 포함된 본문과 참고문헌을 합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A4 약 20매)로 한다. 최대 150매(A4 약 25매)를 넘지 않는다.

2. 용지여백 기준

가. 용지여백(A4 기준) :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46mm	46mm	42.5mm	42.5mm	12.5mm	12.5mm	0mm

나. 본문 서체 : 글꼴 : 신명조 / 글자크기 12point(대제목 14point진하게, 중제목 12point 진하게) / 장평 100% / 자간 0% / 본문 글자크기 10.5point, 줄간격 160% / 첫줄 들여쓰기 10point

다. 각주 서체 : 신명조 / 글자크기 9point

3.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 표기

가. 인용

- 1) 직접 인용은 “……”로 표시한다.
- 2)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문의 끝 부분 상단에 주 번호를 달고 그 인용원을 각주에서 밝혀 준다.
- 3) 재인용의 경우에는 누구의 어느 책에서 재인용한 것인지 그 인용원을 그대로 밝혀야 한다.

나. 각주 작성요령

- 1) 저서 및 역서(편저서, 학술지, 월간지 등) : 이중꺼쇠 『 』로 표기하고, 출판도시, 출판사, 출판년도 등 출판정보는 괄호 안에 표기하고, 그 뒤에 페이지를 표기한다. 영문의 경우 first 및 second name(이니셜), last name 순서로 표기하고, 책 제목은 이탤릭으로 표기하며, 출판도시, 출판사, 출판년도 등 출판정보는 괄호 안에 표기하고, 그 뒤에 페이지를 표기한다.

가) 박경서, 『국제정치경제론』(서울 : 법문사, 1985), p. 120.

나)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1986), p. 12.

- 다) Baylis, John. 박창희(역). 『현대전략론』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pp. 156-157.
- 2) 논문 : 학술지 게재 논문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가) 안병준, “민족주의와 한반도,” 『국제정치논총』 제23집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pp. 29-33.
- 나) Richard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7, No1(1965), p. 627.
- 3) 학위논문 : 한글 학위 게재 논문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가) 홍길동, “조선시대 병영 연구”, 국방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pp. 25-26.
- 4) 세미나 및 학회 발표논문
- 김창수.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정책.” 『아태지역 국가리더십 변화와 안보 도전: 유럽과 아시아의 시각』 안보문제연구소 제3회 국제공동학술회의(2013. 4. 11), p. 71.
- 5)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 : 출판정보 등이 생략된 저자명을 표기한 후 인용페이지를 표기한다. 서양권 저자 이름은 last name 만 표기한다. 바로 위의 인용한 자료를 잇달아 인용할 경우에는 ‘위의 책, p. 2.’, ‘ibid., p. 2.’로 표기한다
- 가) 황병무(2011), p. 300.
- 나) Nye(2013), p. 27. ibid., p. 90.
- 6) 인터넷 자료 : 웹주소의 검색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가) <http://www.technorealism.org>(검색일 : 2019.2.12)
- 나) 국방부(<http://www.MND.go.kr>), “국방의 현주소”(검색일 : 2019.2.12)
- 7) 일간지 및 주간지의 기사와 칼럼
- 가) 황병무,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00일보』, 2003. 4. 19.
- 나) “안보의 현주소” 『연합뉴스』, 2003. 4. 19.
- 다. 참고문헌 작성요령
- 1) 한글문헌, 동양문헌, 영어, 기타 서양문헌 순으로 배치한다. 한글 및 동양문헌은 저자의 성을 가,나,다 순으로 서양문헌은 저자의 성(참고문헌에는 last name을 맨앞에 표기하고 first 및 second name(이

니셜)을 표기)를 알파벳 순으로 표기한다. 이때 출판도시, 출판사, 출판년도 등 출판정보는 각주에서와는 달리 괄호 없이 표기한다.

2)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기재하며,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기타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각 문헌별로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4) 참고문헌의 기본 양식은 각주 작성요령과 동일하다. 다만 마지막의 쪽수는 제외한다.

3. 기타 참고사항

가. 본문 속의 제목들(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등)에 사용하는 기호 체계는 I., 1., 가., 1), 가), (1), (가), ①, ㉠ 등의 순으로 한다.

나. 표 및 그림에는 제목을 붙여야 하고 <표 1>,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 바로 아래에 제시한다.

예) 출처: 한국은행, 「통계연감」(1985), pp.1-2.

다. 본문 속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저자의 소속 및 직위는 저자명 우측 상단에 별표(*)각주로 기재하되, 공저의 경우에는 대표저자를 *, 제2공저자를 **, 제3공저자를***...순으로 표기한다. 필요한 경우, 대표 저자의 이름을 별표 각주에 다시 명기할 수 있다.

마. 논문 원고 순서는 ① 논문의 한글 제목 및 영어 제목, ② 저자 의 한글 성명 및 영문 성명, ③ 원고지 5매 이내의 한글요약문과 300단어(words) 내외의 영문 요약문, ④ 3~5개의 한글 및 영문 핵심어(Key Words), ⑤ 참고문헌, ⑥ 영문초록 순으로 작성한다. 논문게제시에는 별도로 200자 내외의 한글 ‘저자 소개문’(소속 및 지위, 주요 연구관련 경력, 최종학위 수여 기관 및 최종학위 논문제목, 전공분야, 저서 및 대표 논문들 포함)을 포함하여야 한다.

투고 환영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에서는 매년 학술지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는 재향군인회와 안보에 관련한 제반 문제를 이론적·실증적으로 연구자료를 수록하기 위한 학술지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등재학술(후보)지 등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군회원과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자들, 관련 업무 전문가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고를 바랍니다.

1. 다른 곳에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 글이어서는 안되며, 순수한 창작 논문이 아닌 경우에는(연구프로젝트의 요약이나 재정리 등) 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2. 기고된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는 기고된 원고의 반환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보내실 곳 : E-mail 접수(korvass0201@naver.com) 또는
우편 : 우)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기타 사항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02-499-02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